

수능완성

사회탐구영역 정치와 법

CONTENTS

테마	제목	페이지
01	정치와 법	4
02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10
03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15
04	정부 형태	21
05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27
06	지방 자치	34
07	선거와 선거 제도	37
08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44
09	민법의 기초	50
10	재산 관계와 법	54
11	가족 관계와 법	61
12	형법의 이해	68
13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75
14	근로자의 권리	82
15	국제 관계와 국제법	88
16	국제 문제와 국제기구	93
	실전 모의고사 1회	100
	실전 모의고사 2회	106
	실전 모의고사 3회	112
	실전 모의고사 4회	117
	실전 모의고사 5회	123

1 정치의 의미와 기능

(1) 정치의 의미

- ① 좁은 의미: 국가만의 고유한 현상으로 정치권력의 획득·유지·행사와 관련된 활동
- ② 넓은 의미: 개인이나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활동

(2) 정치의 기능

- ① 사회 질서 유지: 사회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행위 규범을 정립하고 반사회적 행위를 통제함.
- ② 이해관계의 조정과 해결: 개인이나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함.
- ③ 사회 발전 도모: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을 개선해 나감.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고 구성원들의 협력과 동참을 유도함.

2 법의 의미와 이념

(1) 법의 의미: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 규범으로, 위반 시 국가가 제재할 수 있음.

(2) 법의 이념

- ① 정의: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

평균적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적·형식적 평등 추구 •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함.
배분적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실질적 평등 추구 • 개인의 능력과 상황, 필요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함.

- ② 합목적성: 법이 해당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
- ③ 법적 안정성: 법을 통해 개인의 사회생활이 안정적으로 보호되는 것

3 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

(1) 민주주의의 의미: 시민 다수의 뜻에 따라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 형태,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토대로 인간의 존엄성 보장

(2)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①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

- 형태: 모든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 정치
- 한계: 여성, 노예, 외국인 등을 시민에서 배제한 제한적 민주 정치

② 시민 혁명과 근대 민주주의

- 시민 혁명의 의미: 시민 계급을 중심으로 신분제에 근거한 봉건 제도의 모순을 극복하고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획득하려 한 정치적·사회적 대변혁
-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 계몽사상, 천부 인권 사상, 사회 계약설 등의 확산
- 대표적 시민 혁명: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 혁명, 프랑스 혁명
- 시민 혁명의 성과: 국민 주권과 권력 분립 등에 기반을 둔 대의제 성립, 자유와 평등의 이념 확산, 자유로운 경제 활동 보장에 따른 자본주의 발전의 기반 형성 → 근대 민주주의 등장
- 시민 혁명의 한계: 재산, 인종, 성별 등에 따른 참정권 제한 및 차등 부여

- ③ 시민 혁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미국 흑인들의 참정권 획득 및 인종 차별 철폐 운동, 전 세계 각국 여성들의 참정권 획득을 위한 노력 등
- ④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 계약설

구분	자연 상태	이상적인 정치 형태
홉스	자기 보존 욕구, 경쟁심, 명예에 대한 갈망 등과 같은 인간의 본성으로 인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 국민에 대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통치자에 의한 전제 정치(군주 주권)
로크	이성에 의해 평화가 유지되나 자연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다른 사람이 침해할 위험에 놓여 있는 불안정한 상태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장하려는 목적에 맞게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에 의한 간접 민주 정치(국민 주권)
루소	초기에는 인간의 순수하고 선한 본성에 따라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였으나 사적 소유로 인해 불평등해짐.	시민 모두가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한 일반 의지에 따라 공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 정치(국민 주권)

⑤ 현대 민주주의

- 보통 선거 제도에 기반을 둔 대의제를 실시함.
- 직접 민주제 요소(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 도입

4 법치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

(1) 법치주의의 의미: '사람[人]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

- ① 국가 권력 기관의 구성과 정치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법에 근거해야 함.
- ②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에도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근거해야 함.

(2) 형식적 법치주의

- ① 의미: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된 명확한 법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져야 함.
- ② 특징: 법의 목적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함.
- ③ 한계: 통치가 합법적이지만 하면 독재 정치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음.

(3) 실질적 법치주의

- ① 의미: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되고 목적과 내용도 인간의 존엄성, 정의에 부합하는 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
- ② 특징: 통치의 합법성과 함께 정당성도 강조함.
- ③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 위헌 법률 심사제
- ④ 오늘날의 법치주의: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제정된 법에 의해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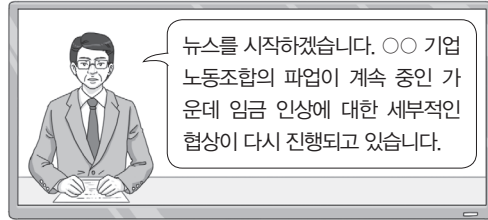
5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 (1)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호 보완: 민주주의에서 법치주의는 순기능을 발휘하고,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
- (2)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긴장: 변화의 역동성을 내재한 민주주의와 안정을 추구하는 법치주의의 속성 차이에 기인함.
- (3) 앞으로의 과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긴장 해소와 조화로운 공존,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

01

▶ 23063-0001

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갑의 관점은 소수의 통치 엘리트에 의해서만 정치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② 을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나는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 ③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용이하다.
- ④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에 비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 ⑤ 갑, 을의 관점은 모두 학교 구성원이 모여 교칙 변경을 논의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02

▶ 23063-0002

다음 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치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들 간의 갈등 관계는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當事者)들 사이의 이야기를 통해 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날카롭게 대립하여 치열한 투쟁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세계에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려면 그러한 대립·투쟁 관계를 조정하는 작용이 필요하게 된다. 즉 인간의 생활에서는 그 공동생활의 범위를 점점 확대해 갈 때, 그 공동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대립을 적절하게 조정·처리해 주어야 할 필요가 한층 더 증대된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공동생활에 필요한 많은 일을 그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수행해 갈 것이 요청된다. 그런데 이러한 일 중에는 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서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성질의 대규모적인 것과 널리 공공성을 갖는 것이 적지 않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다름 아닌 '정치'라고 불리는 것이다.

- ① 사회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통제한다.
- ② 특정 집단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목표를 설정한다.
- ③ 국가가 가지는 강제력을 제한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한다.
- ④ 이해관계의 갈등 조정과 해결을 통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 ⑤ 사회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03

▶ 23063-0003

그림은 법의 이념에 관한 대화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교사: 법의 이념 중 '정의'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갑: 절대적이고 형식적인 평등을 추구하고,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해요.

을: 상대적이고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고, 능력이나 공헌도, 필요 등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해요.

보기

- ㄱ. 갑은 평균적 정의, 을은 배분적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
- ㄴ. 모든 유권자에게 1인 1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갑이 설명하는 정의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 ㄷ. 시각 장애 수험생에게 일반 수험생보다 시험 시간을 일정 비율 더 부여하는 것은 을이 설명하는 정의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 ㄹ. 갑은 을과 달리 정의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04

▶ 23063-0004

A~C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근대 민주 정치, 현대 민주 정치 중 하나임.)

- A에서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모든 시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시민은 보통 선거 제도를 기반으로 한 대표자 선출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였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일부 도입하게 되었다.
- B에서는 시민이 민회에 모여서 자유로운 토론을 하고 국가의 주요 의제에 대한 의결을 하였다. 시민은 국가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정치에 참여하였다.
- C에서는 시민 계급을 중심으로 신분제에 근거한 봉건 제도의 모순을 극복하고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획득하려고 하였으며, 시민이 선거를 통해 대의 기구를 구성하였다.

보기

- ㄱ. A에서는 공정한 공직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추천제와 운번제를 실시하였다.
- ㄴ. B에서는 노예,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성인 남녀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 ㄷ. C에서는 입헌주의 원리에 근거한 민주주의를 추구하였다.
- ㄹ. A, C는 B와 달리 대의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5

▶ 23063-0005

근대 사회 계약론자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자연 상태는 이성에 의해 평화가 유지되나 자연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다른 사람이 침해할 위험에 놓여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장하려는 목적에 맞게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에 의한 간접 민주 정치가 이상적인 정치 형태이다.
 을: 자연 상태는 자기 보존 욕구나 경쟁심, 명예에 대한 갈망 등과 같은 인간의 본성으로 인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이다.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 인간에 대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통치자에 의한 전제 정치가 이상적인 정치 형태이다.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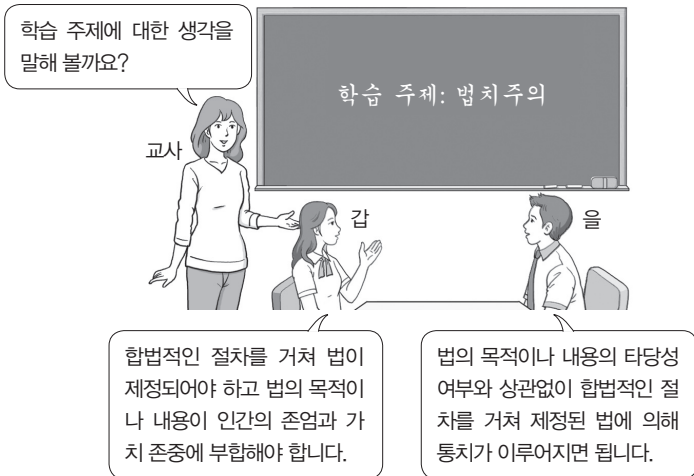
- ㄱ. 갑은 일반 의지에 따라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고 보았다.
- ㄴ. 을은 사회 계약을 통하여 통치자에게 주권을 양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 ㄷ. 을은 갑과 달리 국가 권력의 분립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 ㄹ. 갑, 을은 모두 국가를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6

▶ 23063-0006

그림에 나타난 법치주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갑의 관점은 위헌 법률 심사제 도입을 옹호한다.
- ② 을의 관점은 법의 실질적 정당성을 중시한다.
- ③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독재 체제를 옹호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 ④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기본권 제한 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의 관점은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 통치를 수용한다.

07

▶ 23063-000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A는 정치권력의 획득·유지·행사와 관련된 국가 고유의 활동만을 정치로 보며, B는 개인이나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활동을 정치로 본다. 그럼 ㉠국회에서 국회 의원이 법 개정에 참여하는 활동과 ㉡학급에서 학생들이 규칙을 정하는 데 참여하는 활동을 정치로 볼 수 있을까? 누가 어떻게 참여하고 활동하는지에 따라 A와 B는 정치를 다르게 규정할 수도 있다.

- ① A는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해당한다.
- ② B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 ③ A는 B와 달리 ㉠을 정치로 본다.
- ④ B는 A와 달리 소수 엘리트에 의한 통치 활동을 정치로 본다.
- ⑤ A, B는 모두 ㉡을 정치로 본다.

08

▶ 23063-0008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제시된 독일의 수권법(授權法) 일부 조항을 법치주의와 관련지어 분석해 보세요.

제1조 독일 제국의 법률은 제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는 외에, 제국 정부에 의해서도 의결될 수 있다.

제2조 제국 정부가 의결하는 법률에는 제국 헌법과는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

- ①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 ② 위헌 법률 심사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③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국가 권력의 행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 ④ 법의 목적과 내용이 헌법의 이념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이라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09

▶ 23063-0009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질문에 옳게 응답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의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치주의가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통치가 법률의 형식에 부합하면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을 문제 삼지 않게 되었는데, 이를 A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법률의 합법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헌법의 가치 체계에 합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B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럼 A, B를 설명해 볼까요?

갑

A는 법이 통치자의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을

B는 부당한 국가 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합법적이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병

A는 B와 달리 법의 목적과 내용이 실질적 평등에 부합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정

A, B는 모두 국가 권력 행사의 법적 근거를 중시합니다.

- ① 갑, 을
- ② 갑, 정
- ③ 병, 정
- ④ 갑, 을, 병
- ⑤ 을, 병, 정

10

▶ 23063-0010

다음 글에 나타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함께 발전해 왔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최고 이념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작동하게 된다. 국민 주권과 자유, 평등의 민주주의 이념은 법치주의에 의해 법으로 명시되고, 국민은 법에 의해 민주주의 이념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법치주의는 국가 작용이 헌법과 법률을 통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한편 법치주의가 안정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 ①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일부 제한하면서 사회 질서의 안정을 추구한다.
- ②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의 틀 밖에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 실현을 추구한다.
- ③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가 일치하지 않아 대립이 발생한다.
- ④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 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서 상호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

1 헌법의 의의와 기능

(1) 헌법의 의미와 의의

- ① 헌법의 의미: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법
- ② 헌법 의미의 변천

고유한 의미의 헌법	국가 통치 기관을 조직·구성하고 이들 기관의 권한과 상호 관계 등을 규정한 규범
근대 입헌주의 헌법	고유한 의미의 헌법에서 더 나아가 개인의 자유권을 중심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규범
현대 복지 국가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더 나아가 사회권을 보장하여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 국가의 이념을 추구하는 규범

③ 헌법의 의의

- 한 국가의 법체계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최고법
- 헌법은 모든 법령의 제정 근거이자 법령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됨.
-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이나 국가 권력 작용 등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 민주주의는 입헌주의를 기반으로 함.

(2) 헌법의 기능

- ① 국가 창설의 토대: 국가 성립에 필요한 요소를 규정하여 국가를 창설하기 위한 토대가 됨.
- ② 기본권 보장: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규정을 두어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함.
- ③ 조직 수권: 국가의 통치 조직을 구성하고 각 조직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함.
- ④ 권력 제한: 권력 분립과 권력 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을 제한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함.
- ⑤ 정치 생활 주도: 정치적 의사 결정의 기준이 됨.
- ⑥ 사회 통합 실현: 국민의 합의된 의사로서 다원화된 이익을 조정하며, 사회 통합의 매개체가 됨.

2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1) 국민 주권주의

- ① 의미: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 ② 실현 방안
 - 국민의 참정권 보장: 민주적 선거 제도, 국민 투표제 등
 - 복수 정당제 및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 국민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형성 및 표출

(2) 자유 민주주의

- ① 의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정치 원리
-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 존중을 근본 가치로 삼아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정치 원리

- 민주주의: 국가 권력의 창출과 권리의 행사 과정이 국민적 합의에 근거하여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정치 원리

② 실현 방안

- 법치주의 → ‘법의 지배’ 확립
- 적법 절차의 원리 →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국가의 자의적 제한 금지
- 권력 분립 제도와 사법권의 독립
-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 등

(3) 복지 국가의 원리

- ① 의미: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리
- ② 등장 배경: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발생한 빈부 격차 확대, 독과점 기업의 횡포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③ 실현 방안
 - 국가에 사회 보장 및 사회 복지의 증진 의무 부여
 -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 보장
 -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 보장과 최저 임금제 실시
 - 여성 및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 등

(4) 국제 평화주의

- ① 의미: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리
- ② 실현 방안
 - 침략적 전쟁의 부인 및 국제 평화 유지 활동 참여
 - 국제법 존중 및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인의 법적 지위 보장 등

(5) 평화 통일 지향

- ① 의미: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는 원리
- ② 등장 배경: 남북 분단이라는 역사적 상황
- ③ 실현 방안
 - 대통령에게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의무 부과
 - 대통령 자문 기구로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 설치
 - 남북 교류 협력 추진 및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6) 문화 국가의 원리

- ① 의미: 국가가 문화를 보호하고 개인의 문화적 자유와 자율을 보장함으로써 문화의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는 원리
- ② 목적: 문화 진흥을 통해 개개인이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
- ③ 실현 방안
 -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
 - 종교·학문·예술 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
 - 의무 교육 제도의 시행과 평생 교육의 진흥 등

01

▶ 23063-0011

헌법의 의미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 현대 복지 국가 헌법 중 하나임.)

A	시민 혁명의 영향으로 국민이 주권의 보유자임을 확인하는 국민 주권과 개인의 자유권 중심의 기본권 보장, 기본권이 침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권력 분립주의를 성문 헌법에 명시하고자 하였다.
B	국가 통치 기관을 조직·구성하고 이들 기관의 권한과 그 행사에 관한 내용, 상호 관계 등을 규정한 규범이다. 국가 권력의 조직과 행사에 대한 원칙들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 자연히 요구되고 그 조직 규범은 헌법으로서 존재한다.
C	사회적·경제적 모순과 문제점을 극복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생활 능력과 기반을 가지지 못한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국가의 생활 보호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비롯한 생존권적 기본권이 강조되어 헌법에 규정되고 있다.

- ① A는 복지 국가의 이념을 반영하였다.
- ② B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 ③ C는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 ④ A는 B와 달리 국가 통치 기관 조직·구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⑤ B는 C와 달리 실질적 평등의 보장을 중시한다.

02

▶ 23063-0012

다음 글에서 파악할 수 있는 헌법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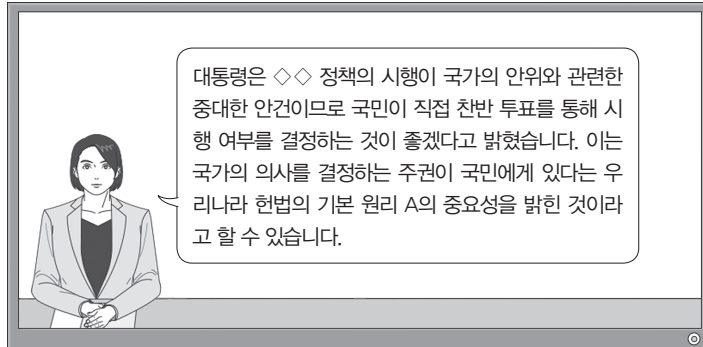
헌법은 국가 기관을 설치하고 각 국가 기관이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대통령과 행정부, 법원과 헌법 재판소 등이 헌법에 근거를 두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조직을 구성하고 정당성에 기반한 권력을 행사하는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국가 기관의 권한과 권력은 악용 내지 남용의 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는 3권 분립에 의한 국가 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① 국민적 합의 도출로 다원화된 이익을 조정한다.
- ② 사회 통합의 매개체가 되어 사회 통합을 실현한다.
- ③ 정치적 의사 결정의 기준을 제공하여 정치 생활을 주도한다.
- ④ 국가 통치 조직에 권한을 부여하며, 각 조직의 권력을 제한한다.
- ⑤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03

▶ 23063-001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민의 참정권 보장의 근거가 되는 원리이다.
- ②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정치 원리이다.
- ③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강조된 원리이다.
- ④ 국가가 국민의 자율적인 문화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⑤ 민족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남북 간 협력의 근거가 되는 원리이다.

04

▶ 23063-001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관련 헌법 조항	실현 방안
(가)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A
(나)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B

- ① (가)는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가 되는 원리이다.
- ② (나)는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국가에 의하여 국민의 문화 활동이 보호·지원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④ A에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이 들어갈 수 있다.
- ⑤ B에 '권력 분립 제도와 사법권의 독립'이 들어갈 수 있다.

05

▶ 23063-0015

다음 자료에서 강조되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신문 2000년 00월 00일

앞으로 지방 자치 단체장은 각 지역에 노후 준비 지원 센터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재무·건강·여가 등 노후 대비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지역 사회 특성과 주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것에 대비하여 국민이 건강한 노후를 지역 사회 가까이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부 관계자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후 준비 서비스를 지역 사회 중심으로 제공하는 전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지역 가까이에서 맞춤형 노후 준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 ①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강조된 원리이다.
- ② 사회권을 보장하는 데 근거가 되는 원리이다.
- ③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원리이다.
- ④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우리나라 헌법 특유의 원리이다.
- ⑤ 국가가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06

▶ 23063-0016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나라는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네가 말한 활동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인 (가)에 대한 실현 방안으로 볼 수 있어.

보기

- ㄱ. 실현 방안으로 '모든 유형의 전쟁 부인'을 들 수 있다.
- ㄴ. 실현 방안으로 '외국에 대한 공적 원조 제공'을 들 수 있다.
- ㄷ.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ㄹ. 국가가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07

▶ 23063-0017

다음 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는 전문을 비롯하여 여러 조항에서 A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헌법 제4조의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66조 제3항의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제92조 제1항의 “평화 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를 둘 수 있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① 근로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한다.
- ② 의무 교육 제도를 시행하고 평생 교육을 진흥한다.
- ③ 보통 선거제를 실시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한다.
- ④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
- ⑤ 민족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

08

▶ 23063-0018

다음 대화 내용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교사: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B의 실현 방안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갑: 국민이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국민 투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을: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합니다.
 병: (가)
 정: 종교·학문·예술 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교사: 3명은 A의 실현 방안을 발표했고, 1명은 B의 실현 방안을 발표했네요.

보기

- ㄱ. A는 국가가 개인의 문화적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ㄴ. B는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 ㄷ. 민주적인 선거 제도의 보장은 B가 아닌 A의 실현 방안에 해당한다.
- ㄹ. (가)에 ‘의무 교육 제도를 시행하고 평생 교육을 진흥합니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1 기본권의 의의

- (1) 기본권의 의의: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 중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
- (2) 기본권의 천부 인권성
 - 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양도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가짐.
 - ②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성립 이전에 존재하는 초국가적 권리임.
 - ③ 국가는 천부 인권의 보장을 위해 헌법을 만들고 기본적 인권에 관한 규정을 둬.

2 기본권의 유형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기 때문에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음.
 -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
 - 성격: 다른 모든 기본권 조항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
- ② 행복 추구권
 - 물질적·정신적으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
 - 성격: 행복 추구에 필요한 모든 자유와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포괄적 권리

(2) 평등권

- ① 의미: 모든 국민을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② 성격: 다른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
- ③ 내용: 법 앞의 평등, 사회적 특수 계급 제도의 금지, 교육의 기회 균등, 근로관계에서의 양성평등,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 등

(3) 자유권

- ① 의미: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생활 영역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받지 않을 권리
- ② 성격: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 국가 권력이 행사되지 않음으로써 보장되는 소극적 권리,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 구체적인 내용이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성격의 권리
- ③ 내용

신체의 자유	죄형 법정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 고문 금지 및 진술 거부권(묵비권), 영장 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고지, 체포·구속 적부 심사제, 자백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 제한, 소급효 금지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연좌제 금지 등
정신적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등
사회·경제적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등

(4) 참정권

- ① 의미: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② 등장 배경: 신분·재산·성별에 따라 제한되다가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되면서 모든 국민의 참정권 보장
- ③ 성격: 정치적 기본권, 능동적 권리
- ④ 내용: 선거권, 공무 부담권, 국민 투표권 등

(5) 사회권

- ① 의미: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② 등장 배경
 - 자본주의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사회 불평등 심화 → 모든 사회 구성원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실질적 평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본권 강조
 -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사회권을 처음 규정
- ③ 성격: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 적극적 권리, 복지 국가의 필수적 요소
- ④ 내용: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 3권(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환경권, 보건권 등

(6) 청구권

- ① 의미: 국민이 국가에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나 타인에 의해 침해당하였을 때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② 성격: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절차적 권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적극적 권리
- ③ 내용: 청원권, 재판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등

3 기본권의 제한

(1) 기본권 제한의 요건

- ① 관련 헌법 조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제37조 제2항).
- ② 목적: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 외에는 제한할 수 없음.
- ③ 형식: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한 → 국민의 기본권이 함부로 국가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장
- ④ 방법적 요건: 과잉 금지의 원칙 →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제한하여야 함.

(2) 기본권 제한의 한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 금지 → 개별 기본권이 기본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정도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3) 의의: 헌법에 제시된 목적, 방법, 한계에 부합하지 않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

01

▶ 23063-0019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의 최고 원리이며, 헌법 질서의 구조적 원리이다. 헌법의 존재 의의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 보장된 다른 기본권들은 경제·사회·문화·정치 등 각각의 생활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며, 국가 조직 역시 이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행복 추구권은 일반적인 행동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적 자치의 권리, 휴식권, 문화 향유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행복 추구권은 보호 영역을 특정할 수 없는 비정형적인 기본권의 근거로서 기능한다. 행복 추구권은 다른 기본권과 결합하여 새로운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보기

- ㄱ. ㉠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다.
- ㄴ. ㉠은 모든 기본권에 적용되는 기본권의 이념이다.
- ㄷ. ㉡은 포괄적 성격의 권리이다.
- ㄹ. ㉡은 물질적·정신적으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2

▶ 23063-0020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자유권, 사회권 중 하나임.)

기본권 유형 A와 B의 내용을 알아 볼까요?



- A: 환경권, 보건권, 교육을 받을 권리, (가) 등
- B: 구속 적부 심사제,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나) 등

- ① A는 실질적 평등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② B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 ③ B는 A에 비해 역사적으로 오래된 기본권이다.
- ④ (가)에 ‘근로의 권리’가 들어갈 수 있다.
- ⑤ (나)에 ‘적법 절차의 원리’가 들어갈 수 있다.

03

▶ 23063-0021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본권 유형 중 하나인 (가)은/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 기관의 형성과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로 A, B, C 등을 내용으로 한다. A는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이며, B는 국가의 중대한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하여 투표함으로써 국가의 의사 형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권리이다. C는 국가 및 공공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로 피선거권, 공직 취임권 등이 있다.

- ① (가)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 ② (가)는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권리이다.
- ③ A~C를 보장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 ④ B는 A, C와 달리 대의제를 실현하는 권리이다.
- ⑤ C는 A, B와 달리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권리이다.

04

▶ 23063-0022

그림은 기본권의 유형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옳은 답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사회권, 청구권 중 하나임.)



보기

- ㄱ.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습니다.
- ㄴ.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입니다.
- ㄷ. 내용으로는 청원권, 형사 보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 ㄹ.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05

▶ 23063-0023

기본권 유형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헌법에서 다른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인 A를 침해받는 국민이 없도록 다양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①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사회 불평등의 심화로 등장한 권리이다.
- ②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③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④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⑤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나 타인에 의해 침해당했을 때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06

▶ 23063-0024

기본권 유형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중 하나임.)

기본권 유형	관련 헌법 조항
(가)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나)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부담권을 가진다.
(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기

- ㄱ. (가)는 소극적·방어적 성격의 권리이다.
- ㄴ. (나)는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ㄷ. (다)는 국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이다.
- ㄹ. (가)는 (나), (다)와 달리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07

▶ 23063-0025

기본권 유형 (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 문제를 다룬 TV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방영하려고 했는데 국가 기관에서 사전 검열을 하여 방영이 취소되었습니다. 기본권 침해에 해당 하나요?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 기관에 의해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 검열이 이루어졌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프로그램 방영이 취소되었을 경우 (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기

- ㄱ.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이다.
- ㄴ.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 ㄷ.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보장되기 시작한 권리이다.
- ㄹ.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인 성격을 가지는 권리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8

▶ 23063-0026

기본권 유형 A~C에 대한 질문에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은?

A, B, C는 각각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 하나입니다.



<힌트 1>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가?’라는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힌트 2>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등장한 현대적 권리인가?’라는 질문으로 B와 C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학생	갑	을	병	정	무
A에 재판 청구권이 포함되는가?		○	○	×	○	×
B는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인가?		×	×	×	○	○
C에 사회적·경제적 자유가 포함되는가?		○	○	○	○	×
A는 B, C와 달리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보장되는 권리인가?		○	×	×	×	○

(○: 예, ×: 아니요)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09~10]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갑은 디엔에이(DNA) 채취 대상이라고 통지받았으나 이에 갑이 동의하지 않자 검사는 영장을 발부받아 DNA 감식 시료를 강제로 채취하였다. 갑은 영장 발부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없었고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가]을/를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헌법 재판소는 DNA 감식 시료 채취 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 대상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영장 발부 후 불복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 법률 제△△조(이하 '이 사건 영장 절차 조항'이라 한다.)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 [가]을/를 침해하는지에 대하여 판시하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판시 사항에 대한 결정 요지의 일부이다.

1. 이 사건 영장 절차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DNA 감식 시료 채취 과정에서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2. 이 사건 영장 절차 조항은 채취 대상자에게 DNA 감식 시료 채취 영장 발부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부 후 그 영장 발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채취 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 절차마저 마련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입법상의 불비¹⁾가 있는 이 사건 영장 절차 조항은 채취 대상자인 청구인들의 [가]을/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
3. 이 사건 영장 절차 조항에 따라 발부된 영장에 의하여 DNA 신원 확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이로써 장래 범죄 수사 및 범죄 예방 등에 기여하는 공익적 측면이 있으나, 이 사건 영장 절차 조항의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으로 인하여 채취 대상자의 [가]이/가 형해화²⁾되고 채취 대상자가 범죄 수사 및 범죄 예방의 객체로만 취급받게 된다는 점에서 양자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영장 절차 조항은 …(후략).

헌법 재판소는 DNA 채취 영장 조항이 아무런 불복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1) 불비: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아니함.
 2) 형해화: 내용은 없이 뼈대만 있게 된다는 뜻으로, 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됨을 이르는 말

09

▶ 23063-0027

(가)가 속하는 기본권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 성립 이전부터 인정받아 온 권리이다.
- ② 국가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③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④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이고 절차적인 권리이다.
- ⑤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에 대해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이다.

10

▶ 23063-0028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헌법 재판소는 ㉠이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ㄴ. 헌법 재판소는 ㉡에 대해 기본권 제한 방법이 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ㄷ. 헌법 재판소는 ㉢에 대해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 ㄹ. 기본권 제한 시 ㉣, ㉤, ㉥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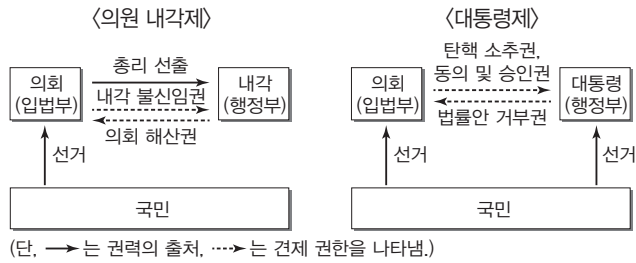
1 정부 형태

(1) 정부 형태의 의미와 유형

① 의미: 한 국가의 권력 체계의 구성 형태

② 유형

- 구분 기준: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 대표적 유형: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혼합된 정부 형태



(2) 의원 내각제

① 의미: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 형태

② 성립 배경: 영국에서 명예혁명을 통해 입헌 군주제를 바탕으로 한 의회 중심의 정치 체제를 형성하면서 성립

③ 행정부 구성 방식: 국민의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각을 구성함.

④ 특징

권력 융합	입법부가 행정부를 구성함으로써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
입법부와 내각의 긴밀한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각 구성 • 내각은 의회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짐. • 의회 의원의 각료 겸직 가능 • 내각도 법률안 제출 가능
입법부와 내각의 상호 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의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 행사 • 내각의 의회 해산권 행사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원수: 국정 운영의 실질적 권한 없음(국왕 또는 대통령). • 정치적 실권은 행정부 수반인 총리에게 있음.

⑤ 장점과 단점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부와 행정부의 긴밀한 협조로 능률적 국정 처리 가능 • 내각의 존속 여부가 의회에 의존하므로 책임 정치 구현 가능 • 내각 불신임, 의회 해산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치적 대립 해결 가능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당이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여 다수당의 횡포 우려 •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어 연립 내각이 구성될 경우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음.

(3) 대통령제

① 의미: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 형태

② 성립 배경: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 과정에서 권력의 집중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입법부와 행정부를 엄격히 분리하면서 성립

③ 행정부 구성 방식

- 국민이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며 대통령은 행정부를 구성함.
- 대통령과 행정부는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질 뿐 의회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음.

④ 특징

엄격한 권력 분립	행정부와 입법부 간 엄격한 권력 분립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독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과 의회 의원은 별도의 국민 선거에 의해 선출 •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없음. • 법률안 제출은 의회 의원만 가능함.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와 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 의회의 각종 동의권 및 승인권 행사, 주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권 행사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짐.

⑤ 장점과 단점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의회 다수당의 횡포 방지 • 대통령의 임기 보장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 동안 정국 안정, 정책의 계속성 확보 가능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독재 출현 우려 • 입법부와 행정부 대립 발생 시 조정 곤란

2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1)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

① 특징: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일부 도입함.

② 역사적 변천 과정: 대통령제 → 의원 내각제(3차 개헌) → 대통령제(5차 개헌~현재)

(2)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대통령제 요소: 대통령이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국회의 각종 동의권 및 승인권 행사 등

(3)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의원 내각제 요소: 국무총리와 국무 회의 제도, 국회 의원의 국무 위원 겸직 가능,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국회의 국무총리 및 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 대통령의 임시 국회 소집 요구권 등

01

▶ 23063-0029

전형적인 정부 형태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중 하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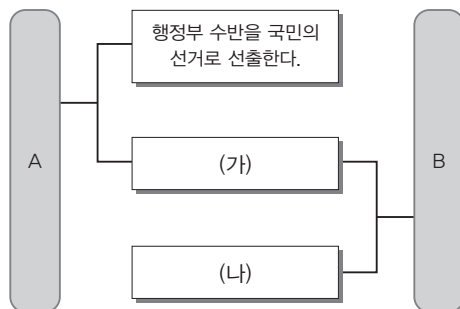
A와 B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존재한다. A는 권력 분립이 완화되어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의존의 원리에 의하여 규율되지만, B는 권력 분립이 엄격하여 상호 독립의 원리 및 경쟁의 원리가 지배한다. 또한 A에서는 행정부가 명목상의 국가 원수와 실질적 행정부인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지만, B의 행정부는 그 구조가 일원적이다.

- ① A에서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B에서 내각은 의회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 ③ A에서는 B와 달리 의회가 탄핵 소추권 행사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 ④ B에서는 A와 달리 연립 내각이 구성될 수 있다.
- ⑤ A, B에서는 모두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02

▶ 23063-0030

그림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A, B의 특징을 연결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중 하나임.)



보기

- ㄱ. A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된다.
- ㄴ. B에서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일원화되어 있다.
- ㄷ. (가)에 '의회 의원은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다.'가 들어갈 수 있다.
- ㄹ. (나)에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03~04]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단, A, B는 각각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중 하나임.)

수행 평가

1. 서로 다른 전형적인 정부 형태 A, B의 특징을 한 가지씩 작성하십시오. (각 1점, 총 2점)

• A의 특징:

• B의 특징:

2.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서 A, B의 요소와 관련된 헌법 조문을 두 가지씩 작성하십시오. (각 1점, 총 4점)

구분	관련 헌법 조문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input type="text" value="(다)"/>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input type="text" value="(라)"/>

□ 교사 평가: A, B의 특징은 서로 반대로 작성하였지만, 관련 헌법 조문은 정확히 작성하였으므로 학생의 점수는 총 4점입니다.

03

▶ 23063-0031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A에서 의회는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만, 내각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B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의회 임기 만료 전에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
- ③ A에서는 B와 달리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일원화되어 있다.
- ④ B에서는 A와 달리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A, B는 모두 행정부와 입법부 간 엄격한 권력 분립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정부 형태이다.

04

▶ 23063-0032

(가)~(라)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가) -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검직할 수 없다.
- ㄴ. (나) - 내각도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 ㄷ. (다) -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ㄹ. (라) -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05

▶ 23063-0033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갑국의 T 시기와 T+1 시기의 정당별 의회 의석률과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을 나타낸 것이다. 갑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으며, T 시기와 T+1 시기의 정부 형태는 다르다.

시기	정당별 의회 의석률(%)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A당	B당	C당	D당	
T 시기	52	20	25	3	㉠
T+1 시기	㉡		20	10	B당

*갑국의 정당은 A당~D당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무소속 의원은 없음.
 **T+1 시기의 B당 의석률은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① ㉠이 'C당'이라면, T 시기에는 T+1 시기와 달리 행정부 수반이 의회에서 선출된다.
- ② ㉠이 'C당'이라면, T+1 시기에는 T 시기와 달리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 ③ ㉡이 '55'이면, ㉠은 'A당'이다.
- ④ ㉡이 '55'이면, T+1 시기는 내각의 존속이 의회의 신임 여부에 달려 있다.
- ⑤ T+1 시기에 행정부 수반이 의회 해산권을 갖는다면, ㉡은 50을 초과한다.

06

▶ 23063-003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사: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 하나인 A는 행정부 수반을 국민의 선거로 선출합니다. A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갑: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서 의회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을: 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내각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병: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어 정책의 계속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정:

교사: A에 대해 만 옳게 설명했네요.

- ① (나)에 '3명'이 들어갈 수 없다.
- ② A에서는 의회가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A에서는 의회 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을 경우 연립 내각이 구성될 수 있다.
- ④ (나)에 '2명'이 들어가면, (가)에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인입니다.'가 들어갈 수 없다.
- ⑤ (가)에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가 들어가면, (나)에 '2명'이 들어간다.

07

▶ 23063-0035

갑국과 을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임.)

◇◇ 신문	△△ 신문
갑국은 국민의 선거를 통해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데, 이번 선거에서 ○○○ 후보가 유효 투표 총수의 51%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되었다.	을국은 지난 달 총선 결과 A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였는데, 오늘 A당 대표 □□□가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으로 선출되었다.

- ① 갑국이 을국에 비해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
- ② 갑국은 을국과 달리 의회가 내각 불신임안을 의결하면 행정부 수반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
- ③ 을국은 갑국과 달리 국가 원수가 국정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
- ④ 을국은 갑국과 달리 의회가 행정부 수반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갑국, 을국은 모두 항상 여대야소의 정국이 형성된다.

08

▶ 23063-0036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임.)

질문	답변	
	A	B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검직할 수 있는가?	㉠	㉡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는가?	아니요	예
(가)	예	아니요
맞은 개수	3개	2개

보기

- ㉠. A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 ㉡. B에서는 행정부가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 ㉢. (가)에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 (가)에 '내각은 연대하여 의회에 책임을 지는가?'가 들어가면, ㉠과 ㉡에 같은 응답이 들어간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09

▶ 23063-003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임.)

서술형 평가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답안 한 가지당 옳은 답을 쓴 경우 1점, 틀린 답을 쓴 경우 0점을 부여함.)	
답안	점수
대통령이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것은 A의 요소에 해당합니다.	㉠
행정부에 국무총리가 존재하는 것은 B의 요소에 해당합니다.	㉡
(가)	1점
채점 결과	㉢

- ① ㉠, ㉡의 점수는 다르다.
- ② (가)에 ‘국회 의원이 국무 위원을 겸할 수 있는 것은 B의 요소에 해당합니다.’가 들어가면, ㉢은 1점이다.
- ③ ㉢이 1점이면, A에서 행정부 수반의 임기는 보장된다.
- ④ ㉢이 3점이면,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A,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B의 요소이다.
- ⑤ ㉢이 3점이면, (가)에 ‘대통령이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것은 A의 특징에 해당합니다.’가 들어갈 수 없다.

10

▶ 23063-0038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갑국~정국은 모두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음.)

구분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의회 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였는가?	
		예	아니요
행정부 수반 선출 방법	국민의 선거로 선출	갑국	을국
	의회에서 선출	병국	정국

- ① 갑국은 병국과 달리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
- ②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가능성은 병국이 정국보다 낮다.
- ③ 정국은 갑국에서와 달리 연립 내각이 구성될 수 있다.
- ④ 정국은 을국에서와 달리 내각도 법률안 제출권을 갖는다.
- ⑤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을국, 정국이 갑국, 병국보다 높다.

1 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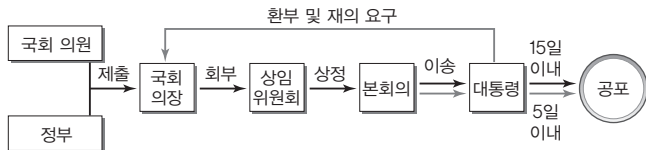
- (1) 국회의 지위: 국민 대표 기관, 입법 기관, 국정 통제 기관
- (2) 국회의원의 구성: 지역구 의원, 비례 대표 의원 → 임기 4년
- (3) 국회의 기능과 권한
 - ① 입법에 관한 사항: 헌법 개정안 제안·의결권, 법률 제·개정권,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권 등
 - ② 재정에 관한 사항: 국가 예산안 심의·의결권, 결산 심사권 등
 - ③ 일반 국정에 관한 사항
 - 국가 기관 구성: 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원장 및 대법관·헌법 재판소장 임명 동의권,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 3인 선출권 등
 - 국정 감시 및 통제: 국정 감사·조사권,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동의·승인권, 국무총리 및 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 탄핵 소추권 등

(4) 입법 절차

① 헌법 개정 절차



② 법률 제·개정 절차



- * 제출: 국회 의원(10명 이상 또는 위원회) 또는 정부
- * 심의·의결: 소관 상임 위원회 심의·의결 → 본회의 상정 → 질의 및 토론 → 의결(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 * 공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
- * 재의결: 재의 요구된 법률안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법률로서 확정

2 대통령과 행정부

(1) 대통령

- ① 지위: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
- ② 선출 및 임기: 국민의 직접 선거, 임기 5년, 중임 금지
- ③ 주요 권한
 -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조약 체결 및 비준권, 선전 포고와 강화권, 대법원장 및 대법관·헌법 재판소장 등에 대한 임명권 등
 -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행정부 지휘·감독권, 공무원 임면권, 대통령령 발포권 등
- ④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 방법: 국회의 탄핵 소추 및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거에 의한 통제, 여론에 의한 통제 등

(2) 행정부의 주요 기구

- ① 국무총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행정 각부를 통할함, 국무 위원 임명 제청, 국무 위원 해임 건의, 총리령 발포 등

- ② 국무 회의: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 최고의 심의 기관, 의장(대통령)·부위원장(국무총리)·국무 위원으로 구성
- ③ 행정 각부: 대통령이 결정하는 정책과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집행함.
- ④ 감사원: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 헌법 기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 공무원의 직무 감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 등

3 법원과 헌법 재판소

(1) 사법권의 독립

- ① 의미: 외부의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법원과 법관을 독립시킴.
- ② 목적: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
- ③ 실현 방법: 법원의 독립, 법관의 독립

(2) 법원의 조직과 기능

- ① 대법원: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 상고·재항고심 관할권 등
- ② 고등 법원: 원칙적으로 항소·항고 사건의 제2심을 담당함.
- ③ 지방 법원: 원칙적으로 제1심을 담당함(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는 지방 법원 및 지원 단독 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과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의 제2심을 담당함.).
- ④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각급 법원이 헌법 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음.

(3) 심급 제도

- ① 의미: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에 급을 두어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원칙적으로 3심제
- ② 상소 제도: 하급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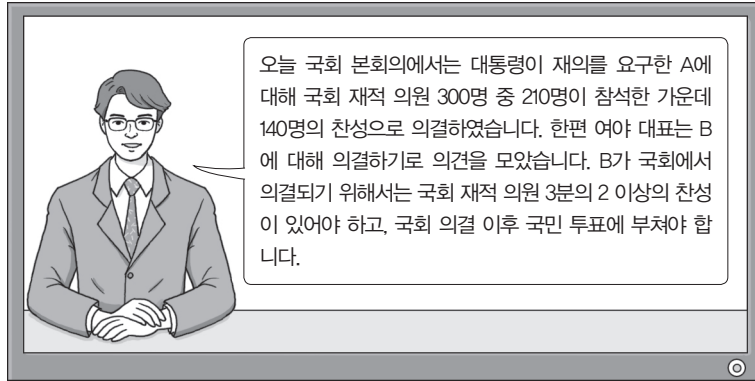
(4) 헌법 재판소

- ① 지위: 헌법 수호 기관, 기본권 보장 기관
- ② 구성: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 국회에서 선출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 헌법 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 ③ 권한: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 탄핵 심판, 권한 쟁의 심판, 정당 해산 심판
- ④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의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함.
- ⑤ 헌법 소원 심판
 -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그 공권력의 취소 또는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
 -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당사자가 직접 헌법 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

01

▶ 23063-0039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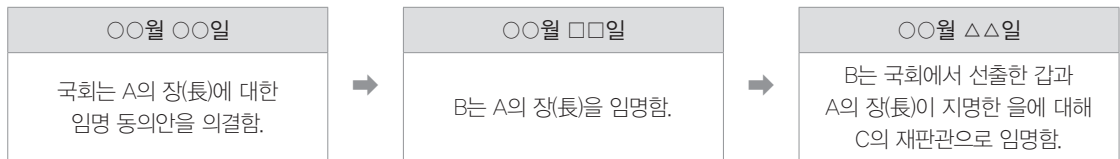
- ㄱ. A가 제출되면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 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A는 국회 의결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ㄷ.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 B는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
- ㄹ. A는 B와 달리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2

▶ 23063-0040

다음 자료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C에서 기각된 사건에 대해 A에 상소할 수 있다.
- ② A는 C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B를 견제할 수 있다.
- ③ C의 장(長)은 C의 재판관 중에서 B가 임명하되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④ 국회는 A의 장(長)과 C의 장(長)에 대한 해임을 B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⑤ 국회가 A의 장(長)과 B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C가 이를 심판한다.

03

▶ 23063-0041

다음은 법원 판결문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건 ○○○○도12345 강제 추행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

㉠ 원심 판결 A 법원 2000.00.00. 선고 ○○○○노1234 판결
...(중략)...

2.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중략)...

3. B 법원 판단

원심 판결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중략)...

4.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기

- ㄱ. ㉡을 지방 법원 단독 판사가 담당하면, ㉠은 고등 법원이 담당한다.
- ㄴ. ㉢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B 법원의 장(長)이 임명한다.
- ㄷ. A 법원, B 법원은 모두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갖는다.
- ㄹ. B 법원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성 및 위법성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4

▶ 23063-0042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회는 이번 ㉠ 임시회 기간 중 공석인 ○○ 상임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하였으며 각 ㉡ 교섭 단체 대표들이 만나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 상임 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관하여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 본회의에서 다른 안건들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 후 상정된 □□ 법률안과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지만, ㉤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 법률안은 부결되었다.

- ① ㉠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1/4 이상의 요구로 집회된다.
- ② ㉡은 국회 내에서 의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③ ㉢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과 ㉤을 처리하기 위한 의결 정족수는 같다.
- ⑤ ㉤이 부결된 이후 해당 임시회 기간 중 다시 발의할 수 있다.

05

▶ 23063-0043

다음은 학생 갑의 수행 평가 내용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국회, 대통령 중 하나임.)

수행 평가

■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A, B의 권한을 두 가지씩 작성하시오.

1) A의 권한

- (가)
- (나)

2) B의 권한

-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
- (다)

※ 교사 평가: A의 권한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옳게 작성하였고, B의 권한에 대해서는 모두 옳게 작성하였습니다.

보기

- ㄱ. A는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 ㄴ. B는 A와 달리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 ㄷ. (가)에 '국정 감사 및 국정 조사권'이 들어가면, (나)에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이 들어갈 수 있다.
- ㄹ. (다)에 '국가 예산안 심의·확정권'이 들어갈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6

▶ 23063-0044

표는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A~C의 상호 견제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국회, 대통령, 법원 중 하나임.)

구분		견제 대상		
		A	B	C
견제 주체	A		(가)	(나)
	B	(다)		(라)
	C	(마)	(바)	

* (가)~(바)는 견제 권한을 의미함.

- ① A가 국회, C가 대통령이면, (바)에 '명령·규칙의 위헌성 및 위법성에 대한 심사권'이 들어갈 수 있다.
- ② B가 국회, C가 법원이면, (마)에 '사면권'이 들어갈 수 있다.
- ③ (가)에 '대법원장 임명권'이 들어가면, C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를 담당한다.
- ④ (라)에 '법률안 거부권'이 들어가면, A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구성된다.
- ⑤ (나)에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이 들어가면, (다)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이 들어갈 수 있다.

07

▶ 23063-0045

다음은 ○○법의 일부 조항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41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가)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제68조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가)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가)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가)의 장(長)은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은 위헌 심사형, ㉡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 ③ 법률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의 결과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당사자는 ㉡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 ㉡의 결과 위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해당 법률의 효력이 유지된다.

08

▶ 23063-0046

다음은 헌법 재판소 결정문 중 일부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결정 요지]

이 사건 운동 기간 조항 중 선거 운동 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 운동에 관한 부분, 이 사건 처벌 조항 중 '그 밖의 방법'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 운동을 한 자에 관한 부분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선거 운동 중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중략)...

[주문]

'그 밖의 방법'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 운동을 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 개요

- 가. 청구인은 국회 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선거 운동을 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방 법원 □□ 지원). 이에 대해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 상고도 ㉢기각되었다.
-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공직 선거법 제59조 본문과 제254조 제2항 중 '그 밖의 집회,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한 자'에 관한 부분이 선거 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보기

- ㄱ. ㉠은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 ㄴ. ㉠은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은 고등 법원에서 이루어졌다.
- ㄷ. 청구인은 해당 법률 조항으로 인해 사회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하여 ㉡을 신청하였다.
- ㄹ. ㉢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09

▶ 23063-0047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국회, 대통령, 감사원, 대법원 중 하나임.)

-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갖는가?’라는 질문으로 B, C, D를 구분할 수 없다.
- ‘국회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A, D와 B, C를 구분할 수 있다.
-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갖는가?’라는 질문으로 B, D를 구분할 수 있다.
- ‘국민의 직접 선거로 구성되는가?’와 라는 질문에 대한 B의 답변은 동일하다.

- ① (가)에 ‘국민 투표 부의권을 갖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② B의 장(長)은 A의 장(長)과 달리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B는 조약 체결·비준권, C는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 ④ C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D와 차년도 B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B의 장(長), D의 장(長)은 A의 장(長)과 달리 C가 임명한다.

10

▶ 23063-0048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중 A는 국가의 사법 작용 중 헌법 재판을 담당함으로써 헌법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국가 기관이다. (가), (나)는 A의 권한이며, 다음은 (가), (나)에 관한 결정문 중 일부이다.

(가)에 관한 결정문

[당사자]
 청구인
 피청구인 대통령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를 파면한다.

(나)에 관한 결정문

[당사자]
 청구인
 피청구인 ○○당

[주문]
 1. 피청구인 ○○당을 해산한다.

- ① 모든 공무원은 (가)의 대상이 된다.
- ② ㉠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이다.
- ③ (나)는 국가 기관 간의 권한과 관련된 다툼을 해결하는 심판이다.
- ④ ㉡이 (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A의 재판관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11

▶ 23063-0049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신문	□□ 신문
국회 의원 갑이 대표 발의한 ㉠○○ 법률안 제출	○○ 법률안,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
◇◇ 신문	▽▽ 신문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 법률안,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	○○ 법률안,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함.

- ① ㉠을 위해서는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은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하나의 정당으로 이루어진다.
- ③ ㉢은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
- ④ ㉣으로 ○○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⑤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과 ㉣은 다른 회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2

▶ 23063-0050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A는 행정 각부의 정책을 조정·통합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통일성과 조화를 꾀하고, 행정부의 모든 중요한 정책을 심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게 한다. 또한 대통령 단독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을 방지하는 기관 내부적 권력 통제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한다.
- B는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을 담당하는 대통령 소속 중앙 행정 기관이지만, 그 기능에 있어서는 누구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헌법은 비록 독립 기관으로서 B의 지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독립성은 이미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B의 과제와 기능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보기

- ㄱ. A는 행정부 내 최고 심의 기관이다.
- ㄴ. A의 심의 사항에 대해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 ㄷ. B는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를 담당한다.
- ㄹ. B의 장(長)은 A의 구성원이 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 지방 자치**(1) 지방 자치의 의미와 의의**

- ① 의미: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치 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
- ② 의의
 - 민주주의의 이상인 자치의 원리에 충실: 지방 자치의 경험을 통해 양성된 민주 시민과 정치 지도자는 국가 전체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학교
 - 지방 분권의 실현: 권력의 중앙 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막고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역할 분담 → 수직적 권력 분립
 -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중앙 정부의 한계 보완 및 견제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기여

(2) 지방 자치의 유형

주민 자치	지역 주민이 스스로의 책임 아래 그 지방의 공공 문제를 처리 → 자치의 원리(정치적 의미의 지방 자치)
단체 자치	중앙 정부로부터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 정부가 자치 실행 → 지방 분권의 원리(행정적 의미의 지방 자치)

2 우리나라 지방 자치**(1)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

- ① 광역 자치 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② 기초 자치 단체: 시·군·자치구

(2)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① 지방 의회(의결 기관)**

- 구성: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성
- 지위: 주민의 대표 기관, 최고 의사 결정 기관, 집행 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관
- 권한: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권한, 지방 자치 단체 예산의 심의·확정권, 결산 승인권, 기타 주민 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권, 주민 청원의 수리 및 처리권 등

② 지방 자치 단체장(집행 기관)

- 구성: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
- 유형
 - 광역 자치 단체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기초 자치 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 지위: 지방 자치 단체의 집행 기관, 지방 자치 단체 대표
- 권한: 지방 자치 단체의 일반적인 행정 사무 처리권,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권 및 지휘 감독권, 규칙 제·개정 및 폐지권 등

③ 교육의 자율성·전문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광역 지방 자치 단체에 교육 자치 관련 집행 기관인 교육감을 두고 있음.

(3) 우리나라의 주민 참여 제도

- ① 주민 투표 제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 등을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
- ②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제도: 주민이 직접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③ 주민 소환 제도: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직무에 태만한 지방 자치 단체장이나 지방 의회 의원(비례 대표 지방 의회 의원 제외)을 임기 중에 주민의 투표에 의해 해임하는 제도
- ④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주민이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협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예산안을 편성하고 사업의 필요성 판단이나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⑤ 주민 감사 청구 제도: 지방 자치 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때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⑥ 주민 소송 제도: 지방 자치 단체의 위법한 재무 행위를 방지·시정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절차를 거쳐 주민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
- ⑦ 주민 청원 제도: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나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 지방 자치 단체가 마련하기를 바라는 정책, 제도 등을 지방 의회에 문서로써 청원할 수 있는 제도

3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문제점과 과제**(1)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문제점**

- ① 지방 자치 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 부족
- ② 지방 자치 단체의 낮은 재정 자립도 및 지방 자치 단체 간 경제력 차이
- ③ 지방 자치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 부족
- ④ 지방 자치 단체 간의 갈등 조정 곤란

(2)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과제

- ① 지방 분권 강화: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 완화, 조세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자립도 향상 및 지역 간 균형 발전 도모, 지방 의회 및 지방 자치 단체장의 권한 확대
- ② 주민들의 참여 확대: 주민 참여 방식을 다양화하여 주민들이 지방 자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③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간의 협력 강화

01

▶ 23063-0051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수천만에서 수억에 이르는 시민으로 구성된 현대 국가를 중앙 정부가 홀로 통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만약 중앙 정부가 국가의 모든 일을 홀로 처리하려 든다면 많은 ㉠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그 자율성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오늘날 국가마다 지방 정부를 두고 중앙 정부와의 상호 견제를 전제로 지방 정부가 지방 사무를 관할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방 정부는 보건, 사회 복지, 지역 개발 등 대체로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필요나 욕구와 관련된 분야의 사무를 처리하며, 이를 위해 중앙 정부로부터 일정한 ㉡ 권력을 이양받는다.

보기

- ㄱ. ㉠의 사례로 '지역 관련 정책 결정 시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의 반영 미흡'을 들 수 있다.
- ㄴ. 우리나라의 경우 ㉡에 자치를 위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포함된다.
- ㄷ. 지방 자치를 통한 수직적 권력 분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ㄹ. 지방 자치 운영에 지역 주민의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02

▶ 23063-0052

다음은 우리나라 지방 자치법의 일부 조항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조 ① ㉠ 지방 자치 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 A는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① ㉠ 중 광역 자치 단체에서만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 ② ㉡의 사례로 지방 정부 예산의 심의·확정을 들 수 있다.
- ③ A는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A는 ㉠의 집행 기관이 아니라 의결 기관이다.
- ⑤ A는 ㉠의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다.

03

▶ 23063-0053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제도는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등이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의회에 법률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 지방 자치 단체 합동 평가 제도는 행정 안전부 장관이 중앙 행정 기관의 장(長)과 공동으로 매년 17개 광역 자치 단체의 국가 위임 사무, 국고 보조 사업, 국정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광역 지방 자치 단체를 공개하고 결과에 따른 맞춤형 행정 컨설팅 및 재정 인센티브 지급 등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 ① ㉠은 지방 의회 의사 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 ② ㉡은 지방 자치 단체 기관 간의 견제 수단에 해당한다.
- ③ ㉠은 ㉡과 달리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간 수직적 권력 분립을 구현한다.
- ④ ㉡은 ㉠과 달리 지방 자치에 대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자 한다.
- ⑤ ㉠, ㉡은 모두 지방 자치 단체의 권력 행사를 견제하는 데 기여한다.

04

▶ 23063-0054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교사: 모둠별로 토의하여 각 모둠 대표가 (가) 방안을 한 가지씩 발표해 보세요.
- A 모둠: 주민 자치 우수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보급합니다.
 - B 모둠: 주민 감사나 주민 소환, 조례 제정·개정·폐지 등의 청구 요건을 완화합니다.
 - C 모둠: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방 행정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 D 모둠: 지역 내 마을 활동가들의 주민 자치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동에 드는 실질적 경비를 지원합니다.
- 교사: A~D 모둠 모두 잘 발표했어요.

- ① 지방 자치 단체 간의 갈등 해소
- ②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자립도 향상
- ③ 지방 자치 단체 기관 구성의 민주성 강화
- ④ 지방 자치에 대한 지역 주민의 참여 활성화
- ⑤ 지방 자치에 대한 주민 참여의 법적 근거 마련

선거와 선거 제도

1 선거의 의미와 기능

- (1) 의미: 국민들이 자신들을 대표하여 국가를 운영할 공직자를 선출하는 행위
- (2) 기능

대표자 선출과 국민 주권 실현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정을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국민 주권을 실현함.
정치권력 통제	대표자를 재신임하거나 책임을 물어 교체함.
정치권력에 정당성 부여	국민의 지지를 얻어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표자의 정치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함.
국민 의사 반영과 참여 활성화	국민의 여론을 정치 과정에 반영하고, 국민의 참여 의식을 제고하며 정치 교육의 장을 제공함.

(3) 민주 선거의 4대 원칙

원칙	의미	반대 개념
보통 선거	재산, 학력, 성별,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고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	제한 선거
평등 선거	유권자에게 부여하는 표의 수를 같게 하고, 유권자가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것(표의 등가성 실현)	차등 선거
직접 선거	유권자가 대리인(중간 선거인)을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	간접 선거
비밀 선거	투표자의 투표 내용을 타인이 알 수 없게 하는 것	공개 선거

2 선거 제도

(1) 선거구 제도

- ① 선거구의 의미: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
- ② 선거구 제도

구분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의미	한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자 선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자 선출
특징	주요 정당에 유리 (양당제 촉진)	소수당의 의석 확보에 유리 (다당제 촉진)
장점	• 선거 관리 용이 •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 용이	• 사표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음. • 국민의 다양한 의사 반영 유리
단점	• 사표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음. • 소수당 후보자들의 의회 진출에 불리함. •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을 간의 불일치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유권자가 후보자를 파악하기 어려움. • 군소 정당 난립 시 정국 불안정 우려가 있음. •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유권자의 투표 가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대표 결정 방식

- ① 다수 대표제: 선거구 내 후보자 중에서 다수의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식

구분	단순 다수 대표제 (상대 다수 대표제)	절대다수 대표제
의미	당선에 필요한 득표 기준 없이 다른 후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미리 정해져 있는 당선자 수만큼 대표자로 당선되는 방식	• 후보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표를 획득해야 당선되는 방식 • 대표적으로 결선 투표제와 선호 투표제가 있음.
특징	• 당선자 결정이 용이함. • 당선자의 대표성이 낮을 수 있음.	•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음. • 당선자 결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 ② 비례 대표제: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할당하고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

장점	• 사표 발생을 줄일 수 있음. •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을 간 격차를 줄일 수 있음. • 소수당의 의석 확보 가능성이 높음. •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기 용이함.
단점	• 군소 정당이 난립할 경우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음. • 비례 대표 후보자의 명부를 정당이 결정할 경우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가 정확히 반영되기 어려움.

(3) 우리나라의 현행 선거 제도

선거구	대표제	
대통령 선거(5년마다 실시)	단순 다수 대표제	
국회 의원 선거(4년마다 실시)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지역구 의원) /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비례 대표 의원)	
지방 선거 (4년마다 실시)	지방 자치 단체장	단순 다수 대표제
	광역 의회 의원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지역구 의원) /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비례 대표 의원)
	기초 의회 의원	중·대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지역구 의원) /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비례 대표 의원)
	교육감 (정당 공천 없음.)	광역 자치 단체 단위로 선출, 단순 다수 대표제

(4) 공정 선거를 위한 제도 및 기관

- ①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구를 법률로 확정하는 제도 →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게 임의로 선거구를 확정하는 게리맨더링 방지
- ② 선거 공영제: 선거 과정을 국가 기관의 관리하에 두고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하는 제도 → 선거 운동 기회의 균등 보장, 선거 과열 방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입후보 기회 보장
- ③ 선거 관리 위원회: 선거 관리 및 정당 관리,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 관리, 국민에 대한 선거 홍보 및 계도 활동 등

01

▶ 23063-0055

다음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선거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북부의 정치적 반대 세력들로부터 독재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 이유는 링컨이 의회의 허락을 요청하지 않은 채 군대를 양성하고 군사 행동을 명령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링컨의 지지자들은 링컨이 대통령으로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했을 뿐인데 독재자라고 비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응수하였다. 또한 그들은 무엇보다도 1864년 선거에서 국민이 대통령을 링컨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즉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바대로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통치를 인정받았으므로 독재자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① 정치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 ② 정치 사회화의 장(場)을 제공한다.
- ③ 국민 여론에 입각하여 정책이 결정되도록 한다.
- ④ 정치 과정을 주도할 새로운 정치 엘리트를 충원한다.
- ⑤ 사회적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 표출 기회를 제공한다.

02

▶ 23063-0056

갑, 을이 설명하고 있는 민주 선거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정치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는 누가 뽑아야 할까요? 부자들만도 그리고 가난한 자들만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들만도 그리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만도 아니며, 명문가의 자손들만도 그리고 이름 없는 집안의 자손들만도 아닙니다. 대표를 뽑는 사람들은 바로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입니다.

모여 있는 유권자들에게 손을 들게 하여 후보자별 득표수를 확인해서도 안 되고, 유권자가 각자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더라도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을 적게 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사방이 막힌 기표소를 설치해야 하고, 봉인된 투표함을 사용해야 합니다.



- | | |
|---------|-------|
| 갑 | 을 |
| ① 보통 선거 | 직접 선거 |
| ② 보통 선거 | 비밀 선거 |
| ③ 평등 선거 | 직접 선거 |
| ④ 평등 선거 | 비밀 선거 |
| ⑤ 직접 선거 | 평등 선거 |

03

▶ 23063-0057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거 제도 선택의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회 의원 선거에서 비례 대표제를 폐지하고 단순 다수 대표제와 결합된 소선거구제를 시행한다면 (가)이/가 높아질 수 있는데, 이는 심리적 효과에 의한 전략적 투표 가능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 시 투표 선택에 있어 지지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을 고려한다. 특히 당선 가능성이 낮은 군소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그 후보자에게 표를 던질 경우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될 것이라는 점 때문에 고민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그런 유권자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지지하는 후보자가 아니라 이념적으로 자신의 선호에 가까우면서 당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거대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선택을 한다.

- ① 선거의 공정성
- ② 양당제 형성 가능성
- ③ 의회 내 이념적 다양성
- ④ 선거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
- ⑤ 선거구 간 유권자 표의 등가성

04

▶ 23063-0058

다음 조항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제7조 ①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하는 연설원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 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
 1. 대통령 선거 -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이 각각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1회 이내
- 제122조의2 ①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 선거의 정당 추천 후보자와 비례 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 대표 지방 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 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 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 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 보고서에 보고된 선거 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 비용을 말한다.]을 ... (중략) ... 선거일 후 보전한다.
 1. 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지방 의회 의원 선거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선거
 -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비용의 전액

- ①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고자 한다.
- ② 투표 참여의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하고자 한다.
- ③ 후보자 간 선거 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자 한다.
- ④ 유권자가 행사하는 1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고자 한다.
- ⑤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에 따른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05

▶ 23063-0059

민주 선거의 원칙에 해당하는 ㉠과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대한민국 국외의 구역을 향해하는 선박에 장기 체류하는 선원들의 선거권 행사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은, 선거 관리가 사실상 곤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의 마련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선거에 관한 이러한 원칙적인 요구를 효과적으로 담보하면서도 해상의 선원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 ...<중략>... ㉠ 원칙에 일부 저촉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 원칙의 실현을 위해 ㉢ 원칙과 ㉣ 원칙을 조화적으로 해석하여 이들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전자 통신 장비를 이용한 선상 투표 결과 그 내용이 일부 노출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국외의 구역을 향해하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대한민국 선원들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한다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보기

- ㄱ. ㉠은 공개 선거에 반대되는 원칙이다.
- ㄴ. 인종을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에 위배된다.
- ㄷ. ㉡은 유권자에게 동일한 수의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원칙이다.
- ㄹ. 시민 혁명 이후 여성의 선거권 확보 노력은 ㉡의 확립과 관련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6

▶ 23063-0060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직 선거법 제33조 ① 선거별 선거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대통령 선거는 23일
 2. ㉡ 국회 의원 선거와 ㉢ 지방 자치 단체의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 ① ㉠은 대표 결정 방식으로 절대다수 대표제를 적용하고 있다.
- ② ㉡의 전체 선거구 수는 지역구 국회 의원 정수(定數)에 1을 더한 수이다.
- ③ ㉢의 경우 비례 대표제는 광역 의회 의원 선거에만 도입되어 있다.
- ④ ㉡은 ㉢의 광역 의회 의원 선거와 달리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
- ⑤ ㉠~㉣은 모두 4년마다 실시된다.

[07~08]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전형적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은 현재 5년 임기의 대통령을 단순 다수 대표제로 선출하고 있는데,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출 방식을 현행 제도로 유지할지, 다음 <1안>과 <2안> 중 하나로 개편할지 논의 중이다.

- <1안> 1차 투표에서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을 획득한 후보자가 나오지 않으면 득표 순위 1위, 2위 후보자 2명을 놓고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이 중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2안> 유권자는 모든 후보자에게 선호 순위를 표시하는 투표를 실시하여 1순위표를 집계한다. 그 결과 1순위표 최다 득표자가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 1순위표 최소 득표자는 탈락하고 이 후보자를 1순위로 표시한 표는 그 표에서 유권자가 2순위로 표시한 후보자에게 1순위표로 넘겨 주어 집계한다. 이러한 1순위표 집계 방식으로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차기 대통령 선거 결과는 아래 표를 근거로 판단한다.

〈유권자 유형별 정당 선호 순위〉

구분	유권자 유형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A당	1	1	1	1	2	2	3	3	3	4
B당	2	2	3	4	3	4	1	1	2	1
C당	3	4	2	2	1	3	2	4	1	3
D당	4	3	4	3	4	1	4	2	4	2

* 후보자는 A당~D당에서 각각 공천하는 4명뿐이고, 유권자는 정당 선호 순위에 따라 투표에 참여함.
 ** (가)~(차) 유형별 유권자 수는 모두 동일하고, 투표율은 100%이며, 무효표는 없음.

07

▶ 23063-0061

현행 제도, <1안>, <2안>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ㄱ. <1안>은 현행 제도에 비해 당선자 결정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데 적합하다.
- ㄴ. <2안>은 현행 제도에 비해 당선자 결정을 위한 투표 집계 과정이 복잡하다.
- ㄷ. 현행 제도와 <2안>은 <1안>과 달리 한 번의 투표로 당선자 결정이 가능하다.
- ㄹ. <1안>과 <2안>은 현행 제도에 비해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적합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8

▶ 23063-0062

차기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 ①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와 <1안>을 적용할 경우의 당선자는 서로 다르다.
- ② <1안>을 적용할 경우와 <2안>을 적용할 경우의 당선자 득표율은 같다.
- ③ <2안>을 적용할 경우에 비해 <1안>을 적용할 경우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 ④ <2안>을 적용할 경우와 달리 <1안>을 적용할 경우 (마) 유형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된다.
- 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와 달리 <1안>이나 <2안>을 적용할 경우 여대야소의 상황이 발생한다.

[09~10]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의 의회는 (가)~(아) 선거구에서 단순 다수 대표제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 8명으로 구성된다.

(가)	(나)	(마)	(바)
(다)	(라)	(사)	(아)

- 유권자 수는 선거구 면적에 비례함. (가) 면적은 (나) 면적의 절반이며, (가), (다), (바), (아)의 면적은 같고, (나), (라), (마), (사)의 면적은 같음.
- 갑국의 행정 구역은 (가)+(다), (나)+(라), (마)+(사), (바)+(아)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선은 동일한 행정 구역 내의 선거구 구분선임.

갑국은 의회 의원 정수(定數)와 대표 선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차기 의회 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제를 다음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로 개편하려 한다.

- 〈1안〉 동일한 행정 구역 내의 선거구 2개를 하나로 통합하여 총 4개의 선거구를 만들고, 각 선거구당 동일한 수의 의회 의원을 선출함.
- 〈2안〉 선거구별 유권자 수가 동일하도록 인접한 선거구 2개를 하나로 통합하여 총 4개의 선거구를 만들고, 각 선거구당 동일한 수의 의회 의원을 선출함. (단, 대각선 방향의 통합은 고려하지 않음.)

아래 표는 최근 갑국에서 실시된 의회 의원 선거 시 선거구별 각 정당 후보자의 득표율이다.

(단위: %)

구분	선거구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A당	40	30	10	35	30	40	30	40
B당	35	20	30	30	40	10	40	20
C당	15	25	50	30	20	25	10	30
D당	10	25	10	5	10	25	20	10

- * 선거구 제도 개편안 검토 시 위 표를 기준으로 판단함.
- ** 정당은 A당~D당만 존재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없으며,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1명의 후보자를 공천함.
- ***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 1표를 행사하며, 투표율은 100%이고 무효표는 없음.

09

▶ 23063-0063

현행 제도와 개편안의 선거구제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ㄱ. 현행 제도의 선거구제는 한 선거구당 2인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 ㄴ. 개편안의 선거구제는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유권자의 투표 가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ㄷ. 현행 제도의 선거구제는 개편안의 선거구제에 비해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이 용이하다.
- ㄹ. 개편안의 선거구제는 현행 제도의 선거구제에 비해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 23063-0064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 ① <1안>으로 개편할 경우 행정부 수반이 속한 정당은 현재와 달라진다.
- ② B당은 <2안>에 비해 <1안>으로 개편하는 것이 의석수 확보에 유리하다.
- ③ D당은 <2안>과 달리 <1안>으로 개편할 경우 의석수가 증가한다.
- ④ <1안>과 달리 <2안>으로 개편할 경우 의석을 확보하는 정당의 수는 증가한다.
- ⑤ <1안>이나 <2안>으로 개편할 경우 C당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는 비율은 감소한다.

[11~12]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갑국의 의회 의원 정수(定數)는 8명이다. 현재 갑국은 4개의 선거구에서 단순 다수 대표제를 적용하여 선거구마다 최다 득표자 2명을 의회 의원으로 선출하고 있다. 그러나 차기 의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의회 의원 정수(定數)는 그대로 유지하되 선거 제도를 개편하려 한다.

■ 개편안

기존 선거구에서 ㉠ 단순 다수 대표제를 적용하여 선거구마다 최다 득표자 1명을 의회 의원으로 선출하고, 4명의 의회 의원은 ㉡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다음과 같은 선출 방식을 도입하여 선출한다.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에 1표를 행사하는 별도의 정당 투표를 실시한 후 각 정당의 득표율에 의석수(4)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 의석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아래 표는 현행 선거 제도로 실시된 최근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단위: 표)

구분	A당	B당	C당	D당
제1선거구	100	10	70	20
제2선거구	80	60	40	20
제3선거구	60	70	30	40
제4선거구	80	60	10	50

* 개편안의 경우 위 표를 근거로 차기 선거 결과를 판단함.

** 정당은 A당~D당만 존재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없으며,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1명의 후보자를 공천함.

***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지지하는 정당을 기준으로 후보자에 1표를 행사하며, 투표율은 100%이고 무효표는 없음.

11

▶ 23063-0065

밑줄 친 ㉠에 비해 ㉡이 갖는 장점으로 옳은 것은?

- ① 당선자 결정이 용이하다.
- ②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이 용이하다.
- ③ 군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다.
- ④ 지역 대표로서 당선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 ⑤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

12

▶ 23063-0066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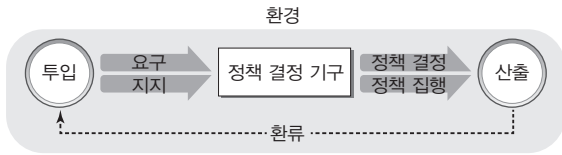
- ① A당은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지역구 의석수가 현재와 달라지지 않는다.
- ② B당은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화된다.
- ③ C당은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의석수가 증가한다.
- ④ D당은 개편안을 적용하여도 현재와 같이 의석을 확보할 수 없다.
- ⑤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과대 대표되는 정당의 수는 감소한다.

08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1 정치 과정

- (1) 의미: 국민의 요구와 지지가 정책 결정 기구에 투입되어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며 정치 주체에 의하여 평가와 재투입 등 환류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
- (2) 정치 과정의 체계



(3) 민주적 정치 과정

- ① 시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정치 참여
- ②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언론 등 다양한 정치 주체의 참여
- ③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정책에 반영

2 정치 참여와 태도

- (1) 정치 참여의 의미: 시민들이 국가 기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행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인 모든 활동
- (2) 정치 참여의 의의
 - ① 국가 기관의 정책 결정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함.
 - ② 정치권력의 감시 및 통제를 통한 정치권력의 남용을 방지함.
 - ③ 정치적 의견의 반영으로 정치적 효능감을 높임.
 - ④ 대의 민주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 주권을 실현함.
- (3) 정치 참여의 유형

① 선거

- 대표 선출을 위하여 후보자에게 또는 정당에 투표
- 후보자 공약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표출하거나 후보자의 선거 운동에 참여

② 독자 투고: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언론 매체를 통해 제시

③ 청원: 국가 기관에 자신의 요구 사항을 일정한 형식의 문서로 제출

④ 정당에 가입하여 다양한 활동에 참여

⑤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이익 집단의 구성원이 되어 정치 과정에 참여

⑥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조직한 시민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 정치 과정에 참여

(4) 현대 사회의 정치 참여: 오늘날 정치 참여는 선거 등 제도적 참여 이외에도 여러 사회 조직이나 누리 소통망(SNS)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해짐.

(5) 정보화 시대의 정치 참여: 정보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전자 투표, 전자 공청회, 누리 소통망(SNS) 등으로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완화할 수 있음.

3 정당을 통한 정치 참여

(1) 정당의 의미와 특징

- ① 의미: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의 획득과 유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강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

② 특징

-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함.
- 특수한 이익보다 공익을 도모함.
- 선거를 통해 국민의 평가를 받음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짐.
-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함.

(2) 정당의 기능

- ① 정치적 충원
- ② 여론의 형성과 집약
- ③ 정치 사회화
- ④ 정부와 의회의 매개
- ⑤ 정부 정책의 비판과 감시

(3) 정당 제도

- ① 일당제: 정권 획득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 하나만 있는 것
- ② 복수 정당제: 양당제, 다당제

구분	양당제	다당제
의미	정권 교체가 가능한 대표적인 두 정당이 존재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3개 이상 존재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국 안정에 기여 • 강력한 정책 추진 가능 • 정치적 책임 소재 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국민의 의견 반영 • 소수의 이익 보호 • 정당 간 대립 시 중재 용이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국민의 의견 반영 곤란 •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 • 양당 간 대립 시 중재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력한 정책 수행 곤란 • 정치적 책임 소재 불분명 • 군소 정당 난립 시 정국 불안정 우려

4 이익 집단·시민 단체·언론을 통한 정치 참여

(1) 이익 집단을 통한 정치 참여

- ① 이익 집단의 의미: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특수 이익 실현을 위해 결성한 단체(압력 단체)

② 이익 집단을 통한 정치 참여의 특징

-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당 정치의 한계 보완
-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

(2) 시민 단체를 통한 정치 참여

- ① 시민 단체의 의미: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구성한 단체

② 시민 단체를 통한 정치 참여의 특징

- 비영리성을 바탕으로 공익을 추구하여 사회의 건전한 발전 주도
- 사회 문제 등에 대한 비판과 해결책을 제시하여 대의제 보완

(3) 언론을 통한 정치 참여

- ① 언론의 의미: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등과 같은 대중 매체를 통해 사실을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

② 언론의 기능: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 의제 설정 및 여론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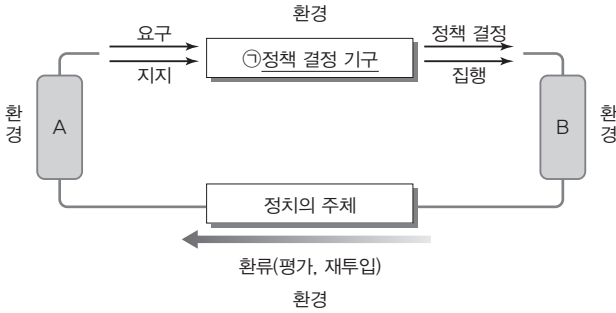
③ 언론을 통한 정치 참여 방법

- 언론 매체를 통해 정치적 견해 제시(독자 투고, 제보 등)
- 언론 매체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

01

▶ 23063-0067

그림은 이스턴(Easton, D.)이 제시한 정치 과정 모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입법부와 달리 사법부는 ①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A에는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 표출도 포함된다.
- ③ B의 사례로 정당의 공천을 들 수 있다.
- ④ 민주화 정도가 높을수록 A에 비해 B가 활발하게 나타난다.
- ⑤ B와 달리 A는 경제, 문화 등 정치 외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02

▶ 23063-0068

시민의 정치 참여를 바라보는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시민의 정치 참여는 대의제하에서 필수적이다. 개별 시민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비현실적인 가정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데서 생기는 실수보다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데서 생기는 실수가 더 적을 것이다.

을: 정치적으로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시민의 정치 참여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이들은 대체로 자기 자신이나 사회의 최선의 이익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 잘못된 지도자의 선전에 영향도 받기도 쉬우므로 이들의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를 해칠 수도 있는 것이다.

보기

- ㄱ. 갑은 시민의 정치 참여 활성화가 정치적 효능감을 낮출 수 있다고 본다.
- ㄴ. 을은 판단이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 정치 참여가 초래할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 ㄷ. 갑은 을에 비해 시민의 정치 참여를 증진하는 제도 마련에 우호적일 것이다.
- ㄹ. 을은 갑과 달리 정치에 참여하여 의사를 반영하려는 시민의 능동적인 태도를 강조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03

▶ 23063-0069

시민의 정치 참여 사례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갑은 국회 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에 투표하였다.
 (나) 을은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 자치 단체 누리집 게시판에 분리수거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는 글을 작성하였다.
 (다) 병은 환경 운동 단체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원들과 함께 거리에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 ① (가)에서는 (나)에서와 달리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활용되었다.
- ② (나)에서는 (가)에서와 달리 정책 결정 기구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활용되었다.
- ③ (다)에서 활용된 방법이 (나)에서 활용된 방법에 비해 시공간적 제약이 작다.
- ④ (가), (나)에서는 (다)에서와 달리 개인적 정치 참여 유형에 속하는 방법이 활용되었다.
- ⑤ 정치 과정에서 (가)는 투입에 해당하고, (나), (다)는 산출에 해당한다.

04

▶ 23063-0070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치 참여의 의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정보와 관련 분야의 지식을 얻을 수 있고, 해결 방안을 둘러싼 다양한 견해가 있음을 깨닫게 되며, 정책이 입안되고 결정되는 절차를 알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정치 참여를 통해 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기르고 타인과 연대하는 법 등도 익힐 수 있다.

- ① 정치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한다.
- ②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해소한다.
- ③ 정치 사회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 ④ 정책 집행에 드는 비용 감소에 기여한다.
- ⑤ 시민의 의사에 기반을 둔 정책 결정을 유도한다.

05

▶ 23063-0071

표는 정치 참여 집단 A~C를 질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질문	답변		
	A	B	C
자기 집단의 특수 이익보다 공익의 실현을 우선시하는가?	㉠	㉡	㉢
자신의 활동 결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	㉣	㉤	㉥
(가)	아니요	아니요	예

- ① ㉠~㉥에 들어갈 답변 중 '예'는 4개이다.
- ② A가 이익 집단이라면 ㉢, ㉥에 들어갈 답변은 같다.
- ③ ㉡에 들어갈 답변이 '예'이고 ㉣, ㉥에 들어갈 답변이 다르다면, B는 시민 단체이다.
- ④ ㉡, ㉢, ㉥에 들어갈 답변이 같다면, B는 C와 달리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 ⑤ (가)에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06

▶ 23063-0072

갑국의 정당 제도 유형에 비해 을국의 정당 제도 유형이 갖는 단점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국 의회의 정당별 의석률>

정당	A당	B당	C당	D당
의석률(%)	52	45	2	1

<을국 의회의 정당별 의석률>

정당	가당	나당	다당	라당
의석률(%)	31	26	23	20

보기

- ㄱ. 강력한 정책 추진이 어렵다.
- ㄴ.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곤란하다.
- ㄷ.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가 어렵다.
- ㄹ. 정책 결정에 관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07

▶ 23063-0073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교사: 오늘은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해 공부했어요. 1모듬은 A, 2모듬은 B, 3모듬은 C에 속하는 집단의 활동을 보도한 외국 뉴스를 휴대 전화로 검색해서 각 모듬 대표가 제목만 발표해 보세요.
 1모듬: 저희는 갑국의 뉴스 <여당, 군 현대화를 위한 특별 예산 편성 추진>으로 하겠습니다.
 2모듬: 저희는 을국의 뉴스 <총 가진 착한 사마리아인이 범죄 막는다는 믿음은 허구, 총기 폭력 반대 시민 모임 거리 행진 주도>로 하겠습니다.
 3모듬: 저희는 병국의 뉴스 <실질 임금 최근 20년 내 최대폭 감소로 집배원 노동조합 파업 예고>로 하겠습니다.
 교사: 1모듬은 발표 내용이 적절한데, 2모듬과 3모듬은 서로 발표 내용을 맞바꾸면 좋겠네요.

- ① A는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② B는 자발성과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한다.
- ③ C는 공익보다 자기 집단의 특수 이익을 우선시한다.
- ④ A는 C와 달리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 ⑤ C는 B와 달리 정치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다.

08

▶ 23063-0074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회자: ㉠ 공천을 위한 정당의 예비 선거에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 찬성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당 내 실력자나 특정 파벌 집단이 공천을 통해 당을 통제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 의회 의원들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의정 활동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의회가 진정한 대의 기구로서 기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을: 반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정 활동 설명회와 각종 행사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할 기회가 많은 현역 의회 의원에 비해 당내 정치 신인들이 불리해지고, 의회 의원들이 의정 활동보다 지역 유권자 관리에 치중하게 되어 선거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기

- ㄱ. 갑은 ㉠이 정당의 민주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 ㄴ. 을은 ㉠이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낮출 수 있다고 본다.
- ㄷ. 갑은 을과 달리 ㉠이 의회의 여론 집약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본다.
- ㄹ. 을은 갑과 달리 ㉠이 당내 후보자 간 기회의 평등을 저해할 것으로 본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09

▶ 23063-007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서술형 평가

A와 B 중 A에만 해당하는 내용을 세 가지 서술하시오. (옳은 내용 1개당 1점, 총 3점)

<갑의 답안>

구분	내용	점수
1	자기 활동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	㉠
2	공익보다 자기 집단의 특수 이익을 우선시한다.	
3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을의 답안>

구분	내용	점수
1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2점
2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가)	

보기

- ㄱ. ㉠은 '1점'이다.
- ㄴ. B의 사례로 노동조합을 들 수 있다.
- ㄷ. A는 B와 달리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 ㄹ. (가)에 '비영리성을 바탕으로 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 23063-0076

시민의 정치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여론 조사 기관이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부 지출에 대한 질문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해 보았다.

(1) “당신은 빈곤자에 대하여 정부 지출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당신은 복지 수혜자에 대하여 정부 지출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들은 질문 (1)에 대해 과반수가 현재보다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질문 (2)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30%에 불과하였다. 이는 응답 결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에 일정 정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오늘날 언론은 수많은 여론 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있고, 시민은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대부분 언론을 통해 얻고 있다. 시민들은 언론이 여론 조사 결과 보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적 쟁점에 대해 특정 여론이 형성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하며, 언론이 전달하는 내용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어서는 안 된다.

- ①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 여론의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
- ② 시민들은 언론이 정치권력과 결탁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 ③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언론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④ 시민들은 사회적 쟁점에 대해 언론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 ⑤ 시민들은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1 민법의 의미와 기능

(1) 민법의 의미

- ① 의미: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종류와 내용을 다루는 대표적인 사법
- ② 사법으로서의 민법: 법이 규율하는 생활 관계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민법은 사법에 해당함.

구분	공법	사법
의미	국가 기관과 개인 간, 국가 기관 간의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적용 사례	범죄인에게 형벌 부과 등	부동산 매매 계약, 혼인과 이혼 등
종류	헌법, 형법 등	민법, 상법 등

③ 민법의 규율 대상: 재산 관계, 가족 관계 등

구분	재산 관계	가족 관계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관계 • 재산권의 종류, 계약의 종류와 내용, 계약 위반 시의 배상 문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나 자녀 등의 가족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관계 • 혼인, 이혼, 유언, 상속 등
규율 대상 사례	개인과 개인 간의 매매 계약 체결	가족 간의 법정 상속

④ 민법의 구성

- 우리나라 민법은 5편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원칙은 제1편 총칙에서 다루고, 사인(私人) 상호 간의 재화와 용역을 획득하고 지배하는 재산 관계는 제2편 물권과 제3편 채권에서 규율함.
- 혼인 및 이혼, 부모와 자식의 관계 및 상속 등의 가족 관계는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에서 규율하고 있음.

(2) 민법의 기능

- ① 법의 일반 원칙 제시: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등 법의 일반 원칙 규정 → 사법적 생활 관계의 행위 기준 제시
- 신의 성실의 원칙: 사회 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
-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 행사가 외관상으로는 적법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의 사회적·공공성에 반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적 효과를 부여할 수 없다는 원칙
- ② 재산 관계의 규율: 재산권의 개념과 대상, 계약, 불법 행위 등 규정 → 개인의 경제 활동과 재산적 권리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규율함.
- ③ 가족 관계의 규율: 출생, 혼인, 입양, 유언, 상속 등 규정 → 우리 사회의 가족 및 친족과 연관된 법률관계를 규율함.

2 근대 민법의 세 가지 기본 원칙

- (1) 근대 민법의 기본 이념: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을 기본 요소로 하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정신을 기반으로 함.
- (2)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

<p>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해 사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타인은 함부로 이를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는 원칙 • 사유 재산권 중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유권을 전면에 내세워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도 함.
<p>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은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원칙 •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함.
<p>과실 책임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 • 자신의 행동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함.

3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수정·보완

(1)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수정 배경

- ①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19세기 말경부터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빈부 격차 심화, 환경 오염, 독과점 등의 부작용 발생
- ②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에 따른 법 적용의 문제점: 사회·경제적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함. → 사회적 약자의 보호 필요성 대두

(2)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수정

<p>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에 공공의 개념을 적용하여 소유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 • 개인의 소유권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임을 의미함.
<p>계약 공정성의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공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 • 계약 과정에서 경제적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을 줄이고자 함.
<p>무과실 책임의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에게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원칙 • 환경 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 원인자나 제조업자에게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

01

▶ 23063-0077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법은 법이 규율하는 생활 관계의 성격에 따라 A와 B로 구분할 수 있다. A는 국가 기관과 개인 간, 국가 기관 간의 공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의미하며, B는 개인 상호 간 사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의미한다.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종류를 내용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B에 해당하며 민법의 규율 대상에는 ㉠ 등이 있다.

보기

- ㄱ. 헌법은 A, 형법은 B에 해당한다.
- ㄴ. A는 B와 달리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와 그 구성원 사이의 통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포함한다.
- ㄷ. B는 A와 달리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 ㄹ.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는 모두 ㉠에 들어갈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2

▶ 23063-0078

밑줄 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민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고철을 을에게 납품하였다. 그런데 납품받은 고철 일부가 방사능에 오염된 것을 확인한 을이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갑이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유통시킴으로써 을이 방사능 오염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경우 갑이 방사능 오염 사실을 모르고 유통시켰더라도 환경 정책 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갑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① 소유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 ② 개인은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 ③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해 국가나 다른 개인은 함부로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 ④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공정하지 못한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⑤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03

▶ 23063-0079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교사: <카드 1>~<카드 6>에는 서로 다른 민법의 기본 원칙이 적혀 있습니다.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 카드 1장과 해당 원칙이 수정·보완된 원칙 카드 1장을 골라 바르게 연결해 보세요.

<카드 1>	<카드 2>	<카드 3>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가)	(나)
<카드 4>	<카드 5>	<카드 6>
(다)	(라)	과실 책임의 원칙

■ 학생 갑, 을, 병의 선택

구분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	수정·보완된 원칙
갑	<카드 6>	<카드 2>
을	<카드 3>	<카드 4>
병	<카드 1>	<카드 5>

교사: 갑, 병은 바르게 연결했고, 을은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과 수정·보완된 원칙의 순서를 바꿔서 연결했어요.

보기

- ㄱ. 제조물 제조상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에게 (가)가 적용될 수 있다.
- ㄴ. (나)는 개인은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원칙이다.
- ㄷ.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약관은 (다)에 따라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ㄹ. (라)는 소유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04

▶ 23063-0080

민법의 기본 원칙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신문
2000년 00월 00일

△△시에 토지를 소유한 갑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조건을 대부분 갖추고 있어 청정 에너지 생산 사업을 위한 토지 개발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시는 토지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해발 40m 미만인 토지로 제한하고 있는 △△시 도시 계획 조례에 따라 해당 토지 개발이 부적합하다고 결정하였다. 갑은 △△시의 결정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A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시 관계자는 토지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해발 40m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녹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균형적인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B에 부합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① A는 사회적 약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등장하였다.
- ②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업자가 지는 책임은 A가 적용된다.
- ③ A는 법률관계의 형성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 ④ B에 따르면 개인의 소유권도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이다.
- ⑤ B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05

▶ 23063-0081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개인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개인도 사회의 일원인 이상 권리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민법은 개인의 권리 행사에 대한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2조에 나타난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 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2조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보기

- ㄱ. ㉠은 사회 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ㄴ. '농사를 짓기로 하고 농지를 매수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다며 농지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에 위반된다.
- ㄷ. ㉡은 권리 행사가 외관상으로는 적법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성·공공성에 반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없을 때 법적 효과를 부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 ㄹ. ㉠은 ㉡과 달리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에 따른 법 적용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등장한 원칙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06

▶ 23063-0082

민법의 기본 원칙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A와 B는 각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므로 (가)에 따라 계약은 유효해.

을: 아니야. A와 B의 계약이 당사자의 공박이나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면 (나)에 따라 계약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사례>
토지 거래 경험이 전혀 없던 A는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몹시 곤란해지자 어머니로부터 상속 받은 토지를 팔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B는 해당 토지를 시세보다 매우 싼 가격에 매매하는 계약을 A와 체결하였다.

- ① (가)에 따르면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 ② (나)는 경제적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계약 체결 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개인의 소유권 행사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국가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나)는 (가)에 비해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기초한 계약의 자유를 강조한다.
- ⑤ (가), (나)는 모두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을 수정·보완한 원칙이다.

1 계약의 이해

- (1) 계약의 의미: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합의 또는 약속
- (2) 계약의 성립 및 효력 발생
 - ① 계약의 성립 시점: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인 청약과 이를 받아들일겠다는 의사 표시인 승낙이 합치된 때
 - ② 계약이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 계약 당사자가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둘 이상의 계약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 표시(청약과 승낙)의 합치
 - 계약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적법해야 함.
 - 계약의 내용이 강행 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 (3) 계약의 효력과 채무 불이행
 - ①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함.
 - ② 채무 불이행: 채무자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함. 이 경우 채권자는 법률에 따라 상대방에게 강제적으로 계약을 이행하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미성년자의 계약

(1) 미성년자의 의미와 법률 행위

의미	19세 미만인 자
법적 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 능력자에 해당하여 원칙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음. •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일단 유효하지만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용돈 등)의 처분 행위 • 법정 대리인에 의해 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 • 임금 청구 행위

(2)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

확답을 촉구할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응답하도록 촉구할 수 있음. •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일정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됨.
철회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그 계약을 추진할 때까지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 •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법률 행위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만 행사 가능함.
취소권 행사의 배제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서 자신을 행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믿게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 대리인의 취소권이 배제됨.

3 불법 행위와 손해 배상

(1) 불법 행위

- ① 의미: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
- ② 성립 요건

가해 행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해야 함.
고의 또는 과실	가해 행위와 관련하여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함.
위법성	가해자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에 위반되어야 함.
손해의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함. • 재산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침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정신적 손해도 포함됨.
인과 관계	가해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함.
책임 능력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으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함.

(2) 특수 불법 행위

- ① 의미: 일반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과는 달리 특수한 성립 요건이 정해져 있는 불법 행위
- ② 유형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 상실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법정 감독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음.
사용자의 배상 책임	피용자가 사무 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음.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점유자가 일차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 책임이 면제되면 공작물 등의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짐.
동물의 점유자 책임	점유하고 있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동물의 점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음.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여러 사람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3) 손해 배상

- ① 의미: 발생한 손해를 전보(填補)해 주는 것
- ② 손해 배상 방식
 - 금전 배상이 원칙이며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함.
 - 명예 훼손의 경우 법원은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음.
 - 합의 이후에 발생한 손해(후발 손해)에 대해서도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의 경우 추가로 배상 청구 가능

01

▶ 23063-0083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 의사 표시가 내용상 합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B 소유의 미술품을 살 테니 자신에게 팔아달라는 의사 표시를 하고, 이에 B가 A에게 ㉡미술품을 팔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A와 B 사이에 미술품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이러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간 자유롭고 대등한 지위가 전제되어야 하며, 계약 당사자가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계약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적법해야 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 ① A와 B 사이의 미술품 매매 계약에서 ㉠은 '승낙', ㉡은 '청약'이다.
- ②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과 ㉡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A와 B의 미술품 매매 계약은 성립한다.
- ③ 미성년자는 ㉢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단독으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④ ㉣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인식·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을 의미한다.
- ⑤ 미성년자가 용돈의 범위를 초과하여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는 계약은 ㉤에 해당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02

▶ 23063-0084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례 1〉

〈사례 2〉



〈사례 1〉은 계약 당사자나 특정인의 주장과 상관없이 법률 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례 2〉는 일단 유효한 법률 행위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가 있으면 법률 행위가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입니다.

- ① (가) - 상대방의 강요나 협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② (가) - 의사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③ (가) - 미성년자가 성인인 것처럼 신분증을 위조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④ (나) -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⑤ (나) -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

03

▶ 23063-0085

다음 사례에서 법원이 밑줄 친 ㉠과 같이 판단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적 능력과 판단 능력이 유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갑(17세)은 친구인 을(17세)이 시켜 A 업체 사장과 휴대 전화 서비스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갑이 A 업체 사장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교부받은 휴대 전화를 팔아 그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갑의 법정 대리인 병은 갑과 A 업체 사장과의 휴대 전화 서비스 가입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병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은 갑이 계약서에서 정하는 원고의 채무에 관한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갑에게는 휴대 전화 서비스 가입으로 인한 통신비나 단말기 대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일련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휴대 전화 서비스 가입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① 갑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사 무능력 상태였기 때문이다.
- ② 갑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반사회적이고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 ③ 갑이 을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다.
- ④ 갑이 병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다.
- ⑤ 갑의 청약과 A 업체 사장의 승낙이 합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이다.

04

▶ 23063-0086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돌잔치 전문점을 운영하는 갑은 돌잔치에 사용할 잔칫상을 을에게 대여해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돌잔치 당일 갑의 회사 직원 병은 을에게 대여해 줄 잔칫상을 배달하던 중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개의 소유자인 정은 당시 해외 출장 중이었고, 정은 친구 무가 산책을 위해 개를 데리고 나왔다가 휴대 전화를 보느라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였다. 이로 인해 병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을은 돌잔치에 사용할 잔칫상을 받지 못한 채 자녀 돌잔치를 치르게 되었다.

- ① 갑은 을에게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진다.
- ② 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 ③ 정은 병에게 무과실 책임을 진다.
- ④ 정과 무는 연대하여 병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 ⑤ 무의 불법 행위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정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05

▶ 23063-0087

밑줄 친 ㉠에 해당하는 사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불법 행위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 행위를 말한다. 불법 행위에 관하여 민법은 일반 불법 행위에 관한 규정(제750조)과 특수 불법 행위에 관한 규정(제755조~제760조)을 두고 있다. 특수 불법 행위는 일반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과는 달리 특수한 성립 요건이 정해져 있는 불법 행위이다. 특수 불법 행위 중 공작물 등의 소유자 책임과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제외하고는 고의·과실의 증명 책임을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에게 전환한 이른바 중간적 책임이다. 즉 그러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감독자 등의 고의·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감독자 등이 ㉠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

보기

- ㄱ. 책임 능력이 있는 갑(18세)이 타인의 차량을 파손하자 갑의 법정 대리인이 이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 ㄴ. 친구 소유의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을(20세)이 개의 목줄을 놓쳐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자 을이 이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 ㄷ. 피자 가게의 창틀이 떨어져 행인이 다치자 상가를 임차하여 피자 가게를 운영하던 병(45세)이 이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 ㄹ. 치킨 가게 직원이 치킨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행 중 부주의로 행인을 치어 상해를 입히자 치킨 가게 사장 정(30세)이 이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06

▶ 23063-0088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 신문
2000년 00월 00일

아파트 놀이터 내 키펀드·자전거 입장 통제

△△시 소재 A 아파트 단지 내에서 키펀드를 타던 갑(7세)은 놀이터에서 놓고 있던 을(5세)과 충돌하여 을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인근의 B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놀이터에서 자전거를 타던 병(17세)이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정(12세)과 충돌하여 정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처럼 아파트 놀이터에서 키펀드와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잦아 이 지역 아파트들은 안전 수칙을 마련하고 키펀드와 자전거의 놀이터 입장을 통제하고 있다.

* 갑의 법정 감독 의무자는 갑의 부모이고, 병의 법정 감독 의무자는 병의 부모임.

- ① 갑에게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갑의 부모는 을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갑의 부모는 갑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더라도 을에게 특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 ③ 병에게 고의가 없다면 병은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병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병의 부모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갑과 갑의 부모는 을에게, 병과 병의 부모는 정에게 각각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진다.

07

▶ 23063-0089

(가), (나)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제가 가족 여행을 가기 위해 당신이 운영하는 펜션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약하신 날짜에 맞춰서 펜션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겠습니다.

<가족 여행 당일>

오늘 펜션 이용하실 때 바베큐용 숯불과 그릴도 필요하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예약한 펜션을 이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

제가 자녀 생일 파티에 쓸 수제 케이크를 예약 주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약하신 날 생일 파티 시간에 맞춰 케이크를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생일 파티 당일>

주문한 케이크는 언제 오나요?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주문하신 케이크를 배달하던 직원 C가 교통사고를 당해 케이크를 배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기

- ㄱ. (가)에서 갑은 청약, 을은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였고, (나)에서 A는 청약, B는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
- ㄴ. (가)에서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은 갑에게 의무 없이 권리만 발생하는 계약이므로 갑은 을에게 어떠한 손해 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 ㄷ. (나)에서 A와 B의 계약이 구두로만 이루어졌다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ㄹ. (나)에서 C가 아닌 B가 A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08

▶ 23063-0090

다음 법률 상담 사이트의 질문에 대해 법적으로 옳은 답변을 한 사람은?

공지사항 게시판 Q&A

Q: 저는 A가 소유한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베란다에 있는 창문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A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흔들리던 창문이 떨어졌고 지나가던 행인이 떨어진 창문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저와 A 중 누구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 ↳ 갑: 질문자에게 고의가 없으므로 질문자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을: 건물 소유자인 A가 일차적인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 ↳ 병: 질문자와 A는 공동 불법 행위에 따른 연대 배상 책임을 집니다.
- ↳ 정: 질문자와 A 모두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무: 질문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A가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09

▶ 23063-0091

자료에 제시된 [사례]를 <상황 1>~<상황 3>에 적용할 경우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사례] 갑(17세)은 시계 판매업자 을(30세)로부터 손목시계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질문	<상황 1>	<상황 2>	<상황 3>
갑이 처분이 허락된 재산(용돈)의 범위 내에서 손목시계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가?	예	아니요	아니요
계약 당시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는가?	아니요	아니요	예
계약 당시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위조하여 을을 속였는가?	아니요	예	아니요

- ① <상황 1>에서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상황 2>에서 을은 갑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③ <상황 3>에서 갑의 법정 대리인은 갑과 달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상황 3>과 달리 <상황 2>에서 을은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⑤ <상황 1>, <상황 2>, <상황 3> 모두에서 갑과 갑의 법정 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10

▶ 23063-0092

다음 제시된 연극 시나리오 내용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연극 ○○○ 시나리오>

#7

대학생인 갑(22세)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말에 을의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런데 서빙 도중 넘어지면서 뜨거운 국물을 손님 병에게 쏟아 병이 화상을 입었다. ...(<후략>).

#8

힘겹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갑은 정 소유의 건물을 보며 자신도 언젠가 성공해서 꼭 건물주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건물 2층 난간이 떨어지면서 갑이 크게 다쳤다. 당시 건물 2층은 무가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 중이었다. ...(<후략>).

보기

- ㄱ. 갑과 을은 병에게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진다.
- ㄴ. 갑에게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병은 을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ㄷ. 무는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한다.
- ㄹ. 갑은 병에게, 정은 갑에게 각각 무과실 책임을 진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 23063-0093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례	법원의 판결
갑과 을이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던 중 병(25세)이 데리고 산책하던 맹견이 달려들자 이를 피하다가 을이 넘어져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음. 병은 해당 맹견이 배우자 정의 소유이므로 자신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병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있으므로 병은 을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학원을 다니던 A(18세)가 같은 학원에 다니던 B(20세)를 폭행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힘. B는 A의 법정 감독 의무자인 C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고, C는 자신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C의 A에 대한 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C는 일반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C에게는 A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

보기

- ㄱ. 법원은 병이 동물의 점유자로서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 ㄴ. 법원은 A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ㄷ. C에게 A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C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로서 B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 ㄹ. 법원은 C와 달리 병에게 무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 23063-009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 전자 제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갑은 고가의 태블릿 PC를 판매하는 계약을 을(17세)과 체결하였다. 이후 갑은 ① 철회권을 행사하여 해당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 자전거 판매점을 운영하는 병은 고가의 자전거를 판매하는 계약을 정(16세)과 체결하였다. 이후 병은 ②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행사하였고, 일정 기간이 지나 해당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었다.

- ① 갑은 을과 계약 당시 을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것이다.
- ② 을의 법정 대리인은 갑과 을의 계약에 대해 추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 ③ 을은 정과 달리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하였다.
- ④ 병이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정은 정의 법정 대리인과 달리 계약을 취소할 수 없었다.
- ⑤ 갑은 을에게 ①을 행사하였고, 병은 정에게 ②을 행사하였을 것이다.

1 혼인

(1) 의미: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것으로서 일종의 계약에 해당함.

(2) 성립 및 유효 요건

실질적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혼인에 합의할 것 민법에서 규정한 혼인할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할 것 민법에서 규정한 혼인할 수 없는 친족 관계가 아닐 것 다른 사람과 이미 혼인 상태인 중혼(重婚)이 아닐 것
형식적 요건	혼인 신고를 할 것 → 법률혼주의

(3) 법률 효과

- ① 친족 관계의 발생(배우자 및 인척 관계의 발생)
- ② 부부 상호 간의 동거, 부양, 협조 등의 의무 발생
- ③ 부부 별산제 적용, 일상 가사에 대한 대리권 발생
- ④ 18세인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한 경우에는 민법상 성년으로 의제되어 행위 능력이 인정됨.

2 이혼

(1) 의미: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해소시키는 것

(2) 유형

① 협의상 이혼

의미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이혼
절차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 → 이혼 숙려 기간 →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 이혼 신고
효력 발생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의 효력 발생

② 재판상 이혼

의미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로써 이루어지는 이혼으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청구에 의해 가능함.
절차	재판상 이혼 청구 → 이혼 조정 → 이혼 소송 → 이혼 판결 → 이혼 신고
이혼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효력 발생	법원의 이혼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혼의 효력 발생

(3) 법률 효과

- ① 혼인에 의해 발생한 친족 관계 소멸
- ② 미성년인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와 그 자녀에게 면접 교섭권이 발생함.
- ③ 혼인 생활 중 취득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 발생
- ④ 이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3 친자 관계(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1) 친생자와 양자

친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생한 혈연관계의 자녀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임. 법률혼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 인지 절차를 거쳐 친자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
양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입양된 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짐. 친양자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법원에 미성년자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봄. - 일반 입양과 달리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원칙적으로 입양 전의 친족 관계는 종료됨.

(2) 친권

의미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내용	자녀에 대한 보호와 교양의 권리와 의무, 거소 지정권,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 등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임.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협의하여 친권자를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가정 법원의 선고에 의해 친권이 상실·정지·제한될 수 있음.

4 유언과 상속

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발생함. 유언의 방법: 자필 증서, 녹음, 공정 증서, 비밀 증서, 구수 증서
상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미: 자연인(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가 남긴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타인(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도 승계됨.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유증이 이루어지나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 유류분 제도: 유언을 따르되 일정 범위의 법정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법정 상속 순위: 1순위-직계 비속, 2순위-직계 존속, 3순위-형제자매, 4순위-4촌 이내 방계 혈족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음. 같은 순위 상속인 간의 상속분은 균분으로 함.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나,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을 받음.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상속을 받음.

01

▶ 23063-0095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 중 하나임.)

■ 혼인의 성립 요건

A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자 간 자유로운 혼인 의사 합의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

- ① A만 갖춘 경우에도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경우 다른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된다.
- ② 사실혼은 A를 갖추지 않고 B만 갖춘 상태를 의미한다.
- ③ B만 갖춘 경우에는 A만 갖춘 경우와 달리 부부 상호 간의 동거·협조·부양 의무가 발생한다.
- ④ (가)에 '당사자 모두 성년자에 해당할 것'이 들어갈 수 있다.
- ⑤ (나)에 '혼인 신고를 할 것'이 들어갈 수 있다.

02

▶ 23063-009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재판상 이혼, 협의상 이혼 중 하나임.)

서술형 평가

3학년 0반 이름: □□□

이혼의 유형 A와 B 중 A에만 해당하는 내용을 세 가지 서술하시오. (옳은 내용 1개당 1점, 총 3점)

구분	답안	총점
1	혼인에 의해 발생한 친족 관계가 소멸된다.	2점
2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3	(가)	

- ① A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하다.
- ② B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이혼이다.
- ③ A는 B와 달리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 ④ B는 A와 달리 법원을 거치지 않고 이혼이 가능하다.
- ⑤ (가)에 '이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가 들어갈 수 있다.

03

▶ 23063-0097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가)	갑(여)과 을(남)은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어 함께 살게 됨.
↓ 1년 후	
(나)	갑과 을은 결혼식을 올림.
↓ 2년 후	
(다)	갑과 을 사이에 병이 태어남.
↓ 3년 후	
(라)	갑과 을은 혼인 신고를 함.
↓ 3년 후	
(마)	갑과 을은 지인의 자녀인 정을 친양자로 입양함.

- ① (가)에서 갑과 을에게 친족 관계가 발생한다.
- ② (나)에서 갑과 을은 (가)에서와 달리 혼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
- ③ (다)에서 을이 병과 친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 (라) 이전과 달리 (라) 이후부터 갑과 을에게 일상 가사 대리권이 발생한다.
- ⑤ (마)에서 정은 갑과 을의 혼인 외의 출생자로 간주된다.

04

▶ 23063-0098

다음에 제시된 드라마 내용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공지사항 게시판 Q&A

*** 드라마 ○○ ***

• 이번 회 요약

A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갑은 집안의 심한 반대로 A와 헤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뒤늦게 A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갑은 A를 찾아 나섰지만 A는 이미 해외로 출국한 상황이었다. 30년이 지나 대기업 회장이 된 갑은 현재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 을과 자녀 병, 정과 함께 살고 있다. A를 잊지 못했던 갑은 수소문 끝에 A를 찾았고, 갑과 A 사이에 태어난 B도 만나게 되었다. 이후 갑은 비서를 통해 B를 인지하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A와 B에게 각각 자신의 전 재산의 50%씩을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

• 다음 회 예고

갑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는데 ……

보기

- ㄱ. 갑이 B를 인지한다면 B는 갑의 양자로 간주된다.
- ㄴ. 갑의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갑 사망 시 을, 병, 정은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취득할 수 있다.
- ㄷ. 갑의 유언이 무효이고 갑이 B를 인지한 경우 갑 사망 시 을은 갑의 재산의 1/3을 상속받는다.
- ㄹ. 갑의 유언이 무효이고 갑이 B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 갑 사망 시 병과 정은 각각 갑의 재산의 1/3을 상속받는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05

▶ 23063-0099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정 법원

판 결

사건 △△△△드단△△△△△

원고 갑

피고 을

사건 본인 병

...(중략)...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

3. 사건 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 위 판결은 확정되었음.


- ① 갑과 을은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이혼을 하였다.
- ② 갑과 을의 이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 □□ 가정 법원은 을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④ 을은 혼인 중 취득한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을과 병은 면접 교섭권을 가진다.

06

▶ 23063-0100

교사의 질문에 대해 옳지 않은 답변을 한 학생은?

A의 의미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
A의 내용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로 거소 지정권, 자녀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관리권 등을 내용으로 함.



A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 ① 갑: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A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② 을: 미성년인 자녀가 법률혼을 한 경우 부모는 해당 자녀에게 A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③ 병: 친양자 입양과 달리 일반 입양의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공동으로 A를 행사합니다.
- ④ 정: 부모가 이혼하면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 법원이 A를 행사할 사람을 지정합니다.
- ⑤ 무: 부 또는 모가 A를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 법원은 A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등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07

▶ 23063-0101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을과 재판상 이혼을 하고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 A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은 병을 만나 재혼(법률혼)을 하였고, 갑과 병 사이에 자녀 B가 태어났으며, B는 병의 성(姓)과 본(本)을 따랐다. 이후 병은 A를 입양하였다. 그림은 병이 A를 입양할 때 받은 법원 판결문의 일부이다.

◇◇ 가정 법원

심 판

사건 ○○○○느단○○○○ 친양자 입양 신청

청구인 병

사건 본인 A

주 문

사건 본인을 청구인의 친양자로 한다.

- ① 입양된 A는 병의 성(姓)과 본(本)을 따른다.
- ② 입양 이후에도 을과 A의 친족 관계는 유지된다.
- ③ 입양된 A에 대한 친권은 갑, 을, 병이 공동으로 행사한다.
- ④ 입양으로 인해 A는 갑과 병의 혼인 외의 출생자로 간주된다.
- ⑤ 입양 이후 을과 병이 사망한다면, A는 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지만 병의 재산은 상속받을 수 없다.

08

▶ 23063-0102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법률혼 관계인 갑과 을 사이에 자녀 A가 태어났다. 이후 갑과 을은 성격 차이로 이혼하게 되었고, A는 을이 양육하게 되었다. 갑은 병과 재혼(법률혼)하였으며, 갑과 병 사이에 자녀 B가 태어났다. 자녀 양육 문제로 자주 다투던 갑과 병은 별거하게 되었고, 갑은 어머니 정과 둘이서 살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갑은 사망하기 전 아래와 같은 2개의 유언장을 남겼으며, (가), (나)는 모두 자필로 남긴 유언이다.

(가)

(나)

유언장

유언자 성명: 갑
 주민 번호: xxxxxxx-xxxxxxx
 주소: ○○도 ○○시 ○○로 ○○
 작성일: 2023년 1월 2일

나의 전 재산을 A에게 준다.

유언장

유언자 성명: 갑
 주민 번호: xxxxxxx-xxxxxxx
 주소: ○○도 ○○시 ○○로 ○○
 작성일: 2023년 7월 3일

나의 전 재산을 정에게 준다.

보기

- ㄱ. (가)만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경우 을과 정은 모두 A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ㄴ. (나)만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경우 2023년 7월 3일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
- ㄷ. (가)와 (나) 모두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경우 B는 정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가)와 (나) 모두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병과 B에게만 법정 상속이 이루어진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9

▶ 23063-0103

다음 사례에 대한 질문에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은?

A와 B는 혼인의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함께 살던 중 자녀 C가 태어났다. 5년 후 B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된 A는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고, 법원의 이혼 판결에 따라 C에 대한 양육권은 A가 가지게 되었다.

질문	학생	갑	을	병	정	무
A와 B는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가?		×	×	○	○	×
A는 B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	×	○	○
C에게 B에 대한 면접 교섭권이 발생하는가?		○	×	×	○	○
이혼으로 인해 B와 C의 친자 관계가 종료되는가?		×	○	×	×	○

(○: 예, ×: 아니요)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0

▶ 23063-0104

다음 신문 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신문
2000년 00월 00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 회의를 통과하였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에 대한 일정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인데, 현행 민법상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만큼 유류분 권리가 인정된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에 처음 도입된 것인데 당시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한 것은 농경 사회와 대가족제를 바탕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부양한다는 관념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약 40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는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과거에 비해 형제자매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상호 부양하는 경우가 적어졌으므로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 ① 현행 민법에 따르면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은 동시에 유류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② 민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없다.
 ③ 민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강화된다.
 ④ 민법 일부 개정안은 현행 민법과 달리 가족 간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⑤ 현행 민법과 민법 일부 개정안에서 모두 배우자는 직계 비속보다 더 많은 금액의 유류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11

▶ 23063-0105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남)과 을(여)은 법률혼 후 자녀 A, B를 낳고 살다가 이혼하면서 갑이 B를, 을이 A를 양육하기로 하였다. 이후 갑은 병과 재혼하였고, 갑과 병 사이에서 C가 태어났다. 몇 년 후 갑은 B와 함께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갑과 B가 모두 사망하였다. 사고 당시 갑에게는 채무 없이 18억 원의 재산이 있었고, B에게는 재산이 없었다. 갑과 B는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

구분	갑과 병의 혼인이 사실혼이며, 갑이 C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	갑과 병의 혼인이 사실혼이며, 갑이 C를 인지한 경우	갑과 병의 혼인이 법률혼인 경우
갑이 사망한 후 B가 사망한 경우	(가)	(나)	(다)
B가 사망한 후 갑이 사망한 경우	(라)	(마)	(바)

- ① (가)에서 A는 18억 원을 상속받는다.
- ② (다)에서 을은 4억 원을 상속받는다.
- ③ (라)에서 을의 상속액은 A의 상속액의 1.5배이다.
- ④ (바)에서 병, A, C는 각각 6억 원씩 상속받는다.
- ⑤ (나)와 (마)에서 C의 상속액은 같다.

12

▶ 23063-0106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남)과 을(여)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던 중 자녀 A가 태어났다. 이후 을이 사망하였고, 홀로 A를 양육하던 갑은 병을 만나 결혼하고 혼인 신고도 하였다. 갑과 병 사이에 B가 태어났으며, B는 갑의 성과 본을 따랐다. 몇 년 후 갑과 병은 친구 정 의 자녀 C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다. 또한 갑과 병은 무의 자녀 D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 단, A, B, C, D는 모두 갑의 사망 시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① B는 A와 달리 갑의 친생자이다.
- ② A, B는 모두 갑의 혼인 중의 출생자이다.
- ③ 입양으로 인해 C는 갑의 성과 본을 따른다.
- ④ 입양으로 인해 D는 갑의 혼인 외의 출생자로 간주된다.
- ⑤ 입양 이후 D는 무와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지만, C는 정과의 친족 관계가 유지된다.

1 형법의 의미와 기능

(1) 형법의 의미

- ① 일반적 의미: 범죄와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사 제재(형벌과 보안 처분)를 규정한 법 규범의 총체
 - ② 형식적 의미: '형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된 법률
 - ③ 실질적 의미: 법의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범죄와 그에 대한 형사 제재를 규율하고 있는 모든 법 규범
- 예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2) 형법의 기능

보호적 기능	형법은 개인이나 공동체의 존립을 해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사회적 근본 가치를 보호함.
보장적 기능	형법은 국가가 행사할 형벌권의 내용과 한계를 분명히 하여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

2 죄형 법정주의

(1) 죄형 법정주의의 의미와 등장 배경

- ① 의미: 범죄의 종류와 그 처벌의 내용은 범죄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 원리
- ② 등장 배경: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근대 인권 사상의 요청
- ③ 죄형 법정주의의 의미 변천

근대적 의미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을 할 것인지 성문의 법률에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
현대적 의미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 형식적인 법률의 존재뿐만 아니라 법률 내용의 적정성까지 판단하여 법관과 입법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

(2)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의회에서 제정한 성문의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시행 이전의 행위까지 소급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
명확성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포해야 한다는 원칙
적정성의 원칙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며, 그 내용도 헌법 등에 규정된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을 부과하거나 가중하지 못한다는 원칙

3 범죄의 의미와 성립 요건

(1) 범죄의 의미와 성립

- ① 범죄의 의미: 형법에 의해 금지되어 형벌의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
- ② 범죄의 성립: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2) 범죄의 성립 요건

- ① 구성 요건 해당성: 어떤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법률에서 범죄로 정해 놓은 일정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함.
- ② 위법성
 - 의미: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부정적이라는 판단
 - 위법성 조각 사유: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 →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

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긴급 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구 행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로서 그 처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정당 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③ 책임

- 의미: 위법한 행위에 대해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비난 가능성
- 책임 조각 및 감경 사유

책임 조각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 또는 심신 상실자의 행위, 강요된 행위 등 → 범죄 성립하지 않음.
책임 감경	심신 미약자(형을 감경할 수 있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형을 감경함)의 행위 → 범죄 성립

4 형벌과 보안 처분

(1) 형벌

- ① 형벌의 의미: 범죄자의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을 박탈하는 것
- ② 형벌의 종류

생명형	사형	자유형	징역, 금고, 구류
명예형	자격 상실, 자격 정지	재산형	벌금, 과료, 몰수

(2) 보안 처분

- ① 의미: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사회 질서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형벌의 대안적 제재 수단
- ② 종류: 치료 감호, 보호 관찰, 수감 명령, 사회봉사 명령 등

01

▶ 23063-0107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형법이란 범죄와 범죄에 대한 법률 효과인 ㉠형벌 또는 ㉡보안 처분을 규정하는 법 규범의 총체이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와 형벌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범죄는 형벌의 기초이고, ㉢형벌은 범죄에 대한 법률 효과이다. 한편 형법은 국가의 형벌권에 관한 법이다. 따라서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는 경우 형법은 □(가)에 속한다. 범죄로 인하여 침해된 이익이 개인적 법익인 경우에도 범죄와 처벌은 국가와 범죄자 사이에 제기되는 □(가) 관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보기

- ㄱ. (가)에는 ‘공법’이 들어간다.
- ㄴ. ㉠, ㉡은 모두 범죄를 행한 자에게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응보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ㄷ. ㉢은 ㉠의 대안적 형사 제재 수단이다.
- ㄹ. ㉢은 범죄가 성립되어야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02

▶ 23063-0108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나)에 제시된 법 조항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가) 형법 제 122조(직무 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알선 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기

- 갑: (가)의 법 조항에 따르면 명예형만 단독으로 선고할 수 없습니다.
- 을: (나)의 법 조항에 따르면 자유형과 재산형을 함께 선고해야 합니다.
- 병: (가)의 범죄보다 (나)의 범죄가 더 중(重)죄입니다.
- 정: (가)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고, (나)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입니다.

-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03

▶ 23063-0109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A에 의하여 국가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도 법률이 이를 범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벌할 수 없으며, 그 범죄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않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A는 ㉢국가 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의 최고 원리이다.

- ① ㉠은 의회가 헌법에 규정된 입법 절차에 따라 제정한 법률을 의미한다.
- ② ㉡의 이유는 범죄의 성립 요건 중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이다.
- ③ ㉢은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의미한다.
- ④ A에 따라 관습법을 근거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 ⑤ A에 따라 원칙적으로 형벌 법규를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04

▶ 23063-0110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죄형 법정주의는 법치주의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형식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형법에 의한 개인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그 구성 요건의 범위와 법적 결과를 행위 이전의 법률에 규정하고 법적 안정성과 법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이에 더하여 형법의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와 달리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反)할 가능성이 있다.

보기

- ㄱ. ㉠은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로 표현될 수 있다.
- ㄴ. ㉡은 부당한 법률에 의한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한다.
- ㄷ. ㉠은 ㉡과 달리 법관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 ㄹ. ㉡은 ㉠과 달리 입법자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경계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05

▶ 23063-0111

(가), (나)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가) 법원은 A법 위반으로 기소된 갑에 대해 “갑의 행위는 A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행위에 해당한다.”라며 갑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나) 법원은 B법 위반으로 기소된 을에 대해 “을의 행위 이후에 헌법 재판소에서 B법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였다.”라며 을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보기

- ㄱ. (가)에서 법원은 죄형 법정주의 파생 원칙 중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따라 갑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 ㄴ. 범죄 성립 요건을 고려한다면 (가)에서 갑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이다.
- ㄷ. (나)에서 법원은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B법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을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 ㄹ. 범죄 성립 요건을 고려한다면 (나)에서 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06

▶ 23063-0112

(가)에 들어갈 원칙에 부합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 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 처벌하는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 재판소는 “이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 기관 개설 행위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그 의료 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총원·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함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라며, “이 조항은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가]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 ①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의 내용이 적정해야 한다.
- ② 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 ③ 범죄의 구성 요건과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 ④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 ⑤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07

▶ 23063-0113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지방 법원 형사 항소부는 ㉠도로 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갑은 □□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한 상태로 50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갑은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 운전기사와 다투고, 기사가 도로에서 우회전하기 직전 모서리에 차를 세우고 그대로 자리를 떠나자 차량을 직접 운전했다. 갑은 법정에서 심야인데다 차량이 정차된 지점이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어서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세우는 등의 조치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충분히 예방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도 상당히 커 [가]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갑이 사고를 방지할 다른 방법이 있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동 거리와 경로 등을 보면 차량 통행이 없는 가장 가까운 곳에 차량을 정차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직접 운전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보기

- ㄱ. ㉠은 범죄와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을 규정한 법 규범에 해당한다.
- ㄴ. ㉡은 지방 법원 합의부이다.
- ㄷ. ㉢이 갑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갑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ㄹ. (가)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들어갈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08

▶ 23063-011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분	사건의 쟁점	법원의 판단
(가)	갑은 을의 지갑을 절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갑의 변호인은 갑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가 갑의 가방에 을의 지갑을 넣었다고 주장함.	갑의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
(나)	갑은 을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갑의 변호인은 현재의 부당한 을의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주장함.	갑의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 판결
(다)	갑은 을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갑의 변호인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라고 주장함.	갑의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
(라)	갑은 을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갑의 변호인은 갑이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상실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갑의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 판결

- ① ㉠, ㉡에 모두 ‘유죄’가 들어간다.
- ② (가)에서 갑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갑의 행위가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③ (나)에서 갑의 변호인은 갑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 중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④ (다)에서 갑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위법 행위를 하였다는데 대하여 갑에게 가해지는 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 ⑤ (라)에서 갑의 변호인은 갑의 행위가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09

▶ 23063-0115

다음 자료에서 (가)~(마)에 위치할 수 있는 카드 조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게임 규칙
카드 A~카드 E 중에서 3장의 카드를 뽑는다. 뽑은 3장의 카드에 해당하는 형벌의 내용 ①, ②가 모두 옳게 적혀 있으면 2칸 전진, ①, ② 중에서 1개만 옳게 적혀 있으면 1칸 전진, ①, ② 모두 옳게 적혀 있지 않으면 1칸 후퇴이다. 출발 지점에서 가장 멀리 간 사람이 이긴다.

A	금고	B	몰수	C	구류
① 자유형 ② 1개월 이상 교정 시설에 수용하여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함.		① 명예형 ②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 금액의 지불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함.		① 재산형 ② 1일 이상 30일 미만 교정 시설에 수용함.	
D	자격 상실	E	벌금		
① 명예형 ②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자격을 박탈함.		① 재산형 ② 원칙적으로 5만 원 이상 금액의 지불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함.			

진행 방향 →

출발	(가)	(나)	(다)	(라)	(마)
----	-----	-----	-----	-----	-----

- ① (가) - A, C, B
- ② (나) - A, D, B
- ③ (다) - D, E, B
- ④ (라) - D, A, C
- ⑤ (마) - E, A, B

10

▶ 23063-0116

밀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지방 법원 형사 합의부는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된 갑에게 “형법에서 정한 ‘㉠ 벌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라며 ㉠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 장애로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없고, ㉢ 피고인의 행위는 의지를 정해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다만, 피고인은 심신 장애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돼 치료 감호 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보기

- ㄱ. ㉠은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의미한다.
- ㄴ. ㉠으로 보아 보안 처분은 유죄 선고 시 부과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ㄷ. ㉡은 갑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다고 보았다.
- ㄹ. ㉢으로 보아 갑은 범죄 행위 당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1

▶ 23063-0117

밑줄 친 ㉠의 근거가 되는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에 부합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갑은 농업용 동력 운반차(일명 ‘사발이’)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고, 검사는 갑을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하였다. 1심 법원은 갑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 법원은 사건 차량이 구 자동차 관리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 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중소형·다목적 승용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대법원은 농업용 동력 운반차인 이 사건 차량은 농업 기계화 촉진법에서 정한 농업 기계로서 구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시행 규칙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무면허 운전 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인 구 도로 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① 범죄와 형벌은 관습법에 의해 규정할 수 없다.
- ②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 ③ 범죄의 성립과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한다.
- ④ 범죄와 형벌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
- ⑤ 어떤 사항에 대한 법규가 없을 경우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12

▶ 23063-0118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갑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와 도로 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 지방 법원은 갑에게 ㉠ 금고 6개월에 집행 유예 1년, ㉡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150시간의 ㉢ 사회봉사 명령과 40시간의 ㉣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하였다.

보기

- ㄱ. ㉡은 ㉠과 달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에 해당한다.
- ㄴ. 보호 관찰, 치료 감호는 ㉡, ㉢과 같은 유형의 제재 수단에 해당한다.
- ㄷ. ㉠, ㉡은 ㉢, ㉣과 달리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가하는 제재 수단이다.
- ㄹ. ㉡, ㉢은 ㉠, ㉣과 달리 대안적 형사 제재 수단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 수사 절차의 이해

(1) 수사

- ① 의미: 범인을 발견하고 범죄의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활동
- ② 수사의 원칙: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 →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구속 가능(단, 긴급 체포 등은 영장 없이 체포 가능)

(2) 수사 절차

수사 개시	현행범 체포, 고소 및 고발, 지수, 수사 기관의 인지 등에 의해 수사 절차 시작
↓	
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음. • 검찰 송치: 피의자 수사 기록 및 증거물 등을 함께 검찰에 보내는 것
↓	
수사 종결	검사의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등에 의해 종결

2 형사 재판 절차

(1) 기소와 형사 재판

- ① 기소: 검사가 일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 ② 형사 재판의 당사자: 검사, 피고인

(2) 형사 재판의 절차

- ① 모두 절차: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 고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을 묻는 인정 신문, 검사 및 피고인의 모두 진술
- ② 심리 절차: 증거 조사, 피고인과 증인에 대한 신문 및 변론 절차, 구형,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후 진술로 진행
- ③ 판결 선고: 심리 결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 판결을 내리고 유죄가 입증되면 유죄 판결을 내림.

(3) 형의 선고와 집행

① 형의 선고

유죄 선고	실형	법원의 선고를 받아 실제로 집행되는 형벌
	집행 유예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집행 유예 기간 동안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유예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
	선고 유예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무죄 선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 ② 형의 집행: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함.
- ③ 판결에 대한 불복: 검사나 피고인이 1심 및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상소 가능

- ④ 가석방: 수형자가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조건부로 석방되는 제도

3 소년 사건

(1) 대상: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

(2) 처리

- ① 경찰: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 송치 또는 검사에게 사건 송치
- ② 검사: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 송치,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 공소 제기
- ③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내리거나 검사에게 사건 송치

4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제도

(1) 형사 절차 단계에서의 인권 보호와 원칙

무죄 추정 원칙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적법 절차의 원칙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제한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
영장주의	피의자에 대한 체포·구속·압수·수색 시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고 심문하여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제도
구속 적부 심사 제도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
진술 거부권	피의자와 피고인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피의자, 피고인이 수사 기관과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석 제도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하는 제도

(2) 형사 피해자 등의 인권 보장 제도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배상 명령 제도	상해죄 등 일정한 사건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민사적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
형사 보상 제도	구금되었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무죄 취지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경우 물질적·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명예 회복 제도	무죄 판결이 확정된 자가 청구하면 무죄 사건 등의 재판서를 법무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 제도

01

▶ 23063-0119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1. 의미: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국가 기관의 활동

2. A를 행하는 주체: (가)

3. 내용: (나)

보기

- ㄱ. A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한다.
- ㄴ. (가)에 '사법 경찰관'이 들어갈 수 있다.
- ㄷ. (나)에 '고소 또는 고발 등으로 개시됨.'이 들어갈 수 있다.
- ㄹ. (나)에 '검사가 기소하면 A는 종결되지 않음.'이 들어갈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02

▶ 23063-0120

다음 교사의 질문에 옳지 않은 답변을 한 학생은?


㉠ 수사

→

㉡ 공판

→

㉢ 형의 집행



그림은 형사 절차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밑줄 친 ㉠~㉢ 절차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 ① 갑: 구속하지 않고 ㉠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② 을: 구속하여 ㉠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청구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③ 병: ㉡은 검사가 기소해야 이루어집니다.
- ④ 정: ㉡에서 재판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검사입니다.
- ⑤ 무: ㉢은 법관의 지휘로 이루어집니다.

03

▶ 23063-0121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 갑은 A가 적용될 수 있는 대상 사건을 자신에게 적용되는 사건과 달리 (가) 관할 사건으로 제한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법 재판소는 ○○법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였다. 헌법 재판소는 “○○법은 법정형이 중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커 피고인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력 범죄를 중심으로 대상 사건을 규정했다가 저조한 신청률과 높은 철회·배제율로 인해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 사건을 (가) 관할 사건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A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배심원의 확보, 재판 진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다양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경험의 축적 등이 필수적인데 대상 사건을 확대할 경우 현실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밝혔다.

보기

- ㄱ. (가)에는 ‘지방 법원 합의부’가 들어갈 수 있다.
- ㄴ. 갑이 항소하면 갑은 고등 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 ㄷ. A는 민사 사건이 아닌 형사 사건에만 적용된다.
- ㄹ. A에서 판사는 배심원이 내린 평결과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04

▶ 23063-0122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실형, 선고 유예, 집행 유예 중 하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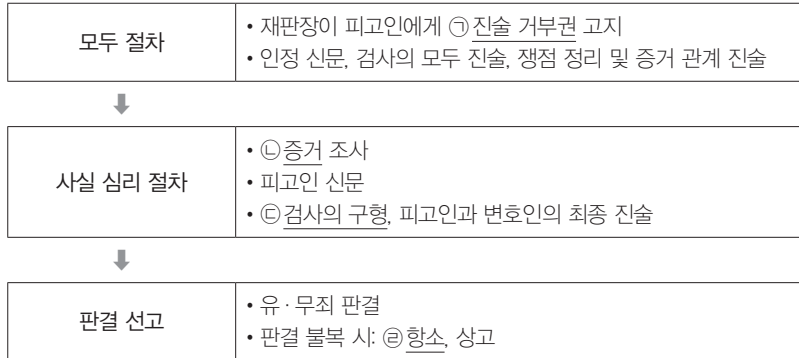
구분	A	B	C
법원의 선고를 받아 실제로 형벌이 집행되는가?	아니요	예	㉠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인가?	예	아니요	㉡
(가)	예	예	예

- ① ㉠은 ‘아니요’, ㉡은 ‘예’이다.
- ② (가)에 ‘유죄인 경우의 선고인가?’가 들어갈 수 없다.
- ③ (가)에 ‘교정 시설에 구금되지 않는가?’가 들어갈 수 없다.
- ④ A는 A의 실효 없이 유예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을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 ⑤ C는 C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05

▶ 23063-0123

다음 자료는 형사 재판 절차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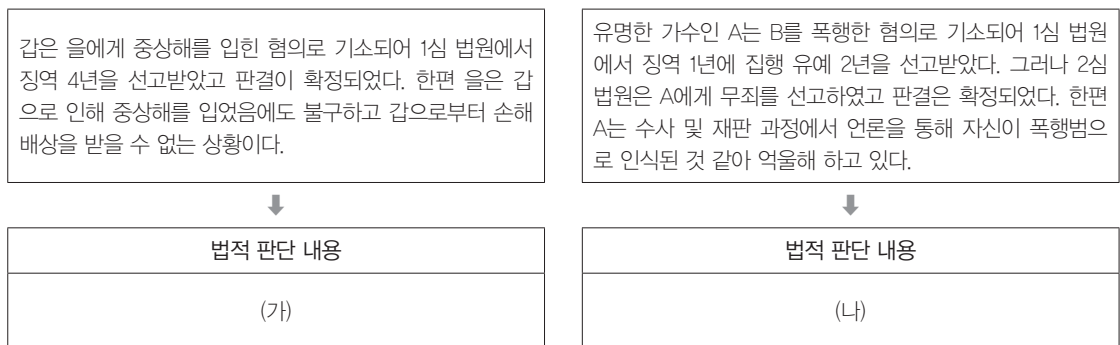
- ㄱ. ㉠은 피의자 신분에서도 갖는다.
- ㄴ. 피고인에게 ㉠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ㄷ. ㉢의 내용이 유죄이더라도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 ㄹ. 검사, 피고인, 범죄 피해자는 모두 ㉢을 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06

▶ 23063-0124

다음 사례의 법적 판단 내용 (가), (나)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가)-을은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ㄴ. (가)-1심 재판 중에 을은 배상 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다.
- ㄷ. (나)-A는 형사 보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ㄹ. (나)-A는 무죄 재판 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7

▶ 23063-0125

다음은 A, B와 관련한 (가), (나) 문서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피의자 갑
위 피의자에 대한 ○○ 사건에 관하여 위원에서 발부한 구속 영장에 의하여 □□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바, A를 청구하오니 청구 취지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 취지
피의자 갑의 석방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후략).

(나)

피고인 을
청구인 변호인 병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B를 허가한다.
2. 피고인은 보증금 1억 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후략).

보기

- ㄱ. A를 통해 갑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갑은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
- ㄴ. B는 수형자의 태도 등이 양호하여 누우침이 뚜렷한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되는 제도이다.
- ㄷ. A는 기소 전에, B는 기소 후에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ㄹ. (가)는 법원에 청구하는 문서이고, (나)는 법원의 결정문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8

▶ 23063-0126

(가)~(라)는 갑에 대한 형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나)



(다)



(라)



- ① (가)에서 갑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법 경찰관은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 ② (나), (다)의 사법 경찰관과 검사는 모두 갑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 ③ (나), (다)에서 갑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및 청구가 없었다면 갑은 기소되지 않을 것이다.
- ④ (라)의 판사는 갑이 청구하면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해야 한다.
- ⑤ (라) 이후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갑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된다.

09

▶ 23063-012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심 법원의 판결에서 배상 명령이 내려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배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 항소심 법원은 배상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갑에게 ㉣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을(배상 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배상 명령을 유지한 원심에 대해 “㉢ 원심 판결 중 배상 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1심 판결의 배상 명령을 취소하는 한편 을의 배상 명령 신청을 각하한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가해자인 갑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인 을과 합의하고 배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갑의 을에 대한 배상 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① ㉢은 ㉠이 아닌 ㉡의 배상 명령을 인용하였다.
- ② ㉢은 갑과 을이 합의한 배상금이 5,00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과 같이 판단하였다.
- ③ 갑이 ㉣이 아닌 무죄 선고를 받았다면 을은 배상 명령을 통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 ④ ㉣으로 인해 갑에 대한 ㉢은 유지되지 않는다.
- ⑤ ㉣으로 인해 갑은 을과 합의한 배상금을 을로부터 되돌려받을 수 있다.

10

▶ 23063-0128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수행 평가

A~E 각 절차별로 옳은 법적 판단 내용을 한 가지씩 쓰시오. (옳은 법적 판단 내용당 1점이며, 틀리면 0점임.)

A	갑은 을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은 후 기소되었다.
↓	
B	1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	
C	2심 법원은 갑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D	대법원은 원심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다.
↓	
E	원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분	법적 판단 내용	점수
A	(가)	1점
B	1심 법원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
C	(나)	0점
D	(다)	1점
E	판결 확정 이후 갑은 가석방될 수 있다.	㉡

보기

- ㄱ. ㉠과 ㉡은 모두 '1점'이다.
- ㄴ. (가)에 '갑은 구속 적부 심사를 거쳐 구속 수사를 받았다.'가 들어갈 수 없다.
- ㄷ. (나)에 '2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갑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가 들어갈 수 있다.
- ㄹ. (다)에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1

▶ 23063-0129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교사: 형사 보상 제도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갑: 구금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국가 및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을: 구속 수사를 받은 후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병: (가)
 정: 구속 재판을 받은 후 집행 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사: 옳게 답한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보기

- ㄱ. ㉠에 '갑, 정'은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
- ㄴ. (가)에 '구속 재판을 받은 후 선고 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가 들어갈 수 있다.
- ㄷ. (가)에 '구속 수사를 받은 후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 들어갈 수 있다.
- ㄹ. (가)에 '구속 수사를 받은 후 구속 재판을 받지 않았지만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 들어갈 수 없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2

▶ 23063-013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게임 규칙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갑~정에게 해당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선택한다. 선택한 카드의 내용이 옳으면 카드 1장당 1점이며, 틀린 카드를 선택하면 -1점이다. 단, 갑~정의 연령은 각각 9세, 12세, 16세, 19세 중 하나 이고, 갑, 을은 병, 정과 달리 소년 사건의 대상이 아니며, 을과 정은 형사 미성년자이다.

<카드 1>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카드 2> 집행 유예를 선고할 수 있음.	<카드 3>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됨.
<카드 4> 형벌을 부과할 수 없음.	<카드 5> 경찰서장이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음.	

• 학생 A의 게임 결과

구분	선택한 카드	점수
갑	(가)	0점
을	<카드 3>, <카드 4>	㉠
병	(나)	2점
정	<카드 1>, <카드 3>, <카드 4>, <카드 5>	㉡

보기

- ㄱ. ㉠은 '0점', ㉡은 '2점'이다.
- ㄴ. 학생 A가 감점 없이 옳은 카드만 선택했다면 총점은 8점이다.
- ㄷ. (가)에 '<카드 1>', '<카드 2>'가 들어갈 수 있다.
- ㄹ. (나)에 '<카드 1>', '<카드 2>', '<카드 3>', '<카드 5>'가 들어갈 수 없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 노동법의 의의와 근로자의 권리

(1) 노동법

- ① 노동법의 의미: 사회법의 한 종류로서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 대립과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법
- ② 노동법의 종류: 근로 기준법, 최저 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2) 근로자의 권리 보호

- ① 근로자의 권리는 헌법상 근로 기본권으로 보장됨.
- ② 근로 3권의 보장: 근로자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자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보장함.

단결권	근로자가 근로 조건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단체 교섭권	노동조합이 근로 조건의 유지 및 개선에 관하여 사용자 측과 집단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근로자가 쟁의 행위 등을 통해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2 근로 계약과 근로 기준법

- (1) 근로 계약: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 (2) 근로 계약의 체결
 - ① 임금,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을 근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
 - ② 근로 계약 내용이 근로 기준법의 기준에 어긋나면 안 됨.
 - ③ 근로 기준법상 임금 및 근로 시간

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화의 형태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함. •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른 금액을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 법정 최저 임금 이상이어야 함.
근로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연장 근로 가능 •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제공해야 함.

(3) 근로관계의 종료

- ① 근로관계는 퇴직 또는 해고 등으로 종료됨.
- ②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과 달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이루어지는 해고는 법을 통한 제한을 두고 있음.

3 청소년의 근로 보호

- (1) 취업 연령: 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사람 포함)은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음(단, 예외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닌 경우 15세 미만인 사람도 근로 가능).
- (2) 근로 계약
 - ①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은 법정 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이 직접 맺어야 하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근로 계약을 대리할 수 없음.
 - ②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연소자)을 고용하는 경우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함.
 -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연소자)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고용해서는 안 됨.
- (3) 근로 시간
 - ①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②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 1주 5시간의 연장 근로 가능
- (4) 임금
 - ① 미성년자도 성인과 같이 최저 임금 제도의 적용을 받음.
 - ②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

4 근로자의 권리 보호 절차

- (1) 부당 해고
 - ① 의미: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 요건 중 하나라도 누락해서 해고하는 경우
 - ② 정당한 해고의 요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최소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함. 해고의 사유와 그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등
- (2) 부당 노동 행위
 - ① 의미: 사용자가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
 - ② 유형
 -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조직,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행위
 -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등
- (3) 부당 해고 또는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 ①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 → 판정에 불복 시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 신청 → 재심 판정에 불복 시 행정 소송 제기 가능
 - ② 부당 해고의 경우 노동 위원회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 제기 가능
 - ③ 부당 노동 행위의 경우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구제 신청 가능

01

▶ 23063-0131

A법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대 사회와 중세 사회에서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은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 그를 소유한 자가 처분할 수 있는 소유의 대상인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시민 혁명을 통해 근대 시민 사회가 성립하자 개인의 자기 결정을 인정하는 시민법이 적용되면서 노동력을 매수하는 사람과 노동력을 파는 사람의 관계를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 관계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 자본주의의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근대적 시민법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노동자는 생산 시설을 가진 자본가에게 구속될 수밖에 없었고, 계약을 근거로 노동력을 사용한다면 그 한계가 제한되지 않았기에 노동 현장 곳곳에서 노동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주장하는 노동 운동이 전개되었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사회법 중 하나인 A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근로 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A법으로 분류된다.

- ①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법의 성격을 가진다.
- ② 노동자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③ 노동자와 사용자 간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인정한다.
- ④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다.
- ⑤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대등한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 단체의 결성을 제한한다.

02

▶ 23063-0132

근로 3권 A~C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나라 헌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근로 3권은 헌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다. A는 근로자가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권을 가지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는 권리를 말한다. B는 A에 기초하여 결성된 단체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자주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다. C는 단체 교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A와 B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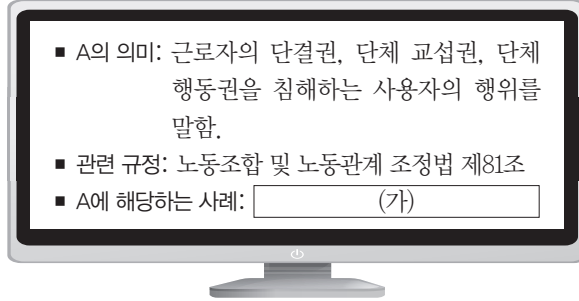
- ㄱ.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B를 행사할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ㄴ. 근로자가 C를 행사하는 사례에는 파업, 태업, 직장 폐쇄와 같은 쟁의 행위가 포함된다.
- ㄷ. C에 근거한 정당한 쟁의 행위라면 형사 책임은 면제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는 민사 책임을 진다.
- ㄹ. 사용자가 A~C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3

▶ 23063-0133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근로 시간에 태만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경우
-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경우
- ③ 사용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 휴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 ④ 사용자가 정당하지 않은 쟁의 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경우
- ⑤ 사용자가 업무 중 동료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 변경을 명한 경우

04

▶ 23063-0134

다음 자료는 정치와 법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방 탈출 게임의 내용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규칙: 사례를 읽고 이에 관한 질문 3개에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만 방에서 탈출할 수 있다.

[사례] 고등학생인 A(17세)는 방학을 맞이하여 한 달 동안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대형 마트 사장 B(40세)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질문 1] 사용자는 근로 계약에 따른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나요?
 [질문 2] A의 법정 대리인은 A를 대리하여 B와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질문 3] A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 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받아도 되나요?

〈게임에 참여한 학생 갑~병의 응답〉

구분	갑	을	병
[질문 1]	㉠	예	아니요
[질문 2]	아니요	㉡	예
[질문 3]	아니요	아니요	㉢

보기

- ㄱ. ㉠이 '아니요'라면, 갑은 방을 탈출할 수 있다.
- ㄴ. ㉡이 '아니요'라면, 을은 방을 탈출할 수 있다.
- ㄷ. ㉠이 '예'라면, [질문 1]에 옳게 응답한 학생은 2명이다.
- ㄹ. ㉢이 '예'라면, [질문 3]에 옳게 응답한 학생은 1명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5

▶ 23063-013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취업 인허증					㉡ 취업 동의서				
근로자	성명	갑	주민 등록 번호	XXXXXX -XXXXXXX (14세)	근로자	성명	병	주민 등록 번호	XXXXXX -XXXXXXX (16세)
	주소	(생략)				주소	(생략)		
사용자	사업장명	◇◇ 회사	사업의 종류	□□업	친권자 (후견인)	성명	정	주민 등록 번호	XXXXXX -XXXXXXX
	대표자 성명	을	주민 등록 번호	XXXXXX -XXXXXXX		주소	(생략)		
사용자	사업장명	○○ 회사	주소	(생략)	사용자	사업장명	무	주민 등록 번호	XXXXXX -XXXXXXX
	대표자 성명	을	주소	(생략)		대표자 성명	무	주민 등록 번호	XXXXXX -XXXXXXX

보기

- ㄱ. 을은 ㉠을 지닌 갑이 중학교에 재학 중이더라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다.
- ㄴ. 무는 병을 고용하면서 사업장에 ㉡과 병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ㄷ. 정은 병을 대리하여 무와 병의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ㄹ. ㉠, ㉡은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6

▶ 23063-0136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42세)이 운영하는 A 백화점에서 일하기 위해 고등학생 을(17세)은 오른쪽과 같은 내용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근로 계약서

갑(사업주)과 을(근로자)은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 계약 기간: 2023년 1월 4일부터 2023년 2월 3일까지
2. 근무 장소: A 백화점 ◇◇ 매장
3. 업무 내용: 물건 정리 및 판매
4. 소정 근로 시간: 10시~18시(휴게 시간: 13시~14시)
5. 근무일/휴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근무, 휴일 매주 월·화요일
6. 임금: 시간당 10,000원

* 2023년 법정 최저 임금은 시간당 9,620원임.

- ① 을이 계약대로 근무할 경우 을의 1일 임금은 80,000원이다.
- ② 을은 주말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근무일을 변경해야 한다.
- ③ 갑과 을이 근무일의 연장 근로에 대해 추가적으로 합의한다면 갑은 을을 1일 1시간씩 더 근로하게 할 수 있다.
- ④ 을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갑에게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갑이 을에게 근로 계약에서 정한 임금과 달리 법정 최저 임금으로 시간당 임금을 지급해도 근로 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07

▶ 23063-0137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행정 법원

판 결

원고 갑

주문
 중앙 노동 위원회가 갑과 A 주식회사 사이의 부당 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갑의 근무 태도 등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A 주식회사가 갑에 대하여 한 근무 성적 평정은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근무 성적 평정을 전제로 하여 A 주식회사가 갑에 대하여 근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 계약 만료 통보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해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 ① 갑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이다.
- ② 갑이 제기한 소송은 노동 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
- ③ 중앙 노동 위원회는 A 주식회사의 처분이 부당 해고라고 보았다.
- ④ □□ 행정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처분이 부당 노동 행위라고 보았다.
- ⑤ □□ 행정 법원의 재판은 최종심에 해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없다.

08

▶ 23063-0138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A 회사에서 근무하는 갑은 자신이 소속된 노동조합의 태업 활동에 참가하였고, A 회사는 해당 행위가 직무 유기 행위에 해당한다며 갑을 해고함.

↓

갑은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 지방 노동 위원회는 부당 해고 구제 신청과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을 각각함.

↓

이에 불복한 갑은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 노동 위원회는 부당 해고 구제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에 관한 □□ 지방 노동 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함.

- ① 갑이 속한 노동조합은 갑과 달리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 ② 중앙 노동 위원회는 □□ 지방 노동 위원회와 달리 A 회사가 갑의 근로 3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 ③ □□ 지방 노동 위원회는 중앙 노동 위원회와 달리 A 회사가 갑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라고 보았다.
- ④ 중앙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A 회사는 갑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갑은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쳐야만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09

▶ 23063-0139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다음은 갑, 을이 각각 ○○ 대형 마트 사장 병과 체결한 근로 계약의 공통된 내용 중 일부이다.

1. 근로 계약 기간: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2. 근무 장소: ○○ 대형 마트
3. 업무 내용: 물건 정리 및 손님 안내
4. 소정 근로 시간: 12시~20시 30분(휴게 시간: 17시~18시 30분)
5. 근무일/휴일: 매주 월요일~금요일 근무, 휴일 매주 토·일요일
6. 임금: 시간당 10,000원

*2023년 법정 최저 임금은 시간당 9,620원임.
 **갑, 을은 모두 중학교를 졸업하였고, 근로 계약 체결 시 연장 근로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없었음.

표는 각 질문으로 갑과 을을 구분한 것이다.

질문	갑	을
취직 인허증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근로 계약 체결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예	예
야간 또는 휴일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까?	아니요	예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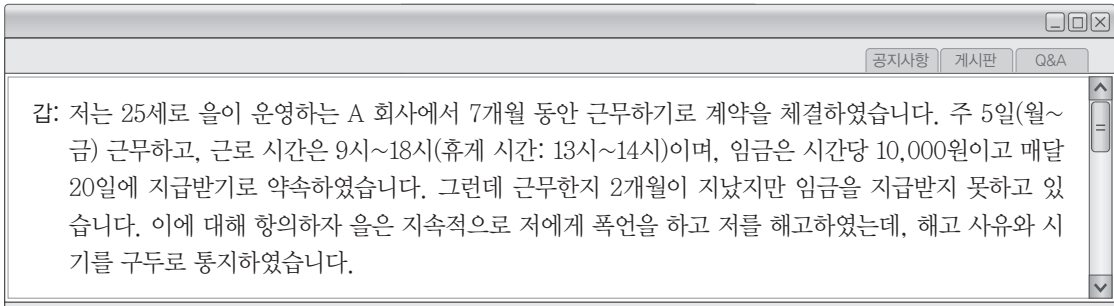
- ㄱ. 갑과 을의 휴게 시간은 근로 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다.
- ㄴ. 갑은 을과 달리 근무일의 연장 근로에 대해 추가적으로 합의한다면 1일 1시간씩 더 근로할 수 있다.
- ㄷ. 병은 을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
- ㄹ. 갑과 을은 병에게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 23063-014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ㄱ. 갑의 근로 시간은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였다.
- ㄴ. 갑에 대한 을의 해고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 ㄷ. 갑은 고용 노동부에 임금 체불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ㄹ. 갑은 근로 3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이유로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 국제 관계

(1) 국제 관계의 의미와 특징

① 의미: 국제 사회의 다양한 행위 주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상호 작용하는 관계

② 특징

- 주권 국가들을 기본 단위로 하여 구성
-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 정부의 부재
- 힘의 논리와 국제 규범의 공존 등

③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구분	현실주의적 관점	자유주의적 관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 •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며 군사 동맹 등으로 세력 균형을 확보하여 국가 안전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사회에 보편적 선이나 국제 규범이 존재 • 국제법, 국제기구의 중요성 강조 →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한 국제 평화 보장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간 상호 의존적 관계 간과 • 복잡한 국제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을 간과

(2) 국제 관계의 변천

① 베스트팔렌 조약(1648년)

- 유럽에서 주권 국가 체제가 일반화됨.
- 유럽 사회에 주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

② 제국주의 시대

- 산업 혁명 이후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확보 경쟁
- 유럽 중심의 국제 사회가 전 세계로 확대

③ 제1, 2차 세계 대전과 평화 유지 노력

-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 국가 간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 연맹 설립(1920년)
-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 국제 연맹의 한계를 극복하여 국제 사회 및 회원국들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 연합 설립(1945년)

④ 냉전 체제와 탈냉전 시대

-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념 대립 → 냉전 체제 형성
- 제3 세계의 부상과 자본주의·공산주의 진영 내부의 다원화 → 다극 체제로의 전환, 냉전 체제 완화
- 몰타 선언(1989년)과 공산주의 진영 붕괴 → 냉전 종식, 탈냉전 시대

(3) 세계화 시대의 국제 관계

① 세계화: 국제 사회의 상호 의존성이 커짐에 따라 개별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현상

② 국제 관계의 변화

-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구별 약화 및 국가 간 협력 강화
- 국가 이외에 다양한 국제 사회 행위 주체들의 활동과 영향력 증가
- 국제법과 같은 국제 규범의 영향력 증가

③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

국가	국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
초국가적 행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을 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주체 • 정부 간 국제기구, 국제 비정부 기구, 다국적 기업 등
국가 내부적 행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내에서 국가를 넘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주체 • 지방 자치 단체, 소수 민족 등
영향력 있는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한 인물 • 강대국의 전직 국가 원수, 저명한 학자, 유명한 연예인 등

2 국제법

(1) 국제법의 의미: 국제 사회 행위 주체들의 관계를 규율하고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규범이나 원칙

(2) 국제법의 법원(法源)

① 조약

- 의미: 국가 또는 국제기구 간에 체결된 명시적 합의
- 효력

효력의 범위	원칙적으로 조약 체결 당사자 간에만 법적 구속력을 가짐.
법적 효력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

- 유형: 양자 조약, 다자 조약
- 사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 등

② 국제 관습법

- 의미: 국제 사회에서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관행이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성립하는 국제법
- 효력: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 발생(포괄적 구속력)
- 사례: 국내 문제 불간섭 등

③ 법의 일반 원칙

- 의미: 국제 사회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
- 효력: 명확한 다른 국제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유용한 분쟁 해결의 규범임.
- 사례: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등

④ 기타: 판례나 국제법 학자의 학설 등

(3) 국제법의 의의와 한계

① 의의: 국가 간 협력의 기반 제공, 분쟁 해결 수단 제공, 국제 사회 행위 주체들의 행동 규범과 판단 기준 제공

② 한계

- 입법 기구가 없어 모든 국가에 적용할 법 규범 제정이 어려움.
- 법을 강제할 집행 기구가 없어 국제법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움.
- 국제 사법 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재판을 할 수 있으므로 국제법은 재판 규범으로서 한계가 있음.

01

▶ 23063-0141

다음 글에 나타난 국제 관계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98년 로마에서 채택되어 2002년 발표된 국제 형사 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은 국제 형사 재판소의 상설화를 목표로 하는 국제 인권 조약이다. 국제 형사 재판소 설립은 국제 사회가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에 형사 처벌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국제 형사 재판소를 설립하는 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던 미국이 로마 규정 서명에도 철회를 선언하였다. 국제 형사 재판소의 소추관이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수사를 국제 형사 재판소에 요청하면서 미국과 국제 형사 재판소의 대립은 커졌고, 미국은 다른 나라에 국제 형사 재판소의 조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미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제 형사 재판소를 지지하는 71개국의 성명서가 발표되었고, 결국 2020년 국제 형사 재판소는 소추관의 수사를 승인하여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해당 수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전쟁 범죄 혐의가 있는 미군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미국 내에 체류하는 한 집행이 어렵게 만들었다.

- ①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약화되고 있다.
- ② 국가 간 주권 평등의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 ③ 경제적 실리보다 이념에 기반한 동맹을 중시하고 있다.
- ④ 국제 사회에서 힘의 논리와 국제 규범이 공존하고 있는 양상이다.
- ⑤ 국제 사회 행위 주체들 중 국제 비정부 기구의 활동과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02

▶ 23063-0142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60년 우리나라에서 ㉠ 민법이 시행되면서 당사자 간 합의를 기초로 한 근대적 입양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런데 미성년자 입양이 당사자의 입양 합의와 신고만으로 가능하였던 터라 이로 인한 입양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2012년에 민법을 개정하였다.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 법원의 허가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국제 연합에서 채택하고 우리나라에서 비준한 ㉡ 아동 권리 협약에서 당사국들이 아동 입양 절차가 관계 당국에 의하여 허가되고 보장하도록 규정한 것을 따른 것이다.

- ① 국내에서 ㉠은 강제적으로 집행할 기관이 없다.
- ② 국제 사회에서 ㉠은 포괄적 구속력을 가진다.
- ③ 우리나라에서 ㉡과 같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체결권은 대통령이 가진다.
- ④ ㉠은 ㉡과 달리 성문화된 형식으로 존재한다.
- ⑤ ㉡은 ㉠과 달리 입법 기관에 의해 제정되었다.

03

▶ 23063-0143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현실주의적 관점, 자유주의적 관점 중 하나임.)

연구자 A는 갑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가), (나)에 따라 분석하였다. 갑국의 외교 정책은 대결보다는 협력, 일방주의보다는 다자주의를 중시하고 있으며, 국제 연합과 같은 국제기구의 기능을 인정하고 있어 (가)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갑국의 안보 정책은 군사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힘의 우위를 강화하면서 갑국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나)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 ① (가)는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힘의 균형을 강조한다.
- ② (나)는 국제 사회에서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점을 간과한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국제 사회에서 국제법의 역할을 중시한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국제 평화 보장을 위해 집단 안보 체제 구축을 중시한다.
- ⑤ (가), (나)는 모두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간과한다.

04

▶ 23063-0144

(가)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의 옳은 답변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교사: 다음은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중 하나의 관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관점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식민지였으나 중립을 지켜 온 작은 섬 멜로스를 공략하려고 하였다. 아테네인들은 공격에 앞서 멜로스인들에게 사절을 보내 정의에 호소하지 말고 생존만을 고려하여 항복이나 전멸이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였다. 멜로스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테네는 멜로스와의 전투를 벌여 멜로스를 정복하였다. 아테네와 멜로스와의 전쟁 중 협상 과정은 국제 관계에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끊임없는 지배욕에 기초해 있는 인간 본성이 관습이나 도덕, 법에 기초한 국제 질서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학생: (가)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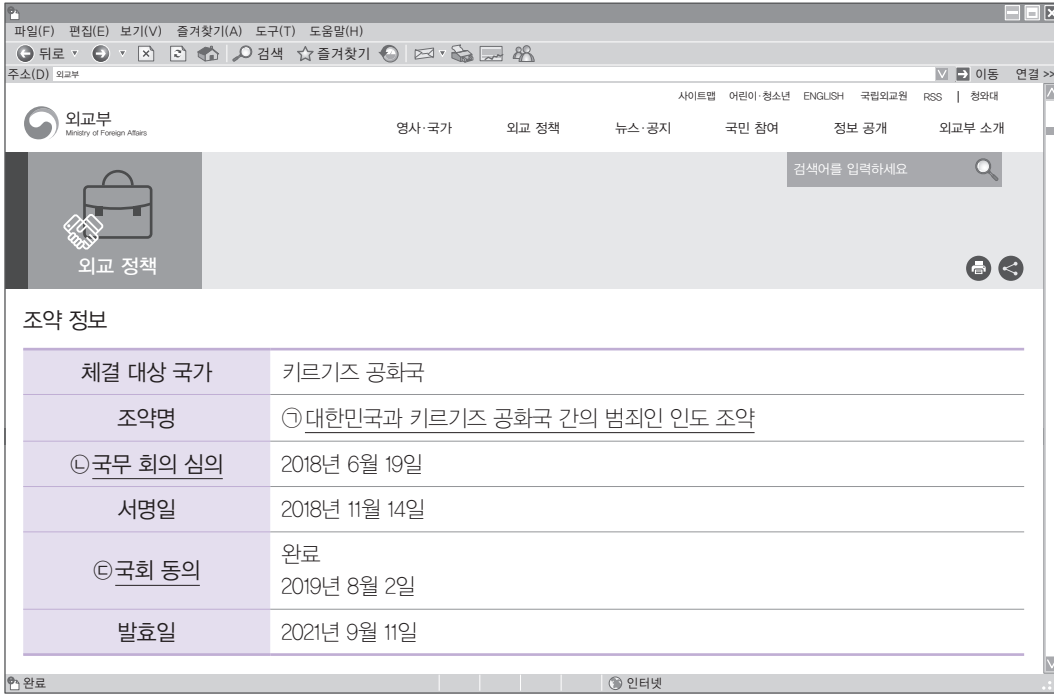
- ㄱ. 국제 사회에서 초국가적 행위 주체들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 ㄴ. 국제 사회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정부 상태로 규정합니다.
- ㄷ.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력 균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ㄹ.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05

▶ 23063-0145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은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을 가진다.
- ② ㉠은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③ 우리나라에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을 거쳐야 한다.
- ④ 모든 조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을 거쳐야 한다.
- ⑤ ㉢은 우리나라에서 조약 체결권자가 조약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06

▶ 23063-0146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30년 전쟁 종결의 결과로서 체결된 ㉠ 베스트팔렌 조약은 전쟁의 재발 위험성에 대한 국가들의 인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상호 견제를 위해 기존의 봉건 질서와는 다른 국가 체제를 탄생시켰다고 평가받는다.
-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국제 사회는 미국 중심의 자유 진영과 구소련 중심의 공산 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하였다. 직접적인 무력 대결을 피하면서 경제·외교·정보 등을 수단으로 하여 대립하여 형성된 ㉡ 냉전 체제는 미국과 소련의 합의를 담은 ㉢ 몰타 선언을 통해 종식되었음이 선언되었다.

보기

- ㄱ. ㉠은 유럽 사회에서 주권 국가를 단위로 한 국제 질서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 ㄴ. ㉡ 이후 국제 사회에서는 이념 대결에서 벗어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 ㄷ. ㉡ 이전에는 다극 체제, ㉡ 이후에는 양극 체제가 형성되었다.
- ㄹ. ㉡ 이후 국제 연맹이 설립되고, ㉢ 이후 국제 연맹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제 연합이 설립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7

▶ 23063-0147

다음 사례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국제법의 한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구촌 곳곳에서 빈발하고 있는 이상 기후 현상은 지구 온난화 및 기후 변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1970년대부터 전개되어 온 국제 사회의 규범적 대응 노력이 1990년대에 국제 연합 기후 변화 협약을 마련하는 데 이르렀다. 그러나 협약이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후 교토 의정서를 통해 특정 온실 가스에 대해 일정한 선진국들의 개별적인 배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지만 캐나다, 일본 등이 이를 준수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국가가 거의 없다. 이후 2015년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에서는 지구 온난화에 대응해야 할 의무를 모든 국가에 적용하겠다는 합의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해관계에 따라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는 미국, 탄소 배출량 감축을 속인 브라질 등 체결 당사국이 스스로 제시한 감축 목표를 준수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 ① 제정된 법을 강제할 집행 기구가 없어서 국제법 이행을 강제하기가 어렵다.
- ② 국제법과 국내법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적용의 우선순위 문제가 발생한다.
- ③ 성문화되지 않은 국제법은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규범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 ④ 국제법 제정 과정에서 강대국의 영향력이 작용하여 강대국에 유리한 내용이 반영된다.
- ⑤ 다자 조약의 경우 조약 체결의 당사자인 국가 내에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08

▶ 23063-0148

국제법의 법원(法源) A~C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임.)

국제법은 국내법과 달리 입법부와 같은 법을 창설하는 기관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국제법의 법원(法源)을 설명할 때에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을 출발점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은 체결 당사자 간 법적 구속력을 가진 명시적 합의인 A, 국제 사회에서 오랜 기간 반복된 관행이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된 B, 문명국들에게 승인된 법의 보편적 원칙인 C를 국제 사법 재판소 재판의 준칙으로 열거하고 있다.

보기

- ㄱ. 국제기구는 국가와 달리 A의 체결 주체가 될 수 없다.
- ㄴ. 우리나라의 법원(法院)은 재판에서 B를 판결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 ㄷ. C에 해당하는 사례로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을 들 수 있다.
- ㄹ. C는 A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 국제 문제

(1) 국제 문제의 의미와 특징

- ① 의미: 여러 국가나 국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
- ② 특징
 -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커지면서 그 영향력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
 -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과 공조 체제 구축이 필요하지만 강제성을 가진 기구가 없어 국가 간 합의와 해결책을 도출하기 어려움.

(2) 국제 문제의 종류

- ① 안보 문제: 민족, 인종, 종교 등의 차이나 영토, 자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분쟁이나 전쟁 발생, 테러 조직의 활동 등
- ② 경제 문제: 남북문제, 빈곤 문제 등
- ③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국제 하천의 오염 등
- ④ 인권 문제: 여성과 아동 학대, 난민 등

(3) 국제 문제의 해결

구분	외교적 해결	사법적 해결
의미	분쟁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제3자의 조정 등을 활용	국제 사법 기관에 제소하여 국제법에 따라 해결
의의	분쟁의 실질적 해결이 가능하고 향후 발생할 분쟁을 사전에 예방 가능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안 도출에 대한 기대 가능
한계	종교 간 갈등 등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움.	재판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당사국의 판결 불복 시 구속력을 행사하기 어려움.

2 국제 연합

(1) 국제 연합의 창설 목적 및 구성

- ① 창설 목적: 국제 평화 유지 및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가 간 우호와 협력 증진
- ② 구성: 6개 주요 기관과 각종 전문 기구 등

(2) 총회

- ① 지위: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
- ② 의사 결정
 -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1국 1표로 표결
 - 총회 의결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회원국의 행동을 강제하지 못함.

(3) 안전 보장 이사회

- ① 지위: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국제 연합의 실질적 의사 결정 기관
- ② 구성: 5개 상임 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
- ③ 의사 결정: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절차 사항이 아닌 실질 사항의 경우에는 상임 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부결됨.

(4) 국제 사법 재판소

- ① 지위: 국가 간 분쟁을 국제법을 적용해 법적으로 해결하는 기관

- ② 구성: 국제 연합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한 서로 국적이 다른 15명의 재판관

③ 특징

- 국제 연합 관련 기관의 법적 질의에 권고적 의견을 제시함.
-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만 관할권 가짐.
- 당사국의 판결 불복 시 국제 사법 재판소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5) 국제 연합의 기타 주요 기관과 각종 전문 기구

- ① 기타 주요 기관: 사무국, 경제 사회 이사회, 신탁 통치 이사회
- ② 각종 전문 기구: 세계 보건 기구, 국제 노동 기구 등

(6) 국제 연합의 한계

- ① 회원국들의 부담금 납부가 원활하지 않아서 재정적 어려움이 존재함.
- ②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자주 행사하여 의사결정이 어려움.
- ③ 총회의 권고안이 현실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여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④ 국제 사법 재판소는 판결에 대한 집행력이 약해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한 역할에 한계를 보임.

3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

(1) 우리나라 국제 관계의 변화

- ① 195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 진영 국가와 우호 관계
- ② 1970년대: 냉전이 완화되면서 공산주의 국가들과 관계 개선 노력
- ③ 1980년대 후반: 적극적인 북방 외교로 공산권 국가와 수교
- ④ 1990년대: 국제 연합 가입,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

(2)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 현황

- ① 남북 분단으로 인한 긴장 상태 지속
- ② 일본의 역사 왜곡과 중국의 동북 공정 사업 등 과거사와 관련된 갈등 존재
- ③ 세계화 시대에 각국과의 치열한 무역 경쟁 및 긴밀한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 형성

(3)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외교 방향

- ① 외교의 의미: 한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 사회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펼치는 대외 활동
- ② 외교의 방법: 주로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설득, 타협, 군사적·정치적 위협 등이 나타나기도 함.
- ③ 우리나라 외교의 방향과 과제
 -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구
 - 국제 관계에서의 주체성과 능동성 강화
 - 공식 외교뿐만 아니라 민간 외교 자원도 적극 활용

01

▶ 23063-0149

다음 사례에 나타난 국제 문제 해결 과정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계 보건 기구(WHO)가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pandemic)을 선언한 코로나19 확산에 개발 도상국은 선진국보다 더 취약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발 도상국은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전염병에 취약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역학 조사 등 바이러스 확산 대응 방안을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는 공적 개발 원조 자금(ODA)을 확보하여 개발 도상국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세계 은행(World Bank), 국제 통화 기구(IMF)와 같은 국제 금융 기구는 개발 도상국에 대한 정부 채무 상환 유예, 재정 지원 방안 등을 수립하였다. 국제 연합(UN)은 인간 정주 계획(UN Habitat)을 통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취약 계층 및 취약국을 우선시한 인도적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국제기구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자간 국제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 ①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 반영하여 해결해야 한다.
- ② 분쟁 당사국이 국제 사법 기관에 제소하여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 ③ 분쟁 당사국끼리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경우 강대국의 주도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
- ④ 각 국가들의 정치적인 이념을 중시하여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⑤ 개별 국가의 대응에만 맡겨 놓기보다는 각 국제 사회 주체들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02

▶ 23063-0150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세계 자연 기금(WWF)은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사회에서 활동하는 시민 단체이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가 심각한 ㉡ 국제 문제로 대두되면서 세계 자연 기금은 인류가 만든 기후 위기와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깨닫고 변화를 만들기 위해 매년 3월 마지막 토요일 저녁, 1시간 동안 소등하는 ‘어스아워(earth hour)’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불 꺼진 지구를 통해 우리가 기후 변화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취지의 ‘어스아워’ 캠페인은 2007년 호주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매년 190여개 국가에서 기업이나 공공 기관,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보기

- ㄱ. ㉠은 국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에 해당한다.
- ㄴ. ㉠은 개인 또는 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 비정부 기구에 해당한다.
- ㄷ. ㉡은 국경을 초월해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ㄹ. ㉡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우 해결이 용이하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03

▶ 23063-0151

다음은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A, B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외교적 해결, 사법적 해결 중 하나임.)

A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input style="width: 150px;" type="text"/> (가) • 사례: 갑국은 을국이 남극에서 시행한 대규모 환경이 해양 포유류와 해양 환경의 보전을 위한 국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국제 사법 재판소에 을국을 제소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input style="width: 150px;" type="text"/> (나) • 사례: ○○ 해협을 둘러싼 병국과 정국의 분쟁에서 가톨릭교의 교황이 중재자로 나서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제안을 제시하였다.

보기

- ㄱ. A는 당사국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강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 ㄴ. B는 A와 달리 국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 ㄷ. (가)에 '국제 사법 기관에 제소하여 국제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함.'이 들어갈 수 있다.
- ㄹ. (나)에 '분쟁 당사국끼리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제3자의 조정을 통해 해결함.'이 들어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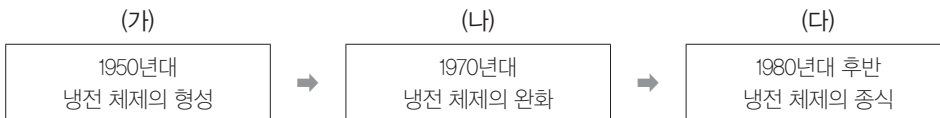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04

▶ 23063-0152

(가)~(다) 시기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ㄱ. (가) 시기에 우리나라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 ㄴ. (나) 시기에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 ㄷ. (다) 시기에 우리나라는 북방 외교를 통해 공산권 국가와 수교를 맺었다.
- ㄹ. (다) 시기는 (가) 시기와 달리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외교 전략을 활용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5

▶ 23063-0153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은 ㉠국제 연합(UN)의 주요 기관인 ㉡안전 보장 이사회의 회의를 요청하였다.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논의를 위해 미국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러시아는 회의 진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러시아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정을 거부할 권한은 있지만, 안전 보장 이사회의 회의 진행 여부와 같은 절차에 대한 ㉣결정을 거부할 수는 없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9개국 이상의 찬성 투표로 안건을 결정하는데, 러시아의 회의 진행 중단 요구에 중국이 동의했지만, 3개국이 기권, 10개국이 찬성하여 회의는 진행되었다.

보기

- ㄱ. ㉠은 국제 비정부 기구에 해당한다.
- ㄴ. ㉡은 모두 상임 이사국에 해당한다.
- ㄷ. ㉢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의 실질적 의사 결정 기관에 해당한다.
- ㄹ. ㉣은 ㉤과 달리 실질 사항에 대한 안건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6

▶ 23063-0154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5년 A는 우간다가 콩고민주공화국 영토 내에서 무력 사용 금지의 원칙과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 등을 위반하고, 천연 자원 착취에 관한 국제법상의 의무들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다. 판결 이후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는 판결에 따른 배상 문제에 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2015년 콩고민주공화국은 과거 판결의 후속 절차 규정에 따라 배상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A에 제소하였고, 2022년 A는 우간다에 2026년까지 3억 2,500만 달러를 콩고민주공화국에 배상할 것을 명령하였다.

- ① 서로 국적이 다른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 ②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진다.
- ③ 국제 연합의 가맹국만 A의 재판 당사국이 될 수 있다.
- ④ 재판의 준거로 활용하는 국제법은 국제 관습법에 한정된다.
- ⑤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를 제재할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07

▶ 23063-0155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일본은 최근 국제 연합 전체 회원국이 참석한 A에서 B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비상임 이사국은 평화 유지에 대한 회원국의 공헌과 지역적 배분을 고려하여 A에서 총 유효 투표의 2/3 이상 득표한 국가 중 득표순대로 매년 5개국씩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다.
- B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결의하려고 하였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여 결의안이 부결되었다.

보기

- ㄱ. A는 주권 평등 원칙에 따른 표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ㄴ. B는 경제적 제재나 군사적 개입을 통해 국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ㄷ. A는 B와 달리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ㄹ. B는 A에서 선출된 임기가 2년인 15개국으로 구성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8

▶ 23063-0156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C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한눈에 보는 국제 뉴스 20××년 ××월 ××일

○○국 군대가 □□국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 A에서 의결
표결에 참여한 181개국 중 141개국 찬성

◇◇국 화학 무기 공격에 대한 진상 요구를 규정한 결의안, B에서 부결
표결에 참여한 15개국 중 14개국 찬성, 갑국 반대

△△국과 ◎◎국의 해양 영토 영유권 분쟁 소송, C에서 판결
△△국이 ◎◎국보다 더 많은 해양 영토 인정

보기

- ㄱ. 갑국은 B의 상임 이사국에 해당한다.
- ㄴ. C는 국가 간 분쟁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강제적 관할권을 갖는다.
- ㄷ. A에서 B의 비상임 이사국을 선출한다.
- ㄹ. B는 C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사회탐구영역

정치와 법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 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 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23063-0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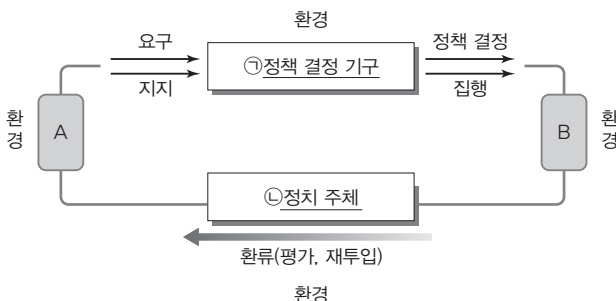
1 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사: 학교 구성원이 모여 체육관, 도서관 등 학교 시설 개방 시 간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은 정치로 볼 수 있을까요?
 갑: 정치는 국가만의 고유한 현상으로 정치권력의 획득·유지· 행사와 관련된 활동이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이 모여 해당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은 정치로 볼 수 없습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는 개인 또는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 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활동이므로 학교 구성원이 모여 해당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은 정치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갑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 ② 을의 관점은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 ③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정치로 본다.
- ④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소수의 통치 엘리트에 의해 서만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 ⑤ 갑, 을의 관점은 모두 분리수거함 위치 선정을 위한 아파 트 입주민 회의를 정치로 본다.

▶ 23063-0158

2 그림은 이스턴(Easton, D.)의 정치 과정 모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의회는 ㉠에 해당한다.
- ② 시민 개개인은 ㉡이 될 수 없다.
- ③ A는 산출, B는 투입이다.
- ④ 법률안 공포는 A의 사례에 해당한다.
- ⑤ 정당을 통한 정책 제안은 B의 사례에 해당한다.

▶ 23063-0159

3 다음 자료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신문
 ○○부는 신한류로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 전 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 하기로 하였다. ○○부는 전통문화가 미래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 연구 관련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전통문화 산업의 지속적인 수 요 창출을 위해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전통문화 관 련 교육과 홍보 등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전통 문화 산업 고도화는 전통문화의 대중화에도 도움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① 통일을 평화적으로 추구한다는 원리이다.
- ②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정치 원리이다.
- ③ 문화를 국가에서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④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 ⑤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리 이다.

▶ 23063-0160

4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주민이 직접 지방 선거를 통해 지방 자치 단체 의 의결 기관인 A와 집행 기관인 B를 구성합니다. 우 리나라 ㉠ 지방 자치 단체는 광역 자치 단체와 기초 자 치 단체가 있는데, 이번 지방 선거를 통해 ㉡ 중앙 정부와 협력을 기대해 봅니다.

보기

- ㉠. A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권을 갖는다.
- ㉡. B는 임기 중에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A가 제출한 예산을 B가 심의하고 확정한다.
- ㉣. ㉠과 ㉡ 간에는 수평적 권력 분립 관계가 존재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23063-0161

5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시 △△ 관광 개발 사업 관련 상황	
구분	활동 내용
A	• △△ 관광 개발 전 환경 영향 평가 촉구 • '환경' 관련 공익 보호를 위한 캠페인 전개
B	• △△ 관광 개발 사업을 통한 상가 이익 창출 회의 개최 • △△ 관광 개발을 위한 조합원 가입 신청 및 회비 납부 안내
C	• △△ 관광 개발에 대한 ○○시 주민 의견 수렴 • 공직 선거에 관광 개발 관련 전문가를 후보자로 공천

- ① A는 공적 이익보다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
- ② B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다.
- ③ C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 ④ A는 B, C와 달리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 ⑤ C는 A, B와 달리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 23063-0162

6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국가 권력의 행사가 합법적이지만 하면 그 법률 자체의 내용 또는 목적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를 A라고 한다. 이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된 명확한 법이라 하더라도 법의 목적과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는 B가 대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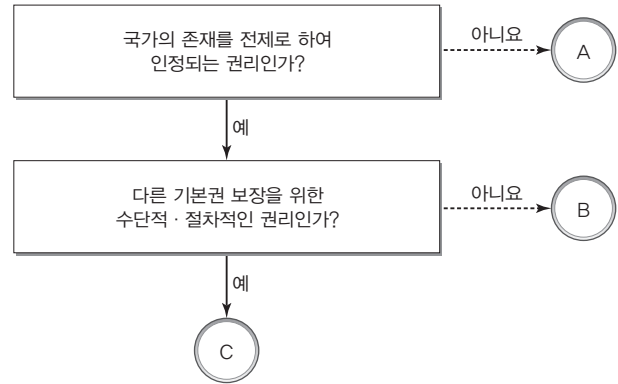
보기

- ㄱ. A는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 ㄴ. B의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로 위헌 법률 심사제가 있다.
- ㄷ. A는 B와 달리 법의 형식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도 중시한다.
- ㄹ. B는 A와 달리 국가의 권력 행사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23063-0163

7 기본권 유형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 하나임.) [3점]



- ① A는 바이마르 헌법에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 ② B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 ③ C는 국가 권력이 행사되지 않음으로써 보장되는 소극적 권리이다.
- ④ A는 B와 달리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인정되는 권리이다.
- ⑤ B는 A와 달리 국가 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이다.

8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임.) [3점]

- 갑국은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였다. 의회에서 ○○당 대표가 행정부 수반으로 선출되었고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하였다.
- 을국은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였다.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당은 의회 의원 선거 결과로 국정 운영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기

- ㄱ. 갑국에서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 ㄴ. 을국에서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는 동일인이다.
- ㄷ. 갑국에서는 을국과 달리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 ㄹ. 을국에서는 갑국과 달리 행정부 수반의 의회 해산권이 인정된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9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A는 B의 동의를 얻어 C의 장(長)과 D를 임명한다.
- C는 권한 쟁의 심판을 담당하며, D는 국무 위원 임명 제청권을 가진다.

- ① A는 조약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② B는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를 담당한다.
- ③ C는 상고·재항고 사건의 최종심 관할권을 가진다.
- ④ D는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에서 부의장이다.
- ⑤ C의 장(長)과 D는 A와 달리 B의 탄핵 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

1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의 의회 의원은 총 15명이며, 지역구 의원 4명과 비례 대표 의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구 의원은 4개의 선거구에서 단순 다수 대표제로 각각 1인을 선출하고 있으며, 비례 대표 의원은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 대표 의석수를 곱한 수의 정수(整數)만큼 의석을 각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표는 최근 갑국 의회 의원 선거에서의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와 정당 투표 결과이다.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

(단위: 표)

구분	A당	B당	C당	D당
선거구1	20	60	5	15
선거구2	20	15	35	30
선거구3	5	60	15	20
선거구4	15	30	10	45

<정당 투표 결과>

(단위: %)

구분	A당	B당	C당	D당
득표율	30	20	40	10

갑국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 의회 의원 선거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편하고자 한다.

• 개편안 •

- 지역구 의원 8명, 비례 대표 의원 7명을 선출한다.
- 지역구 의원은 현재 4개의 선거구에서 단순 다수 대표제로 각각 2인을 선출한다. 각 정당은 선거구마다 1명의 후보자만 공천한다.
- 비례 대표 의원 선거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다.

* 선거 제도 개편 시 위의 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 정당은 A당~D당만 존재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없으며, 투표율은 100%이고, 무효표는 없음.

- ① 현행 선거 결과 A당과 C당은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 ② 개편안 적용 시 현행에 비해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사표가 증가할 것이다.
- ③ 현행과 개편안은 모두 지역구 의원 선거 제도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 ④ 개편안 적용 시 B당의 총의석수는 현행보다 많다.
- ⑤ 개편안 적용 시 D당의 비례 대표 의석수는 현행과 같다.

11 민법의 기본 원칙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자: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 자치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 (가)에 따르면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해 사적 지배권은 인정되어야 하고, 국가나 타인은 함부로 이를 간섭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은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 (나)에 따르면 개인의 소유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통해 투기를 억제하고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① (가)는 개인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 ② 환경 오염의 원인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나)가 적용된 사례이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경제적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
- ⑤ (가), (나)는 모두 현대 사회의 사법 관계에 적용된다.

12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과 을은 ㉠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던 중 갑이 자녀를 임신함.



갑과 을은 ㉡ 혼인 신고를 하였고, 이후 자녀 A가 태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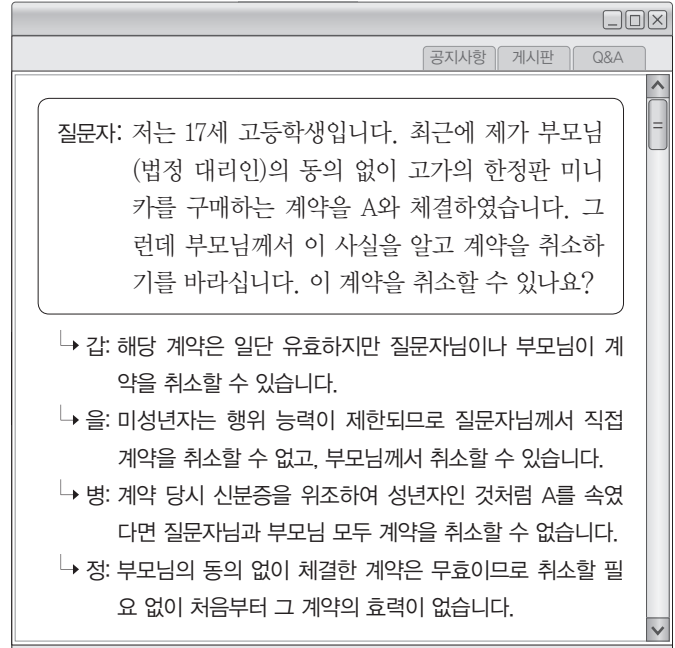
A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갑과 을은 협의상 이혼을 하였고, A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갑이 가지기로 정함.



몇 년 후 갑은 병과 재혼하였으며, 병은 A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함.

- ① ㉠은 혼인의 형식적 요건, ㉡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이다.
- ② ㉡ 이전에는 갑과 을에게 상호 간의 동거·협조·부양 의무와 일상 가사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갑과 을의 이혼은 1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필요로 한다.
- ④ 갑과 을의 이혼으로 을과 A에게는 면접 교섭권이 발생한다.
- ⑤ 병이 A를 입양하였으므로 을과 A의 친족 관계는 종료된다.

13 다음 인터넷 게시판의 질문에 법적으로 옳은 답변을 한 사람만을 고른 것은?



-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 ④ 을, 정 ⑤ 병, 정

1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얼마 전 저는 자녀 A(13세)와 공원에 산책을 갔는데 제가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는 사이에 A가 행인에게 돌을 던져 행인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갑

최근에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원 B(20세)가 뜨거운 커피를 손님에게 쏟아서 손님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을

- ① A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갑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② A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갑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진다.
- ③ B에게 고의가 없다면 B는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을이 B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을은 책임이 면제된다.
- ⑤ 을과 B는 갑과 A와 달리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진다.

15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은 술에 취한 을이 자신의 딸에게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을의 머리를 1회 때려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상해죄로 기소된 갑에게 법원은 “갑의 행위는 자신의 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라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 병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온 정이 흥분하여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자 병은 정을 승용차에 태우고 약 1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감금죄로 기소된 병에게 법원은 “병의 행위에 대해 감금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범의: 범죄 행위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려는 의사

- ① 법원은 갑의 행위가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② 법원은 병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③ 갑은 병과 달리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 ④ 병은 갑과 달리 범죄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 ⑤ 갑과 병은 모두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1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고등 법원

판 결

사건 □□□□노 □□□

피고인 갑

항소인 갑

...(중략)...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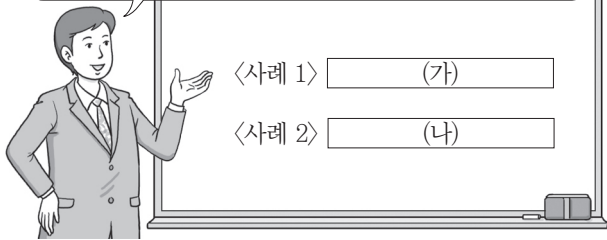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압수된 라이터 1개를 몰수한다.

- ① 갑에 대한 1심 재판은 지방 법원 단독 판사가 담당하였다.
- ② ○○ 고등 법원은 갑에게 형벌과 보안 처분을 모두 부과하였다.
- ③ ○○ 고등 법원은 갑에게 재산형에 해당하는 형벌은 부과하지 않았다.
- ④ ○○ 고등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갑은 4년간의 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 교도소에 수감된다.
- ⑤ ㉠을 통해 피고인이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다.

▶ 23063-0173

17 (가), (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례로 옳은 것은? [3점]

〈사례 1〉은 형사 보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이고, 〈사례 2〉는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 ① (가) - 불구속 수사를 받고 기소된 갑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 ② (가) - 을이 폭행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던 중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③ (가) - 살인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받았던 병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 ④ (나) - 정이 사기를 당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로부터 피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 ⑤ (나) - 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무가 피고인으로부터 민사적 손해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 23063-0174

18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중학교를 졸업한 갑(18세)과 을(17세)은 병이 운영하는 대형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다. 표는 갑과 을이 병과 체결한 근로 계약 내용의 일부이다.

구분	갑	을
근무일	주 4일(화~금)	주 4일(수~토)
근로 시간	16시부터 20시까지 (휴게 시간 17:30~18:00)	12시부터 20시까지 (휴게 시간 17:00~18:00)
임금	시간당 10,000원 (연장 근로 및 휴일 근로의 경우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업무 내용	창고 정리	

- ① 을은 토요일 근로에 대해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
- ② 을은 갑과 달리 근무일에 연장 근로가 불가능하다.
- ③ 을은 갑과 달리 근로 계약 체결 시 고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제출해야 한다.
- ④ 갑, 을의 휴게 시간은 모두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⑤ 병은 갑과 을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모두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23063-0176

19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을을 ○○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 형사 소송법 제249조에 규정된 공소 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갑은 고문 범죄에 대하여 공소 시효 적용을 배제한 ㉡ 국제 형사 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따라 해당 고소 사실에 대해 공소 시효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헌법 재판소는 국제 형사 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은 우리나라가 이를 ㉢ 비준·공포하였으므로 '헌법에 의하여 ㉣ 체결·공포된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위 로마 규정 제29조에 의하여 공소 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고문 범죄는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갑의 고소 사실에 대해서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 ① 헌법 재판소는 ㉡이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고 보았다.
- ②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도 ㉡과 같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의 체결 주체가 될 수 있다.
- ③ ㉠은 ㉡과 달리 강제로 집행할 집행 기구가 없다.
- ④ 갑은 ㉠이 ㉡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을 헌법 재판소에 청구하였다.
- ⑤ 우리나라에서 ㉢은 국회, ㉣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20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B와 C에 의하여 선출된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관을 선출하기 위해 B와 C는 각각 독자적으로 별개의 선거를 하며 양 기관에서 절대 다수표를 얻은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선출한다. 이때 C의 선거에서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 ① A는 국제 사회에서 국가와 개인 간에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다.
- ② B에서는 표결 시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1국 1표가 적용된다.
- ③ C에서 상임 이사국은 절차 사항에 대한 결정 시에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B는 C와 달리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군사적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 ⑤ C의 모든 이사국은 B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다.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 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 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23063-0177

1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술형 평가	
A와 B는 정치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이다. A와 구별되는 B의 특성을 세 가지만 서술하시오. (답안 한 가지당 옳은 답을 쓴 경우 1점, 틀린 답을 쓴 경우 0점을 부여함.)	
답안	점수
(가)	2점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 ① A는 정치를 국가와 사회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 ② B는 정치권력을 획득·유지·행사하는 국가 고유의 활동만을 정치로 본다.
- ③ A는 B에 비해 정치 참여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 ④ B는 A와 달리 정부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 ⑤ (가)에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정치로 본다.’가 들어갈 수 있다.

▶ 23063-0178

2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표는 질문 (가), (나)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A~D를 구분한 것이다.

구분	(가)		
	예	아니오	
(나)	예	A	B
	아니오	C	D

- A, B가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C의 탄핵 소추에 의해 D가 탄핵 심판을 한다.
- B는 A를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A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보기

- ㄱ. A, B는 모두 국무 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 ㄴ. D의 장(長)은 C의 동의를 얻어 B가 임명한다.
- ㄷ. (가)에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ㄹ. (나)에 ‘국민의 직접 선거로 구성되는가?’가 들어갈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23063-0179

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우리나라의 선거권 연령은 2020년에 19세에서 18세로, 대통령을 제외한 피선거권 연령은 2022년에 25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이로 인해 유권자 수가 확대됨으로써 A의 실현에 기여하였다.
- 정부는 일정 소득 이하의 계층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이는 저소득층의 물가 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B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 ① A는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 ② 국제법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A의 실현 방안이다.
- ③ B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④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B의 실현 방안이다.
- ⑤ A, B는 모두 근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원리이다.

▶ 23063-0180

4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근대 국가에 이르러서 국가 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죄형 법정주의가 등장하였다. 초기의 죄형 법정주의는 A에 따라 법률의 내용을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는 법률에 의한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어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로 인해 이후의 죄형 법정주의는 B에 따라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합치되도록 적정할 것을 요구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보기

- ㄱ. A는 법률의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에 부합해야 한다고 본다.
- ㄴ. B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들 수 있다.
- ㄷ. A는 B와 달리 합법적 독재가 정당화될 수 있는 논리로 약용될 수 있다.
- ㄹ. B는 A와 달리 입법자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간과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 23063-0181

5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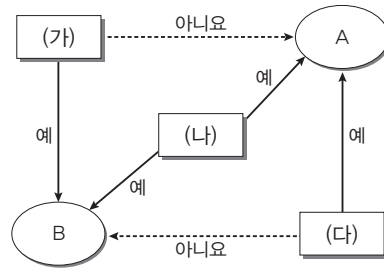
우리나라 ㉠〇〇도 의회 소개

- 의원
 - 선거: 18세 이상의 도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
 - 의석: 156석(㉠지역구 의원 141석, ㉡비례 대표 의원 15석)
- 〇〇도 의회는 집행부인 〇〇도와 〇〇도 교육청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조사하는 행정 감시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있다. 이를 위해 매년 1회 행정 사무 전반을 감사하고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지 확인 또는 집행부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〇〇도지사나 관계 공무원은 의회에 출석하여 행정 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의회가 요구할 경우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 ① ㉠은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고 행정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는 중·대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 표제가 적용된다.
- ③ ㉢은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된다.
- ④ ㉠은 예산 심의 및 확정권을 통해 ㉢을 견제할 수 있다.
- ⑤ ㉡, ㉢은 모두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23063-0182

6 그림은 (가)~(다)의 질문에 따라 전형적인 정부 형태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중 하나임.) [3점]



- ① (가)가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는가?'라면, A에서는 내각의 존속이 의회의 신임 여부에 달려 있다.
- ② (다)가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는가?'라면, B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된다.
- ③ (나)에 '의회 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없다.
- ④ (가)가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일원화되어 있는가?'라면, (다)에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갖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⑤ (다)가 '국민의 직접 선거로 행정부 수반이 선출되는가?'라면, (가)에 '의회가 행정부 수반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23063-0183

7 기본권 유형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한 4급 이상의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아무런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한 해당 법률 조항은 신고 의무자인 공무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이는 입법 목적 실현에 치중한 나머지 사생활 보호의 헌법적 요청을 무시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A를 침해한 것이다.

- ①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 ②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이다.
- ③ 국가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 ④ 국가가 개인의 자기 결정의 영역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음으로써 보장되는 권리이다.
- ⑤ 국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23063-0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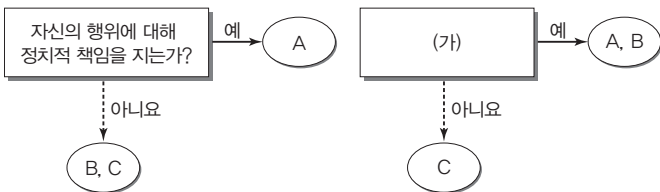
8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우리나라 국가 기관 중 하나임.) [3점]

- 구치소에 수감된 갑은 구치소 내에서 마음껏 다리를 뻗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을 수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A에 (가) 을/를 청구하였다.
- ○○ 공단에 근무하는 을은 △△당의 경선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며, 항소심 계속 중 해당 법률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B에 (나) 제청 신청을 하였고, B는 A에 제청하였다.

- ① A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 ② B는 탄핵 심판을 통해 A의 장(長)을 견제할 수 있다.
- ③ 재판 당사자가 B에 (나) 제청 신청을 하면, B는 반드시 A에 (나)를 제청하여야 한다.
- ④ (가), (나)는 모두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
- ⑤ (가)에 대한 심판이 기각되었다면, 갑은 A에 (나)를 제청할 수 있다.

▶ 23063-0185

9 그림은 정치 참여 집단 A~C를 질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3점]



- ① A는 비영리성, 비당파성을 특징으로 한다.
- ② A는 B, C와 달리 정치 과정에서 환류 기능을 담당한다.
- ③ B가 이익 집단이라면, A, C는 B와 달리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 ④ B가 시민 단체라면, (가)에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⑤ (가)가 ‘자기 집단의 특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가?’라면, B는 시민 단체, C는 이익 집단이다.

▶ 23063-0186

1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과 을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갑은 학교 폭력이 지속되는 이유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국회 국민 동의 청원 누리집(홈페이지)에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 글을 남겼다. 반면 을은 학교 폭력이 지속되는 이유는 시민들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관련 ㉡시민 단체에 가입하였고, 시민 단체 회원들과 함께 시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꾸준히 서명 운동에 참여하였다.

보기

- ㄱ. ㉠은 ㉡과 달리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 ㄴ. 갑, 을은 모두 정치 참여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 갑의 정치 참여 방법은 을의 정치 참여 방법에 비해 시공간의 제약이 작다.
- ㄹ. 을의 정치 참여 방법은 갑의 정치 참여 방법과 달리 개인적 정치 참여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23063-0187

1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법률혼 사이인 갑(남)과 을(여)은 자녀 병, 갑의 어머니 정과 함께 살고 있었다. 이후 갑과 을은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하였으며, 병은 을과 함께 살고 있었다. 이후 을은 무와 재혼을 하였으며, 무는 병을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고자 한다. 을과 무가 혼인을 하면서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으로 하기로 하였다.

- ① 입양 당시 병의 연령이 16세라면, 병의 성과 본은 무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② 입양 당시 병의 연령이 21세라면, 무가 병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입양 후 병은 을과 무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한다.
- ④ 입양 후 갑이 유언 없이 사망하면, 병은 정과 달리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 ⑤ 입양 후 무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병은 을과 달리 무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12 민법의 기본 원칙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구분	적용된 사례
(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갑은 위층에서 내려온 물 때문에 벽지가 젖어서 곰팡이가 생기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위층에 살고 있는 을에게 배상을 요구했으나 을은 임차인이며 이사 온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누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에 을이 살고 있는 집의 주인 병이 누수 원인을 찾아내 수리하고 아래 층의 벽지 훼손 등 피해를 모두 배상해 주었다.
(나)	연예인 지망생 정은 연예 기획사 ○○사와 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 중 ○○사가 주최하는 행사의 성격에 관계없이 ○○사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해당 행사에 정은 무상으로 출연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정은 해당 내용이 자신에게 상당히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해당 내용이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 ① (가)는 제품의 결함 때문에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 적용된다.
- ② (나)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원칙이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경제적 강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 ⑤ (가), (나)에 따라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인정한다.

13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을, 병, 정은 같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같이 놀다가 행인 A와 시비가 붙었으며, 집단으로 A를 폭행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 표는 형사 절차 단계에서 갑, 을, 병, 정은 답변이고, 갑과 을은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으며, 정은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적이 없다. 2심 법원의 판결은 확정되었다.

질문	답변			
	갑	을	병	정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는가?	예	예	아니요	아니요
검사에 의해 기소되었는가?	예	예	아니요	예
1심 법원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았는가?	예	아니요	해당 없음.	아니요
2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가?	아니요	아니요	해당 없음.	예

- ① 갑은 2심 판결 이후 법원에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을은 1심 재판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 ③ 병은 19세 미만의 범죄 소년에 해당한다.
- ④ 갑, 을, 정은 모두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병, 정은 갑, 을과 달리 수사 단계에서부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1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오토바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갑은 을(17세)과 고가의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을이 미성년자로서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을이 오토바이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판매 대금은 일주일 후에 받기로 하고 오토바이를 인도하였다. 하지만 을은 일주일 지나도 오토바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 ①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갑은 을에게 계약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없다.
- ③ 을은 갑과의 계약이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을은 병과 달리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⑤ 병은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23063-0191

15 (가)에 들어갈 옳은 법적 조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저는 점심시간에 ○○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음식을 나르던 갑이 실수로 뜨거운 국물을 저에게 쏟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미성년자 을이 법정 대리인인 병과 공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제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제가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가)



보기

- ㄱ. 갑이 피용자이면, 갑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ㄴ. 갑이 사용자이면, 갑에게 사용자의 배상 책임에 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ㄷ. 을에게 책임 능력이 없다면, 병에게 특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ㄹ. 을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면, 병과 달리 을에게만 일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23063-0192

16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서로 다른 국제 연합 주요 기관 중 하나임.)

A에서 갑국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결의안은 을국만 반대하여 부결되었고, 병국에 대한 경제 제재안은 11개국이 찬성하고 ①4개국이 반대하여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갑국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을국의 입장을 듣기 위해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B가 열렸다.

보기

- ㄱ. 을국은 ①에 포함되지 않는다.
- ㄴ. A의 모든 회원국 임기는 2년이다.
- ㄷ. B는 주권 평등 원칙에 따른 표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ㄹ. A, B는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할 권한을 갖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23063-0193

17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근로 계약서

사용자 갑과 근로자 을은 다음과 같은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 기간: 2023년 1월 2일~2023년 2월 28일
2. 근무 장소: 대형마트 창고
3. 근로 시간: 09시~17시(휴게 시간: 12시~13시)
4. 근무일: 매주 화요일~토요일(유급 휴일: 매주 월요일)
5. 임금 및 지급 방법
 - 임금: 시간당 10,000원
 - 지급 방법: (가) 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10일에 입금

* 을은 중학교를 졸업하였으며, 2023년 법정 최저 임금은 시간당 9,620원임.

보기

- ㄱ. 을이 17세라면, 근로 시간은 근로 기준법에 위배된다.
- ㄴ. 을이 17세라면, 갑은 을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 ㄷ. 을이 21세라면, 갑은 을과 합의하에 야간 및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다.
- ㄹ. 을이 17세라면 (가)에 '법정 대리인'이, 21세라면 (가)에 '본인'이 들어간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8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은 폭행죄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에서 금고 8월에 집행 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 을은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에서 징역 3년과 함께 치료 감호 처분을 선고받았다.

* 갑, 을의 재판 결과는 위 내용대로 확정되었음.

보기

- ㄱ. 갑은 유예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을 받았다.
- ㄴ. 법원은 을과 달리 갑에게는 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다.
- ㄷ. 을은 갑과 달리 노역이 부과되는 자유형을 선고받았다.
- ㄹ. 갑, 을 모두에게 대안적 형사 제재가 부과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9 국제법의 법원(法源)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임.)

- A는 B, C와 달리 국제 사회에서 반복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효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성립한다.
- A, B는 C와 달리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을 가진다.

- ① A는 일반적으로 성문화된 문서 형식으로 존재한다.
- ② B의 사례로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 있다.
- ③ 우리나라에서 C는 국회가 비준하고 대통령이 공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④ A, C가 국내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⑤ B, C는 A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국의 의회는 모두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 선거구에서 각 선거구마다 다수 득표자 2인을 선출한다. 정당은 각 선거구마다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한다. 현행 선거 제도에서 실시된 갑국의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갑국은 A당~E당만 존재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없으며, 투표율은 100%이고 무효표는 없다. 개편안 적용 시 지역구 선거는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만을 근거로 판단한다.

<지역구 의원 선거 정당별 득표 결과>

(단위: 표)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합계
선거구1	55	5	70	65	5	200
선거구2	70	60	10	20	40	200
선거구3	50	40	35	30	45	200
선거구4	110	20	40	15	15	200
선거구5	80	30	20	55	15	200
선거구6	90	25	10	60	15	200

갑국은 차기 의회 의원 선거부터 다음과 같은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 개편안

의회는 지역구 의원 6인과 비례 대표 의원 6인으로 구성한다. 지역구는 그대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은 6개의 선거구에서 단순 다수 대표제로 선출한다. 비례 대표 의석은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 대표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을 각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정당별 득표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정당 투표 득표율	38	29	20	9	4

- ① 현행 지역구 선거는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② 개편안 적용 시 의석을 확보한 정당의 수는 감소한다.
- ③ 개편안 적용 시 B당, C당은 모두 총의석률이 정당 투표 득표율보다 낮다.
- ④ D당은 현행보다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가 유리하다.
- ⑤ 갑국이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국가라면, A당은 현행과 달리 개편안 적용 시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 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 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23063-0197

1 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사: 기업의 노사 간 임금 협상은 정치의 사례에 해당합니까?
 갑: 정치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국가만의 고유한 현상으로서 정치권력을 획득·유지·행사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을: 정치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발생하는 이해관 계의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활동입 니다. 따라서 기업의 노사 간 임금 협상은 정치의 사례에 해 당합니다.

- ① 갑의 관점은 학급 내 생활 규칙의 제정을 정치로 본다.
- ② 을의 관점은 대통령의 법률 공포를 정치로 보지 않는다.
- ③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에 비해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 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 ④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 ⑤ 정치를 갑의 관점은 넓은 의미로, 을의 관점은 좁은 의미 로 이해한다.

▶ 23063-0198

2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 른 것은? [3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된 명확한 법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 는 A는 통치가 법에 근거하기만 하면 독재 정치도 가능하다는 논리로 악용되었다. 그 사례 중 하나가 히틀러가 이끌던 독일 나치 정권의 통치였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 쳐 만들어진 법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과 내용도 정당해야 함을 강조하는 B가 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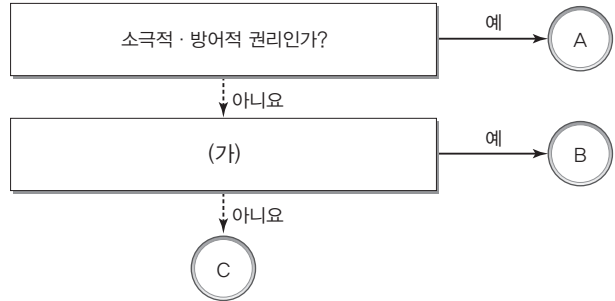
보기

- ㄱ. 위헌 법률 심사 제도는 B의 실현에 기여한다.
- ㄴ. A는 B와 달리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 ㄷ. A, B 모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 ㄹ.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자 하는가?'라는 질문 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 23063-0199

3 그림은 질문에 따라 기본권 유형 A~C를 구분한 것이다. 이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 하나임.) [3점]



- ① A는 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되는 권리이다.
- ② B, C는 A와 달리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다.
- ③ C가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등장한 권리라면, B는 국 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 ④ (가)에 '다른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권리인 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⑤ (가)에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인가?'가 들 어가면, B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 는 권리이다.

▶ 23063-0200

4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B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관련 헌법 전문 내용	실현 방안
A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가)
B	(나)	고문 금지 및 진술 거부권 보 장 등

- ① A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리 이다.
- ② B는 국가가 경제 활동을 조정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③ A는 B와 달리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강조된 원리이다.
- ④ (가)에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및 검열 금지'가 들어갈 수 있다.
- ⑤ (나)에 '.....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가 들어갈 수 있다.

▶ 23063-0201

5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국회 의원 선거 운동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재판 중 갑은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라는 공직 선거법 제103조 제3항 부분의 위헌 여부 판단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A의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 소원 심판의 유형 중 하나인 B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는 선거의 공정과 평온의 확보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일반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법률 조항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 ① 헌법 재판소는 어떤 경우에도 집회의 자유를 법률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② 법원과 헌법 재판소는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 조항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
- ③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갑은 헌법 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해당 법률 조항 부분에 근거해 재판을 계속 받게 된다.
- ④ A는 재판 당사자의 제청 신청이 없다면 법원의 직권으로 제청이 불가능하다.
- ⑤ B는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A의 제청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다.

▶ 23063-0202

6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교사: 우리나라 국가 기관의 권한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갑: 대통령은 A의 장(長)을 임명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을: 대통령은 A의 동의를 얻어 B의 재판관 중에서 B의 장(長)을 임명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병: B는 A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이를 심판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교사: 두 사람은 옳게 말했지만, 한 사람은 틀리게 말했어요.

보기

- ㄱ. A는 우리나라 행정부 최고의 심의 기관이다.
- ㄴ. A는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 심사권을 가진다.
- ㄷ. B는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 ㄹ. A는 B의 재판관 중 3인을 선출할 권한을 가진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 23063-0203

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은 서로 다른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음.)

- 갑국 의회는 연립 내각을 이끌고 있는 행정부 수반을 교체하기 위해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하였다.
- 의회 내 최다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 소속인 을국의 행정부 수반은 최근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 ① 갑국은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 인물이다.
- ② 을국의 정부 형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된 형태이다.
- ③ 갑국은 을국과 달리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④ 을국은 갑국과 달리 의회 전체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존재한다.
- ⑤ 갑국, 을국에서는 모두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 23063-0204

8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을 심의·확정할 수 있는 A는 B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상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는 B는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비목(費目): 비용 지출의 내역을 밝힌 항목

- ① A는 지방 자치 단체의 집행 기관이다.
- ② B는 지방 자치 단체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다.
- ③ A는 B와 달리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 ④ B는 A와 달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⑤ A와 B는 수평적 권력 분립 관계에 있다.

▶ 23063-0205

9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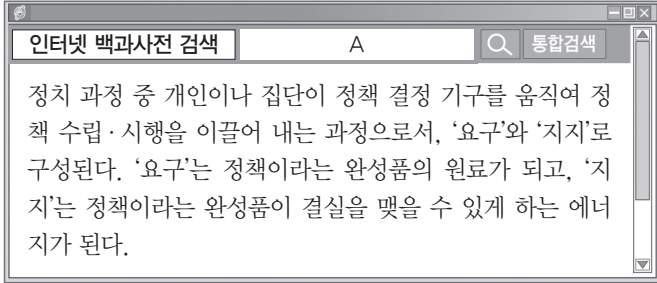
- '자기 집단의 특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합니까?'로 A와 B를 구분할 수 있다.
- '정권 획득을 추구합니까?'로 A와 C를 구분할 수 없다.

보기

- ㄱ. A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 ㄴ. B는 A와 달리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 ㄷ. C는 B와 달리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 ㄹ. A, C는 B와 달리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 자료의 A에 해당하는 적절한 사례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ㄱ. 정부가 도심 수해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 ㄴ. 시민 단체가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다.
- ㄷ. 노동계와 경영계는 협상 전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서로 다른 내년 최저 임금 인상안을 발표하였다.
- ㄹ. 각 지방 자치 단체는 수도권 소재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에 착수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1 민법의 기본 원칙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당사자 간에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시장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 전제가 무너진 탓에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오늘날 A에 대해 일정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① 개인이 상대방과 자율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원칙이다.
- ②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 ③ 계약 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④ 개인의 소유권이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임을 강조한다.
- ⑤ 자신의 행동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12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 의회는 (가)~(라) 선거구에서 선거구당 동일한 수만큼 단순 다수 대표제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 8명으로 구성되고,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1명의 후보자를 공천하며,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 1표를 행사한다. 표는 최근 실시된 갑국 의회 의원 선거의 정당별 득표율이다.

(단위: %)

선거구 \ 정당	A당	B당	C당	D당
(가)	40	15	30	15
(나)	35	30	15	20
(다)	25	35	20	20
(라)	60	20	15	5

갑국은 다음의 의회 의원 선거 제도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 <1안> (가)~(라) 선거구를 각각 두 개씩으로 나누어 선거구당 1명을 단순 다수 대표제로 선출함.
- <2안> 모든 선거구를 하나로 통합하고 유권자는 지지하는 정당에 1표를 행사함. 정당별 득표율에 총의석수(8)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 부분만큼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 의석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함.

- * 선거 제도 개편안 검토 시 위 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1안>에서 (가)~(라) 선거구를 각각 두 개씩으로 나눌 경우 나누기 전 선거구의 정당별 득표율이 나누어진 두 개의 선거구에서 동일하게 유지됨.
- ** 정당은 A당~D당만 존재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없으며, 선거구당 유권자 수는 같음.
- *** 유권자는 지지하는 정당을 기준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율은 100%이며, 무효표는 없음.

- ① <1안>은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유권자의 투표 가치 차등 문제가 나타난다.
- ② <1안> 적용 시 현재에 비해 사표의 수가 감소한다.
- ③ <2안> 적용 시 현재에 비해 과대 대표되는 정당의 수가 증가한다.
- ④ <2안> 적용 시 현재에 비해 당선자를 배출한 정당의 수가 증가한다.
- ⑤ <1안>과 <2안> 중 어떤 개편안을 적용하더라도 현재에 비해 A당의 의석수는 증가하고, B당의 의석수는 감소한다.

▶ 23063-0209

13 다음 사례의 상황 (가), (나)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만화를 좋아하는 고등학생 갑(17세)은 평소 소장하고 싶었으나 이미 절판되어 서점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만화책 전집을 을(40세)이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고가에 구입하였다.

- (가) 계약 체결 당시 을은 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음.
- (나) 갑이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을을 속이고 계약하였음.

- ① (가)의 경우 갑이 계약을 취소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② (가)의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응답을 촉구할 수 있다.
- ③ (나)의 경우 갑과 을의 계약은 무효이다.
- ④ (나)의 경우는 (가)의 경우와 달리 갑의 부모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⑤ (가), (나)의 경우 모두 을은 갑의 부모가 추인하기 전에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23063-0210

1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은 해외로 출장을 간 친구 을 소유의 강아지를 맡아 돌보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마당에서 놀던 강아지가 집 밖으로 나가 지나가던 병을 물어 병이 상해를 입었다.
- A가 사장인 음식점의 종업원 B는 1층에서 2층으로 음식을 나르던 중 계단을 내려오던 손님 C와 실수로 부딪혀 C가 상해를 입었다.

- ① 갑은 병의 손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진다.
- ② 병은 갑과 을에게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③ B가 자신의 행위에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면 C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 ④ C에 대해 B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A에게 사용자의 배상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A가 B에 대한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C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 23063-0211

15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어머니 병을 모시고 사는 갑은 을과 법률상 혼인을 하여 함께 살면서 10년간 자녀가 없었고, 갑의 친동생인 정에게는 무와 법률상 혼인을 하여 낳은 자녀 A, B가 있었다. 갑, 을은 정, 무와 합의하여 A를 입양하였는데, 이후 갑과 을이 이혼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갑이 사고로 사망하였다. 갑의 재산은 10억 원이며, 빚은 없다.

이 사례의 등장 인물 중 [가]은/는 [나]에 따라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 | | |
|-----|------------------------|
| (가) | (나) |
| ① 을 | A에 대한 친권을 갖고 있는가 |
| ② 을 | 갑과의 이혼이 재판상 이혼이었는가 |
| ③ 병 | 갑과 을의 이혼이 법적으로 유효한가 |
| ④ 병 | 갑과 A의 친자 관계가 법적으로 유효한가 |
| ⑤ 정 | A와 입양 전 친족 관계가 종료되었는가 |

▶ 23063-0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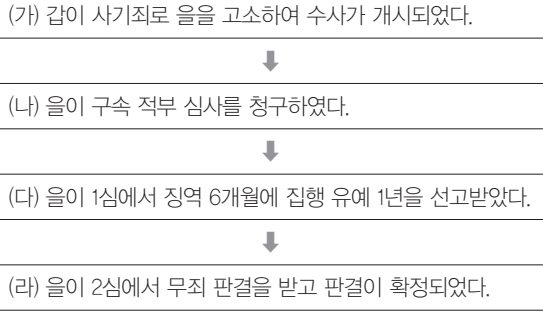
16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A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부정 청탁 금지 조항의 '부정 청탁'이라는 용어는 형법 등 여러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고, 대법원은 그 의미에 관하여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으며, 입법 과정에서 부정 청탁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는 대신 14개 분야의 부정 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구성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정 청탁 금지 조항의 '사회 상규'라는 용어도 형법 제20조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대법원이 그 의미에 관해 일관되게 판시해 오고 있으므로 부정 청탁 금지 조항의 사회 상규도 이와 달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이 '부정 청탁', '사회 상규'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으므로 부정 청탁 금지 조항이 A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 ① 범죄와 형벌 간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② 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 ③ 범죄와 형벌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
- ④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 ⑤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 23063-0213

17 형사 절차 (가)~(라)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가)로 인해 갑과 을은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 ② (나)로 인해 을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를 거쳤다.
- ③ (다)로 인해 을은 무죄 추정의 원칙 적용이 중지되었다.
- ④ (라)로 인해 을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 ⑤ (가)와 (나) 사이에 검사가 을을 기소하였다.

▶ 23063-0214

18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 style="text-align: center;">○○ 신문 **월 **일</p> <p>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상임 이사국을 포함하여 13개 이사국이 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임 이사국 2개국의 반대로 A의 갑국에 대한 제재 신규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신문 ##월 ##일</p> <p>현재 국가가 단절된 상태인 을국과 병국이 국경을 흐르는 강물의 사용권을 놓고 협상을 벌이다 합의에 실패하자 상대국을 B에 서로 제소하여 본격적으로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다.</p>
---	---

- ① A는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 ② A의 의사 결정 방식에는 주권 평등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된다.
- ③ B는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국을 직접 제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 ④ B는 국제법을 적용한 재판으로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분쟁도 해결할 수 있다.
- ⑤ B는 A의 비상임 이사국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23063-0215

19 다음 글에 나타난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국제 사회는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별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 상태와 같다. 국가들은 필요할 경우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조약을 맺기도 한다. 그러나 조약도 강대국 입장의 반영물일 뿐이라서, 국가 간의 권력관계가 변화하거나 강대국의 국익이 달라지면 조약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무용지물이 되거나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보기

- ㄱ. 국제 사회에서 힘의 논리가 통용된다고 본다.
- ㄴ. 개별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한다고 본다.
- ㄷ.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 ㄹ.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23063-0216

20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근로 계약서

사용자 A와 근로자 B(17세, 고등학생)는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 계약 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 근무 장소: 광역 물류 센터 건물 5층 창고
3. 업무 내용: 택배 물품 분류 및 배분 보조
4. 근로 시간: 오전 8:00~오후 6:30(연장 근로 1시간 포함)
(휴게 시간: 오전 11:00~12:00, 오후 15:00~15:30)
5. 근무일: 매주 2일(토, 일) 근무
6. 임금
 - 급여: 시간당 9,500원
 - 임금 지급일: 매월 25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 방법: 근로자 명의 예금 통장에 입금

*2023년 법정 최저 임금은 시간당 9,620원임.

- ① 근로 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 ② B는 근로를 위해서 고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한다.
- ③ B는 A와 근로 계약 체결 시 명시한 급여가 아니라 법정 최저 임금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 ④ 휴게 시간과 연장 근로 시간을 고려하면 1일 근로 시간은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 ⑤ 시간당 급여 계산 방식이므로 매월 1회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 기준법을 위반한다.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 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 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23063-0217

1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넓은 의미로 정 치를 바라보는 관점 중 하나임.)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A, B 중 갑은 A의 입장에, 을은 B의 입장에 있다. 이에 따라 '야구 동호회 회원들이 회비 사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 은/는 정치로 본다. 그리고 '국회의 국가 예산안 심의·확정권 행사'에 대해 은/는 정치로 본다.

보기

- ㄱ. (나)에 '갑, 을 모두'가 들어갈 수 있다.
- ㄴ. (가)에 '을과 달리 갑'이 들어가면 A와 달리 B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 ㄷ. (가)에 '갑과 달리 을'이 들어가면 B는 A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용이하다.
- ㄹ. B가 정치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하는 국가 고유의 활동만을 정치로 본다면 (가)에 '갑과 달리 을'이 들어갈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 23063-0218

2 표는 법치주의의 유형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구분	해당 유형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B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본다.	㉠
(가)	A

- ① ㉠에 'A, B'가 들어갈 수 없다.
- ② (가)에 '통치의 합법성을 강조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③ (가)에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나 목적을 문제 삼지 않는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위헌 법률 심사제의 도입을 강조한다.
- ⑤ A, B는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23063-0219

3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사 회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중 하나임.) [3점]

- '소극적 권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A와 B가 같다.
-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D의 응답은 '예'이다.
- '수단적 권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B와 C가 같다.

- ① 국민 투표권은 C에 해당하는 권리이다.
- ② A와 달리 B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다.
- ③ B와 달리 C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성격의 권리이다.
- ④ C와 달리 D는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이다.
- ⑤ D와 달리 A는 천부 인권적 성격을 갖는 권리이다.

▶ 23063-0220

4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실현 방안	관련 헌법 내용
A	•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 <input type="text" value="(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B	• 사회권 보장 • <input type="text" value="(나)"/>	<input type="text" value="(다)"/>

보기

- ㄱ. (가)에 '국민 투표제 실시'가 들어갈 수 있다.
- ㄴ. (나)에 '여성 및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들어갈 수 있다.
- ㄷ. (다)에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가 들어갈 수 있다.
- ㄹ. B는 A와 달리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 23063-0221

5 표는 갑국의 각 시기별 정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갑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음.) [3점]

구분	T대	T+1대	T+2대	T+3대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B당	A당	A당	B당
의회 제1당	B당	A당	B당	B당
야당의 의석 점유율	㉠	45%	60%	㉡

* 갑국의 정부 형태는 1회 변경되었고, T+1대와 T+2대의 정부 형태는 다름.
** 갑국 의회에 무소속 의원은 없고, 여소야대 현상은 1회 나타났음.

보기

- ㄱ. ㉠에 B당을 제외한 정당들의 의석 점유율 합이 들어갈 수 없다.
- ㄴ. ㉡에 50%를 초과하는 의석 점유율이 들어갈 수 없다.
- ㄷ. T대와 달리 T+2대에는 행정부 수반의 의회 해산권이 인정된다.
- ㄹ. T+3대와 달리 T+1대에는 의회 의원의 각료 겸직이 인정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 23063-0222

6 다음 자료를 통해 파악되는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의 가상 주요 일정표>

○○월 1주	상고심을 담당하는 B의 장(長)에 대한 임명 동의권 행사
○○월 2주	갑국과의 △△ 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 행사
○○월 3주	□□ 법률 개정안에 대한 C의 재의 요구에 대해 재의결함.
○○월 4주	국무 회의의 부의장인 D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 및 질문권 행사
○○월 5주	C 직속의 독립적 공무원 직무 감찰 기관인 E의 장(長)에 대해 탄핵 소추권 행사

- ① A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심사권을 갖는다.
- ② ○○월 3주의 '재의결'의 경우 A의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 ③ B는 ○○월 5주의 탄핵 소추권 행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담당한다.
- ④ C는 A의 장(長), B의 장(長), D, E의 장(長)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
- ⑤ E는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 23063-0223

7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은 재판 중 ○○법 제20조에 대해 법원에 ㉠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다.
- 을은 재판 중 □□법 제20조에 대해 법원에 ㉡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을은 A에 ㉢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병은 재판과 상관없이 △△법 제20조가 위헌이라며 A에 ㉣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보기

- ㄱ. A의 재판관은 9명으로 모두 대통령이 지명한다.
- ㄴ. ㉠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 ㄷ. ㉡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 ㄹ. ㉢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고, ㉣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 23063-0224

8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C는 각각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중 하나임.)

수행 평가

3학년 ○반 이름: 갑

정치 참여 집단 A~C의 특징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의 답안 내용 및 교사의 평가 내용>

갑의 답안 내용	교사의 평가 내용
A는 B와 달리 ㉠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B 모두의 특징에 해당하는 내용임.
C는 B와 달리 ㉡ 공익보다 특수한 이익의 실현을 중시한다.	C가 아닌 B의 특징에 해당하는 내용임.
B는 A와 달리 (가)	(나)

- ① ㉠을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로 변경해도 된다.
- ② ㉡을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할 수 없다.
- ③ (가)에 '비당파성, 비영리성을 모두 추구한다.'가 들어가면 (나)에 'B가 아닌 A의 특징에 해당하는 내용임.'이 들어갈 수 있다.
- ④ A는 C와 달리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 ⑤ A~C는 모두 정치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을 평가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23063-0225

9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국의 의회는 지역구 의원 240명, 비례 대표 의원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권자는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에 1표, 지지하는 정당에 1표씩을 행사한다. 지역구 의원은 240개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며, 비례 대표 의석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 대표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의석을 각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표는 갑국의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단위: %)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정당 득표율	38	33	15	8	6
지역구 의석률	30	35	20	10	5

갑국에서는 선거 제도를 개편하려고 하는데, 다음은 개편하고자 하는 선거 제도와 그에 따른 예상 선거 결과이다.

〈1안〉 현행 선거 제도와 모두 동일하나,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120개에서 선거구당 2명씩을 선출한다.

(단위: %)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지역구 의석률	35	25	25	5	10

〈2안〉 현행 선거 제도와 동일하나,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 비례 대표 의석은 각 정당의 배분 의석수(=각 정당 득표율 × 300석)에서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를 뺀 값을 각 정당에 배분한다. 각 정당의 배분 의석수보다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더 많으면 해당 정당에는 비례 대표 의석은 배분하지 않고, 그 결과 갑국 의회에 초과 의석이 발생할 수 있다.

- * 개편안 검토 시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토대로 함.
- ** 각 정당은 지역구 선거구당 1명씩만 공천할 수 있음.
- *** 투표율은 100%이고, 무효표 및 무소속 의원은 없음.

- ① 현행에서 정당 득표율에 비해 과대 대표된 정당은 B당, D당뿐이다.
- ② 현행에 비해 〈1안〉에서 A당과 달리 B당의 의석률은 감소하였다.
- ③ 〈2안〉에서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한 정당은 C당과 D당뿐이다.
- ④ 현행, 〈1안〉, 〈2안〉 중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격차는 〈2안〉이 가장 작다.
- ⑤ 현행 지역구 선거 제도와 달리 〈1안〉의 지역구 선거 제도에서는 지역구 의석률이 50%를 초과하는 정당이 나타날 수 없다.

[10~11]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은 을과 혼인한 후 A, B를 낳고 갑의 홀어머니 병과 함께 살았다. 갑과 을은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 ㉠이혼을 하였다. 갑은 정과 재혼을 하고 병, A, C와 함께 살았는데, C는 정이 재혼 전에 전 배우자와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기 전에 낳은 자녀이다. 정은 A를 ㉢친양자로 입양하였으나, 갑은 C를 입양하지 않았다. 을과 무는 재혼을 하고 B와 함께 살다가 ㉣D를 낳았고, 무는 B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다.

* 사례의 혼인은 모두 법률혼임.

▶ 23063-0226

10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은 ㉡과 달리 원칙적으로 이혼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으로 인해 A와 갑의 친족 관계는 종료된다.
- ③ ㉣ 이후 을과 무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D와의 친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 ④ ㉤은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과 달리 ㉤은 성인의 경우에도 입양이 가능하다.

▶ 23063-0227

11 (가), (나)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은 빚 없이 재산 <input type="text" value="㉠"/> 원을 남기고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
(나)	을은 빚 없이 재산 <input type="text" value="㉡"/> 원을 남기고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

- ① (가)에서 A의 법정 상속액이 1억 원이면, ㉠은 '4억'이다.
- ② (가)에서 ㉠에 '18억'이 들어가면, C의 법정 상속액은 4억 원이다.
- ③ (나)에서 ㉡에 '10억'이 들어가면, 무의 법정 상속액은 다른 법정 상속액의 합보다 1천만 원 이하로 적다.
- ④ (가)보다 (나)에서 법정 상속권자가 1명 많다.
- ⑤ ㉠에 '7억', ㉡에 '14억'이 들어가면, (가), (나) 상황 이후 B의 법정 상속액은 총 6억 원이다.

▶ 23063-0228

12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는 ㉠광역 자치 단체와 ㉡기초 자치 단체로 구분되며,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에는 A, B가 있다. A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성되며, B는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갖는다.

- ① A는 조례 제·개정 및 폐지권을, B는 규칙 제정권을 갖는다.
- ② A는 지방 자치 단체의 의결 기관이고, B는 집행 기관이다.
- ③ A와 B는 수평적 권력 분립 관계에 있다.
- ④ ㉠의 ㉢과 달리 ㉡의 ㉣은 중·대선거구제로 선출된다.
- ⑤ ㉠의 ㉢과 ㉡의 ㉣은 모두 주민 소환제의 대상이 된다.

▶ 23063-0229

13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미성년자 갑~정은 고가의 자전거를 자전거 판매업자 A로부터 구매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표는 갑~정이 A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법적 판단을 위해 구분한 것이다.

구분	해당하는 사람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병, 정
계약 체결 당시 미성년자임을 A가 알았다.	을, 병, 정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A가 믿게 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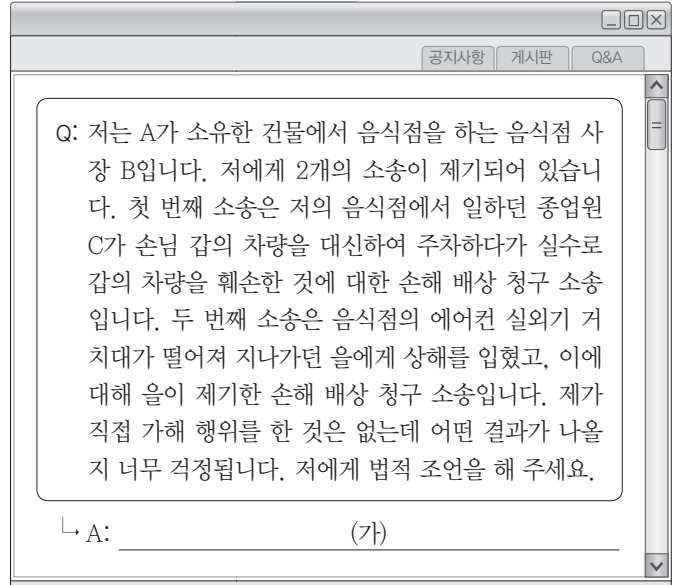
보기

- ㄱ. 을, 정은 모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ㄴ. 갑의 부모, 병의 부모는 모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ㄷ. A는 을의 부모와 달리 갑의 부모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ㄹ. A는 정외의 부모와 달리 병의 부모에게 계약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23063-0230

14 다음 인터넷 게시판의 (가)에 들어갈 법적 판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C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 성립해야 사장(B)님께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② C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 성립해도 사장(B)님께서 C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면책됩니다.
- ③ 사장(B)님은 을이 입은 손해에 대해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일차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④ 사장(B)님이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소유자인 A가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 ⑤ 갑이 입은 손해와 달리 을이 입은 손해에 대해 사장(B)님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23063-0231

15 다음 교사의 질문에 옳은 답변을 한 학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례	법적 쟁점	법원 판결
(가)	A가 B를 폭행한 것이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	무죄
(나)	A가 B에게 상해를 입힐 당시 A가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무죄
(다)	A가 가져간 B의 것이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 기 위한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죄

교사: 범죄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가)~(다)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내용을 발표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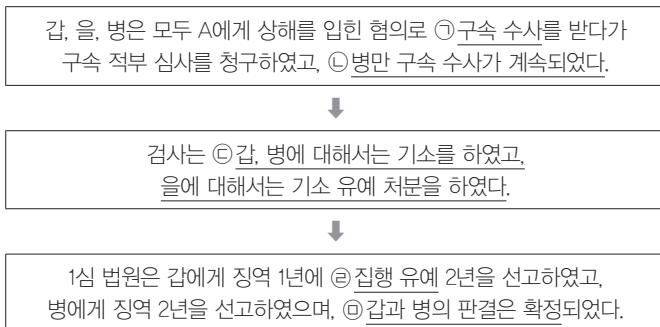
보기

갑: (가)에서 법원은 A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을: (나)에서 법원은 A에게 가해지는 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병: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 요건 중 (나)가 아닌 (가)의 법적 쟁점과 같아요.
 정: (가), (나)와 달리 (다)에서 법원은 A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 ④ 을, 정 ⑤ 병, 정

▶ 23063-0232

16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을 위해서는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한 구속 영장이 필요하다.
- ② ㉡에도 불구하고 갑, 을, 병 모두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③ ㉢으로 인해 갑, 병은 을과 달리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된다.
- ④ ㉣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 ⑤ ㉤ 이후 갑, 병과 달리 을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3063-0233

17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수행 평가

- 과제 1: 모둠 I은 '불법 행위', 모둠 II는 '소년 사건'과 관련한 법적 판단 내용을 두 가지씩 적으시오. (법적 판단 내용이 옳으면 각 1점씩이며, 총점은 2점임.)
- 과제 2: 타 모둠의 법적 판단에 대해 각각 평가하시오. (타 모둠에 대한 평가 내용이 옳으면 각 1점씩이며, 총점은 2점임.)

[사례]

갑(12세)은 불량난을 하다가 A의 창고를 태워 A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었고, 을(16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폭행하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과제	모둠 I	모둠 II
과제 1: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1. 갑이 책임 능력이 없다면 A는 갑의 감독 의무자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
	(가)	2. 갑과 달리 을에게는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과제 2: 타 모둠의 법적 판단에 대한 평가	1. 법적 판단 내용이 옳지 않음.	1. <input type="text" value="㉠"/>
	2. <input type="text" value="㉡"/>	2. 법적 판단 내용이 옳음.
채점 결과	2점	3점

보기

- ㉠. (나)에 '갑과 달리 을에게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없다.'가 들어갈 수 없다.
- ㉡. (나)에 '을과 달리 갑은 경찰서장이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가 들어가면, ㉠, ㉢에 모두 '법적 판단 내용이 옳지 않음.'이 들어갈 수 있다.
- ㉢. ㉠에 '법적 판단 내용이 옳음.'이 들어가면, ㉢에 '법적 판단 내용이 옳음.'이 들어갈 수 있다.
- ㉣. ㉢에 '법적 판단 내용이 옳지 않음.'이 들어가면, (가)에 '을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면 폭행 피해자 측은 을의 감독 의무자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18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총회, 안전 보장 이사회, 국제 사법 재판소 중 하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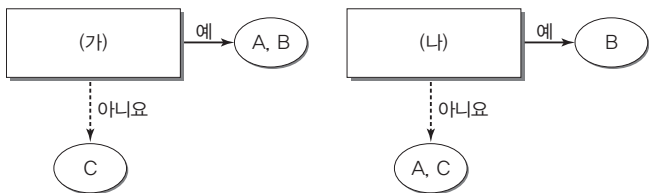
교사: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C에 대해 발표해 보세요.
 갑: A는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입니다.
 을: C는 A와 달리 B의 구성원을 선출합니다.
 병: A의 10개 이사국은 임기 2년이며, C에서 선출됩니다.
 정: B는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에 해당합니다.
 교사: ① 2명만 옳게 답했어요.

보기

- ㄱ. '을, 병'이 ①에 해당할 수 있다.
- ㄴ. ①이 '갑, 정'이면, C의 표결 방식에는 힘의 논리가 적용된다.
- ㄷ. ①이 '병, 정'이면, A는 B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ㄹ. ①에 해당하는 학생과 상관없이 B는 국가 간 분쟁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강제적 관할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9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임.) [3점]



- ①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이 B의 사례라면, 우리나라에서 주요 B에 대한 체결 동의권은 국회가 갖는다.
- ② (가)에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재판의 준거로 활용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③ (가)에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을 가지는가?'가 들어가면, C의 예로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 있다.
- ④ (나)에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보편적 원칙인가?'가 들어가면, (가)에 '주로 문서의 형식으로 존재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⑤ '국내 문제 불간섭'이 C의 사례이고, (나)에 '국제기구가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가 들어가면, A는 국제 사회에서 오랜 기간 반복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법 규범으로 인정된 것이다.

2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회사에 다니는 갑과 을은 모두 ○○ 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어느 날 ○○ 회사는 갑과 을을 해고하였는데, 갑과 을은 모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갑은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을은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이유로 해고되었기 때문이다. 갑은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을의 해고에 대해서는 ○○ 회사가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을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 ① 갑의 경우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② 갑의 경우 ○○ 회사의 노동조합은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었다.
- ③ 을의 경우 중앙 노동 위원회는 을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④ 을의 경우 ○○ 회사는 중앙 노동 위원회의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⑤ 갑과 달리 을은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 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 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23063-0237

1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에 ‘학급에서 특색 활동 운영 방식을 논의하여 결정하는 활동’이 들어갈 수 있다.
- ② (나)에 ‘국회에서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하는 입법 활동’이 들어갈 수 있다.
- ③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에 비해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난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 ④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국가의 정치 현상과 사회 집단의 정치 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 ⑤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 23063-0238

2 다음 사례에서 갑, 을이 공통적으로 침해받은 기본권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직장인 갑은 퇴근 후 옥외 집회를 주최하려고 관할 행정 기관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관할 행정 기관은 해가 진 후 옥외 집회를 하겠다는 갑의 신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허하였고, 갑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 일시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 공무원인 을은 공직 후보자로서 병역 사항을 공개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 기관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관할 행정 기관이 병역 사항과 함께 을이 알고 싶지 않았던 질병명과 심신 장애 내용까지 함께 공개하여 을은 사생활의 비밀이 예외 없이 공개 당했다.

- ①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 ②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절차적 권리이다.
- ③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보장되기 시작한 권리이다.
- ④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이다.
- ⑤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이다.

▶ 23063-0239

3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조세 행정에서도 법치주의는 적용되며, 이는 조세 징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적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법치주의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A에 그친다면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에 의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세 징수가 정당화될 수 있다.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 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B를 의미한다. 헌법 제 38조, 제59조가 선언하는 조세 법률주의도 이러한 B를 뜻하는 것이므로 비록 과세 요건이 법률로 명확하게 정해진 것일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것이 아니고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 이념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헌법 재판소는 판시한 바 있다.

- ① A는 통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법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② B는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형식과 절차만을 강조한다.
- ③ A는 B와 달리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 제도를 강조한다.
- ④ B는 A와 달리 독재 체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⑤ A, B는 모두 국가 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4 우리나라의 헌법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헌법을 통해 국가 재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헌법 제54조는 행정부에 의해 편성·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을 A에 부여하고 있다. 헌법 제58조는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도 정부가 미리 A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99조에서는 B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차년도 A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결산에 대한 최종적인 심의·확정 권한이 A에 있기 때문이다.

- ① A는 국무 위원 임명 제청권을 가진다.
- ② B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진다.
- ③ B는 A에 소속되어 있지만 독립적인 활동을 한다.
- ④ 대통령은 A의 동의를 얻어 B의 장(長)을 임명한다.
- ⑤ B는 국정을 감시·통제하는 국정 감사권을 통해 A를 견제한다.

5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에 대한 대화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A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원리입니다.
 을: A는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입니다.
 병: (가)
 교사: A에 대해 1명만 옳은 내용을 발표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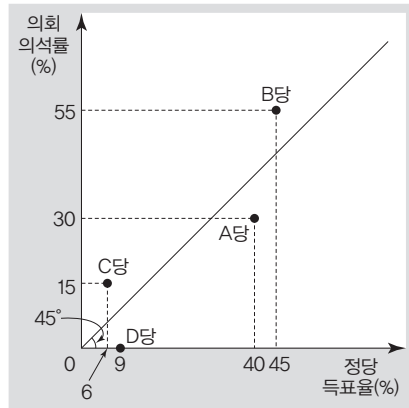
- ① 옳은 내용을 발표한 학생이 갑이라면, A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 ② 옳은 내용을 발표한 학생이 을이라면, A는 문화 국가의 원리이다.
- ③ A가 평화 통일 지향이라면, (가)에 'A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북한과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려고 합니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④ A가 복지 국가의 원리라면, (가)에 'A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를 시행합니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⑤ (가)에 'A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려고 합니다.'가 들어가면, 옳은 내용을 발표한 학생은 갑이다.

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 의회는 지역구 의원 300인으로만 구성된다. 갑국은 300개의 선거구에서 선거구마다 최다 득표자 1인을 의회 의원으로 선출한다. 그러나 차기 선거를 앞두고 현재의 의원 정수(定數)는 유지하되, 다음과 같은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 개편안 •
 모든 의회 의원을 비례 대표로 선출하고, 비례 대표 의석 배분은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림은 현행 선거 제도에서 실시된 갑국의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다.



* 정당은 A당~D당만 존재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없으며, 투표율은 100%이고, 무효표는 없음
 ** 선거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유권자는 현행 제도에서 자신이 지지한 후보자가 속한 정당에 투표함.

- ① 현행 선거 제도는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한다.
- ② 현행 선거 제도에서 B당, C당의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의 의사는 과소 대표되었다.
- ③ 현행 선거 제도에서 D당은 의석 할당 요건인 봉쇄 조항 때문에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였다.
- ④ 현행 선거 제도 적용 시보다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A당의 의석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다.
- ⑤ 현행 선거 제도와 개편안 모두에서 B당은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 23063-0243

7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A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지는 내용의 입법 청원을 하였다. 의회 선거를 앞두고 B가 발표한 공약을 분석한 A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 순환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하지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자, 이에 따라 매장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하고 있는 관련 업체 대표들이 모인 C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① A는 C와 달리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한다.
- ② B는 A와 달리 정치적 중립을 추구한다.
- ③ C는 B와 달리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며 정치적 책임을 진다.
- ④ A, B는 C와 달리 공익 실현을 중시한다.
- ⑤ B, C는 A와 달리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 23063-0244

8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중 하나임.)

서술형 평가

A와 구별되는 B의 특징을 세 가지 쓰시오. (각 서술별로 채점하며, 옳은 서술 1개당 1점, 총 3점)

답안	점수
1. 의회 의원이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다. 2.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진다. 3. (가)	2점

- ① A에서는 의회 의원 선거와 행정부 수반 선거가 별도로 실시된다.
- ② B에서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 ③ A에서는 B와 달리 의회가 행정부 수반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진다.
- ④ B에서는 A와 달리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 ⑤ (가)에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 23063-0245

9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주민 투표법

제7조(주민 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 자치 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은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9조(주민 투표의 실시 요건) ①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주민이 제2항에 따라 주민 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2. ㉢지방 의회가 제5항에 따라 주민 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3.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기

- ㄱ. ㉠은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에 해당한다.
- ㄴ. ㉡은 법령 및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규칙 제정권을 가진다.
- ㄷ. ㉠의 제정 권한은 ㉢에 있다.
- ㄹ. ㉡은 ㉢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확정권을 가진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국의 의회 의원 정수는 총 8명이며, 8개의 선거구에서 단순 다수 대표제로 선출하고 있다. 현행 선거 제도에서 정당은 A당~D당만 존재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없다. 표는 갑국의 최근 선거 결과이다.

<갑국의 최근 선거 결과>

(단위: %)

구분	A당	B당	C당	D당
선거구1	25	15	35	25
선거구2	40	20	30	10
선거구3	50	5	10	35
선거구4	15	50	10	25
선거구5	30	10	10	50
선거구6	10	10	60	20
선거구7	15	10	55	20
선거구8	30	10	40	20

*투표율은 100%이고, 무효표는 없으며, 홀수 선거구의 유권자 수는 각 100명씩이고, 짝수 선거구의 유권자 수는 각 200명씩임.

표는 갑국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상황 1>	의회에서 ○○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경우
<상황 2>	현행 선거 제도를 변경하여 선거구 1-2, 3-4, 5-6, 7-8을 통합하여 선거구를 4개로 축소하고, 선거구당 2명의 의회 의원을 득표순으로 선출하는 개편안을 도입하여 선거가 이루어진 경우

*<상황 1>에서 갑국의 법률 개정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고, 의결 시 의회 의원들은 모두 출석하여 투표하며 기권과 무효표는 없음.
 **<상황 2>에서 정당은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하고, 개편안을 도입하여 이루어진 선거 결과는 최근 선거 결과를 토대로 판단함.

보기

- ㄱ. 현행 선거 제도에서 <상황 1>인 경우 C당 소속 의원들만 찬성한다면 가결될 수 있다.
- ㄴ. <상황 2>의 개편안에 대해 C당은 지지하지만, D당은 반대할 것이다.
- ㄷ. <상황 2>인 경우 선거구 간 인구 편차는 없어졌지만,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한다.
- ㄹ. <상황 2>에서 <상황 1>인 경우 A당과 B당 소속 의원 모두가 반대해도 가결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1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례로 옳은 것은?

갑(35세): 저는 얼마 전 고가의 노트북을 판매하기 위해 A와 계약을 했습니다. A는 17세이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데, (가) 라면, 계약의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을: 그런 경우라면 A에게 계약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 당시 A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
- ② 계약 당시 A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
- ③ 계약 당시 A가 의사 무능력자였음이 밝혀진 경우
- ④ 계약 당시 A가 속임수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있었던 것처럼 믿게 한 경우
- ⑤ 계약 이후 A의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는 경우

12 민법의 기본 원칙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계약을 누구와 체결할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체결할 것인지 계약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원칙
 (나)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

- ① (가)에 따라 소유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 ② (가)에 따라 국가는 개인 소유의 재산에 함부로 간섭하지 못한다.
- ③ (나)는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한다.
- ④ (나)에 따르면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진다.
- ⑤ (가)는 (나)로 대체되면서 우리나라 민법에서 폐기되었다.

▶ 23063-0249

13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이 소유한 ○○ 건물을 임차하여 식료품 매장을 운영하던 을은 식료품 배달을 위해 병을 고용하였다. 병은 식당을 운영하는 A가 을에게 주문한 식료품을 배달하던 중 부주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B를 치어 상해를 입혔다. 이 사고로 A는 식료품을 배달받지 못하여 식당을 운영할 수 없었다. 한편 을의 식료품 매장의 천장이 무너져 매장에 있던 손님 C가 다쳤고, C의 상처는 지속적 치료 이후에도 흉터로 남았다.

보기

- ㄱ. 을이 B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병은 B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ㄴ. 을이 병에 대한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할 경우, 을은 B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ㄷ. A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을이 아닌 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을이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갑은 C에게 공작물 소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23063-0250

14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을과 법률혼을 한 후 자녀 A를 낳았다. 5년 후 갑과 을은 성격 차이로 ㉠협의상 이혼을 하면서 A는 을이 키우기로 하였다. 이후 을은 병과 법률혼을 하였고, 병은 A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그 후 A가 15세일 때 병이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 ① ㉠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시키는 이혼에 해당한다.
- ② ㉠으로 인해 양육권을 갖지 못한 갑은 가정 법원에 청구해야 A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가진다.
- ③ ㉡에 의하여 을과 A 사이의 친자 관계는 종료된다.
- ④ ㉢으로 A는 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 ⑤ ㉢ 이후 A에 대한 친권은 갑, 을에게 있다.

▶ 23063-0251

15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갑은 상고심에서 ○○법 □□ 조항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기각하자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갑은 자신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려면 국내법을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약에 의하여 처벌을 가중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마라케시 협정에 의해 관세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가중되고 있지만, 해당 조약은 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되었으므로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① ㉠을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기 위해서는 갑의 신청이 필수 요건이다.
- ② 갑이 청구한 ㉡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에 해당한다.
- ③ ㉢과 같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은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④ 헌법 재판소는 ㉣에 따른 성문의 법률에 ㉡이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 ⑤ ○○법 □□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판단이 달랐다.

▶ 23063-0252

16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때리려는 을을 피하고자 을의 목살을 잡는 과정에서 경미하게 을에게 상해를 입혔고, 법원은 갑의 행위가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 병이 함께 사는 정을 폭행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병이 평소 정신 분열증 증상이 있어 치료를 받고 있고, 범행 당시 심신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다고 보아 법원은 병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부과하였다.

- ① 법원은 갑의 행위가 긴급 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 ② 법원은 병의 행위가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 ③ 병이 부과받은 대안적 형사 제재는 유죄인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 ④ 법원은 병과 달리 갑에게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책임이 없다고 보았다.
- ⑤ 법원은 갑의 행위와 병의 행위가 각각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과 을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았다. (가)는 갑에 대해 확정된 결정이고, (나)는 을에 대한 1심 재판의 결과이다.

(가)

(나)

피의자: 갑
 주문: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불기소 이유
 • 저작권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피고인: 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① (가)로 인해 갑은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뀐다.
- ② (가)의 결정 주체는 갑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 ③ (나)에 대해 을은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다.
- ④ (나)의 판결이 확정되면, 을은 유예 기간 동안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면소된다.
- ⑤ (가)와 (나)의 결정 주체는 모두 법관이다.

18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국제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을: 국제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력 증강, 공동의 적에 대한 동맹을 통해 국가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기

- ㄱ. 갑의 관점은 국제 사회가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된다고 본다.
- ㄴ. 을의 관점은 냉전 체제에서의 군비 경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 ㄷ.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한 국제 평화 유지를 강조한다.
- ㄹ.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국가 간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강조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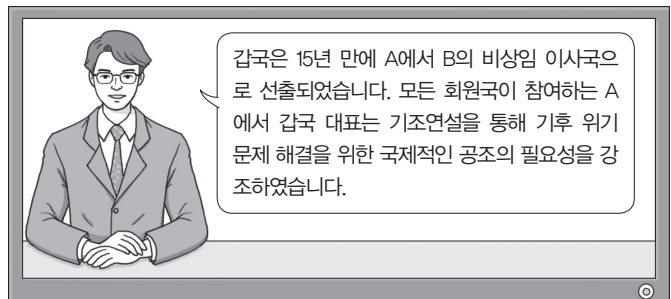
19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병은 19세 이상으로 ○○ 회사의 사장 A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표는 갑~병의 노동권 보장 상황을 질문과 답변으로 구분한 것이다.

구분	갑	을	병
1. 법정 최저 임금 미만으로 시간당 임금을 정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아니오
2.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아니오	예
3. 직장 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예	아니오
4. 사용자가 계약 시 정한 날짜가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아니오	예	예

- ① 갑이 체결한 근로 계약은 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
- ② 을이 속한 노동조합은 을과 달리 을에 대한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노동 위원회에 권리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 ③ 병의 연장 근로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 계약 시 정한 통상 임금만 지급해도 근로 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④ 갑은 을과 달리 근로 3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경험하였다.
- ⑤ 을과 병은 근로 감독관에게 임금 체불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20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A는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이다.
- ② 갑국은 B의 의사 결정 과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B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군사적 개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④ A의 표결 방식은 B와 달리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현실주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 ⑤ B의 이사국은 모두 A에서 2년마다 선출된다.